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약속
드립니다!



5대 비전·20대 핵심 추진과제



공약집 해설(intro): 5대 비전 해설

4기 민주정부는 대전환의 시대, 국가적 투자를 통한 전환성장과 사회 속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성장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실현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패권경쟁 역시 치열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합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야 합니다. 국가 주도의 대대적인 투자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계속되는 저성장 속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우리 사회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기회가 실종된 저성장 사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세대와 성별 간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기회의 총량을 늘려야 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되찾아드려야 합니다. 불공정을 바로잡고 불평등을 완화해서 대한민국이 지닌 자원과 역량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해 삶의 토대를 마련해드려야 합니다.

4기 민주정부는 위기극복의 길, 경제성장의 길, 민생회복의 길, 개혁완성의 길, 국민통합의 길로 담대하게 가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국가적 투자를 통한 전환성장과 사회 속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성장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5대 비전 해설

Ⅰ 신경제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대한민국 지속 성장의 길을 내겠습니다.

4기 민주정부의 신경제 전략은 대한민국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산업을 혁신해 대한민국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고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는 '디지털 대전환', 전국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에너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뉴노멀의 새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육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Ⅱ 공정성장

용이 나던 개천은 말라버렸고, 계층이동의 사다리는 넘어졌습니다. 불공정이 초래한 비효율과 절망이 오랫동안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가 자원이 최적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불공정을 해소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제질서를 구축해 사람도 기업도 의욕적으로 도전하는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갑과 을 사이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을 실현하겠습니다.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 경제적 기본권 보장으로 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국토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Ⅲ 민생안정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4기 민주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민생정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저앉은 국민의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돌봄과 의료 영역의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Ⅳ 민주사회

정치인은 국민께서 위임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주권자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오용하는 기득권 정치부터 제대로 개혁하겠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고, 일하는 국회·민의를 대의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 세대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정치세력과 연대해서 국민내각으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국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환골탈태하여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Ⅴ 평화안보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과 북 모두의 상생을 도모하는 실용적인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현대전의 양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낡은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걸맞도록 국익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의 길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을 통한 '국민 대도약 시대',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제대로 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당대표 **송영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당대표 송영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는 상당한 불편과 피로감 속에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충분치 않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생업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모든 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방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숨은 영웅'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차근차근 성과를 만들어왔습니다. 지난해 무역과 수출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5천 달러를 넘어 이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K-POP, K-콘텐츠는 글로벌 브랜드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수처법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고, 한반도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눈부신 성과를 이룬 만큼 성장의 과실을 공정히 분배했는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습니다.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지 않은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께 분노를 안겨드렸습니다. 민주당에 입법·행정·지방자치의 많은 권한을 주었지만 오히려 기득권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과 원망도 있습니다.

민생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에 대해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습니다. 중단 없는 발전과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정책, 정치교체의 의지를 담은 공약으로 다시 한 번 국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환의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갈등과 분열로 퇴보하고 침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시점에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께 제시하는 비전은 '대한민국 대전환'입니다. 코로나19, 부동산, 일자리 부족, 기후변화, 지방소멸, 구태정치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공약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집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설계도'이자 '국민 대도약 시대'를 약속하는 '대국민 선언서'입니다.

지금 이 '골든타임'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산업 대전환, 과학기술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교육 대전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대전환, 그리고 여의도정치를 확 바꿀 정치교체 대전환을 약속드립니다. '무한책임 부동산' 정책의 과감한 실천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행 공약', '소확행 공약', 그리고 국민의 지혜를 모은 '국민제안 공약'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내실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확실한 미래비전을 가진 정책정당, 국민의 상식과 원칙을 따르는 책임정당,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는 유일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절박한 마음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을 통해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잘 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약속과 다짐을 지켜봐 주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2월

Contents



I	5대 비전 해설	4
	발간사	
	•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송영길	6
II	삶의 터전별 공약	10
III	대상별 공약	21
IV	정책공약 5대 비전별 분류	
	• I. 신경제	52
	• II. 공정성장	116
	• III. 민생안정	178
	• IV. 민주사회	316
	• V. 평화안보	340
V	소확행·명확행·SNS발표 공약	370

민주네

마을



전국민이 행복한 삶의 터전별 공약





우리집



☑ 내 집 마련을 위한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 전국 총 311만호의 주택(기존 정부 발표 206만호+105만호 추가)을 신속히 공급
 -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
 - 기본주택(임대형)은 저렴한 임대료·고품질·장기간 거주 주택으로 80만호 공급
 - 기본주택(분양형)은 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른 다양한 선택 기회 부여를 위해 누구나집*, 건물분양형,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공공분양형으로 60만호 공급
 - * 사전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 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 공유
 - 택지공급가격기준 변경(감정가격→조성원가), 분양가상한제 민간 적용, 분양원가 공개 확대하여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
 - 신규 공급물량의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
 -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호는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

☑ 재개발·재건축, 신속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 신속협약제 도입과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 대폭 단축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개선
- 공공재개발 시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 공공기여 비율 탄력적 조정
- 고도제한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에 생활형 사회간접자본 등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 강화

☑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으로 국민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과세 부담 완화
- 부동산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항목에 대한 제도 개선

☑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이직, 취학 등 일시적 2주택자이지만 중부세가 부과된 사례 구제
- 상속지분으로 다주택자가 되어, 중부세가 부과된 사례 구제
- 투기 목적이 아닌 중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대한 중부세 중과사례 구제
-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 중부세 납부 연기

☑ 주거취약계층 사회주택과 중산층 공동체주택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주거취약계층 수요를 반영한 사회주택 등 공익적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
- 공동체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중산층 주거의 새로운 모델인 공동체주택의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 혼인 외 독립·동거·비혼·이혼·미혼출산 등에 따른 다양한 주택수요 포괄하도록 주거정책 개편
- 인가구 주택수요를 반영한 공유형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학 교



☑ 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사교육 경감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및 교육 플랫폼 구축
-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 유아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유아 및 보육의 단계적 통합 추진
-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 컨트롤타워 신설
-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하교제 도입, 초등돌봄교실 저녁 7시까지 확대

☑ 안전하고 획기적인 공간 혁신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기본학력 보장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급당 학생수 20명 목표 단계적 추진
- 미래교육, 학생친화형 공간 혁신을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확대
- 지역사회와 협력한 학교복합시설 확대

☑ 세계를 선도하는 학문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로 대학원 연구 역량 강화
- 기초학문 분야 집중 투자
- 대학의 국제화 지원
- 학문의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학술연구 평가·관리 체제 구축



국 회



☑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 국회의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견제장치 강화
-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추진

☑ 특권 대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징계심사 신속처리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및 무노동 무임금법 도입
- 국민이 보다 쉽게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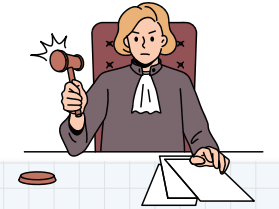
☑ 미래를 이끌 청년들의 정치참여와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 각급 선거 최초 출마 만 34세 이하 청년후보자의 기탁금 폐지 등 청년 후보자들의 도전 장벽 제거 추진
- 청년후보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 정당의 청년 후보자 추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청년추천보조금제 도입
- 성별·지역을 고려한 청년 공천 의무비율제 도입
- 청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 담당 수석비서관·청년 특임장관 신설
- 각 부처 청년예산에 실질적인 '총액배분 자율편성' 보장, 국민참여예산에 청년참여예산 쿼터제 적용,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 강화
- 청년참여단 개편으로 '청년의회' 상설화

☑ 대전환 핵심 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전환 핵심 의제 논의 추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의 결정 실질화 제고

법 원



☑ 국민 중심의 재판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질화
-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사법 편의성 강화
- 취약계층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인지대 등 소송비용 경감방안 마련

☑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겠습니다.

- 형사사건의 국민참여재판 개선
- 형사사건 이외의 재판(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대해서도 국민참여재판 적용 추진
-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한편, 재판부의 과중한 업무 부담 해소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확대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무죄 판결 시 검사 측 항소 제한

☑ 수요자 중심의 '원스탑 법률조력'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국가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대국민 법률지원 서비스를 연계·통합하고 서민들에 대한 소송구조를 강화
-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 제공
- 국선변호 서비스 개선



경찰서·소방서

☑ 우리 사회 영웅, 국가가 지켜드리겠습니다.

- 소방·경찰 등 제복입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공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공상추정제도 도입 추진

☑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분권을 강화하여 경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국가경찰위원회를 경찰에 대한 실질적 통제기구로서의 권한과 역할 강화
-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된 '경찰청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자치경찰제 위상과 역할 강화
-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및 인사·예산의 독립성 강화

☑ 경찰·소방 책무에 상응하도록 처우와 보수를 개선하겠습니다.

- 경찰, 소방, 해경 직군을 공안직 보수체계 편입

☑ 국민안전 제고를 위한 최고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보다 스마트한 현장 대응
- 안전약자에 특화된 소방서비스 제공

☑ 소방관의 건강과 복지를 국가가 더 책임지겠습니다.

-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로 규정
- 소방관 직무스트레스 및 정신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힐링센터 설치
- 코로나 19등으로 출동이 많은 119구급대 4조 2교대제 도입으로 119구급서비스 제고

군 대



☑ 군장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병사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 이상 지급
- 병사 통신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 확대
- 군복무 중 대학 취득학점 확대 및 학점인정제 참여 대학 확대를 통해 '최소 1학기 군에서 이수'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 e-book 포인트 지급 및 태블릿PC 사용 허용

☑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2030세대의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및 공감형 복무여건 현대화 추진
- 군대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 및 장병 인권 보호

☑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국민개병제 하에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에서 택일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 부사관 우수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충원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 징집병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
- 학군장교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2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

☑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군 복무 중 다친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상기준 완화, 상이등급 미달자 지원제도 추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기준 개선
-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한 의무복무자에 대한 정부·지방정부 청년지원 사업 우대
- 성폭력 피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강화
- 군복무 호봉인정 의무화

☑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강군을 건설하겠습니다.

- 국방예산 효율화
- 무기체계 첨단화 추진
- 스마트 강군을 위한 대통령직속 민·관·군 국방혁신기구 설치

☑ 북핵 및 WMD 대응 억제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핵위기 시 협의절차 구체화 등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 추진
- 북핵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첨단 억제전력 강화

☑ 우주시대를 선도하는 국방 우주전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대통령직속 국가우주산업전략본부와 연계하여 국방 우주전력 강화 추진
- 국가 우주방위를 전담할 우주사령부 창설 추진



정류장



☑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도시내 출퇴근 30분대, 메가시티내 1시간대, 전국 2시간대 대중교통 이동 보장
- 막힘이 없는 전국 대중교통 통합연계교통망 구축
-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철도 확장 기반 마련

☑ 누구나 이동이 자유로운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교통약자의 교통기본권,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등 마련
- 광역버스 등 생활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지원 확대
- 대중교통취약지역에 버스와 택시를 결합한 콜 기반 대중교통수단 대폭 확대
-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장애물 없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확대, (전기)저상버스 도입 대폭 확대

☑ '안전한 미래로(路)' 나아가겠습니다.

- 빅데이터, AI기반 교통안전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 추진
- 어린이 중심의 교통안전 교육시설 확대 및 국가책임 강화
- 이륜차 관리체계 구축 및 보험료 체계 개선 추진
- 자동차사고 과실산정, 보험·정비업체 투명성 제고로 운전자 보험료 부담 완화 추진

☑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음주시동 잠금장치 의무화 및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치료 의무화
- 습관적 과속(기준속도 초과 40km이상 / 연3회) 및 난폭·보복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기준 강화 및 재취득 금지기간 확대
-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 및 소음단속 강화
- 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위 확대 및 보호구역 내 감시카메라,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 안전시설 확충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법제도 정비

방송국



☑ 품격있는 콘텐츠 제작·공급을 위한 외주제작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방송사업자와 제작자(사)간 공정 거래 질서 확립
- 건전한 중소 제작사 지원 확대

☑ 시청자인 국민 중심의 방송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 시청자 권익 확대
- 라디오방송 서비스 환경 혁신

☑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방송광고 등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지상파방송 광고제도 재정비
-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

☑ 지역·중소방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기금을 통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 정부광고 중 방송광고부문의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 결합판매 방송사 및 광고주에 대한 혜택 부여
- 방송의 지역성 구현 지원 강화

병원



☑ 각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고, 필수의료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추진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
- 지역에 우수한 공공병원을 신·증축하여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 공공의료 역할 수행하는 민간병원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 확대

☑ 꼭 필요한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 공공·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 의대 정원 합리적 증원 및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의학교육 질 향상과 환자안전 강화
- 필수 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
-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으로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대폭 확충
-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
-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의료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

☑ 간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하겠습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 확대 및 10만 병상 확보
- 요양병원 확대 시행을 위한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모델 정립
- 지역별 참여병원 지정·할당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역격차 해소
- 간병인력 양성제도 수립 및 간호·간병인력 처우개선
- 교육전담간호사제와 교대근무방식의 개선을 통한 간호 환경 대폭 개선
- 불필요한 입원, 사회적 입원 등 방지대책 병행 추진

☑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모두가 차별 없는 건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추진
- 아동 및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 전면 확대로 구강건강 향상
- 적정수준의 수가체계를 마련하여 동네병원 활성화와 환자부담 최소화
- 치아 임플란트, 탈모 치료,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보험재정 악화시키고 대리수술과 과잉진료 일삼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완전히 척결하겠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 불법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 포상 강화
- 불법개설자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

대상별 공약





1. 어린이·청소년

☑ 돌봄 국가책임제를 통해 아동, 영유아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시키겠습니다.

- 초등 돌봄서비스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하고 지급 연령을 확대하겠습니다.

- 단계별 아동·청소년수당 연령 확대(만 0~18세)

☑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중심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및 미혼부 출생신고 간소화 제도 마련
- 국가의 아동 보호 책임 강화
- 아이들의 몸과 마음 건강 증진
- 디지털 세상 속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 보장
- 위기 아동 발굴 및 학대로부터 아동 보호

☑ 코로나19 세대의 교육 결손을 회복하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세대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회복을 위한 '교육회복 사업' 확대
- 학력·학벌 차별금지 제도 마련
- 교육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학생 및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 사람 중심의 디지털 미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디지털 교육 정착을 위한 1인 1 태블릿 기기 확대 보급(초등 4학년부터)
-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SW, AI, 빅데이터 교육 강화

☑ 개방·융합형으로 직업교육 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체제 마련
- 직업계고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 대학입시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대입 공정성 위원회' 설치 및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
- 사교육 의존도 높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
- 대입 전형 선발 인원 합리적 조정으로 학생선발의 공정성 제고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 아동 강간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
-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처벌 강화
-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지원 및 정보 보호강화
-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제도 개선

☑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모든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대 구입비 지원' 및 건강검진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 추가
- 모든 남녀 청소년 대상 HPV(사람 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지원



2. 청년

☑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전국에 31만 호 주택을 신속 공급하고, 신규 공급 물량 30%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
 -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 호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
-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금융 제한 및 거래세 부담 완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LTV 최대 90%까지 인정
 - 취득세 부담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 / 6억 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
- 청년에게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주택 공급
 - “누구나집형”, “지분적립형” 등 청년 주거 선택권 보장
- 월세 주거비 부담 완화
 - 월세 세액공제 확대 2달치 월세 지원 및 최대 5년 이월공제 제도 도입
 - 전세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청년 주거 취약층 대상 임대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 관리 강화
 - 원룸·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청년 대상 불투명 관리비, 불법건축물, 불공정 임대차계약 관행 개선

☑ 미래를 이끌 청년들의 정치참여와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 각급 선거 최초 출마 만34세 이하 청년 후보자의 기탁금 폐지 등 청년 후보자들의 도전 장벽 제거 추진
- 청년후보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 청년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선거비용 전액 보전
 -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미만인 경우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정당의 청년 후보자 추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청년추천보조금제 도입
- 성별·지역을 고려한 청년 공천 의무비율제 도입
- 청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 담당 수석비서관·청년 특임장관 신설
- 각 부처 청년예산에 실질적인 ‘총액배분 자율편성’ 보장, 국민참여예산에 청년참여예산 쿼터제 적용,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 강화
- 청년참여단 개편으로 ‘청년의회’ 상설화

☑ 청년의 기본적 삶,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청년기본소득) 2023년부터 만19세~29세 청년 대상 연간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
- (청년기본금융) 청년에게 장기간 저렴한 금리로 최대 1,000만 원 기본 대출, 500만 원~1,000만 원 한도 저축 시 일반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기본저축

☑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질 높은 교육 훈련을 제공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기관별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 추진
- 정부·지자체·기업 협력 양질의 직업훈련 모델 개발
- 국민 내일배움카드 청년지원금 2배 증액하고 다양한 직업훈련기관 확대
- 공정 채용 법제화 및 대상 확대, 채용 과정상에 사생활 침해와 성차별이 없도록 법률 개정
- 고용보험 수급 기준 개선하여 청년 자발적 이직 시 생애 한 번 구직급여 지급
- <청년 취업면접 완벽 지원>, <경력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통한 구직자 권리 보장

☑ 촘촘한 맞춤형 청년복지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
 - 지방정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통합 관리체계 마련 및 정부지원 강화
 - 진단 전 초기 단계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 대상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확대
- 구직 단념 청년(NEET)에게 맞춤형 ‘청년 위기 극복 11 프로젝트’ 시행

☑ 대학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대학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 부모 소득·재산 상관없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지원 및 대학생 이용대상 확대
-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 확대 및 생활비 대출 한도 증액 추진
- 국가장학재단 연간 생활비 대출 한도액 상향 등 현실화



2. 청년

☑ 전환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인력을 폭넓게 양성하겠습니다.

- 청년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강화

☑ 과감한 벤처투자로 '혁신 창업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 성공한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 청년 신산업 위주 기술·경영혁신형 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 개막

☑ 견고한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 창업에만 전념토록 준비-실행-성장단계에서 창업기업 부담 완화
 - 청년창업가 부담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 청년·미래세대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 청년 평화경제 활성화 추진



3. 신혼·맞벌이부부·중년

☑ 일하는 모든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도 도입
- 불안정 일자리 노동자 대상 육아휴직 제도 확대
- 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보장제 도입
-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및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 강화
- 맞벌이 부부 영유아 돌봄서비스 세제 지원 추진

☑ 유아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유아교육 및 보육의 단계적 통합 추진
- 국공립유치원 비중 상향 및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사 동등 처우 노력
-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도입, 초등돌봄교실 저녁 7시까지 확대

☑ 남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난임시술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및 정서적 지원 강화
- 임신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위험회피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현실화
-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
-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단위 확충 및 시설·서비스 표준화

☑ 서비스 수혜자가 참여하고 이웃이 돌보는 공동체 돌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학부모 등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형 아동돌봄시설 확대

☑ 장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 만 60세 퇴직 이후부터 공적 연금 수급 전까지 연 120만원 장년수당 지급

☑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 '평생학습 계좌제' 도입
- 평생학습 시민대학 체제 구축
-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



4. 어르신

☑️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형평성있게 지급하겠습니다.

-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을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공제 도입 추진
- 부부 동시 수급에 따른 감액규정 폐지

☑️ 어르신을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 80만개인 어르신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40만개로 확대
- 민간형 어르신 일자리 및 지역 상생 활동사업 전국 확대

☑️ 어르신·장애인의 주거·일상생활·복지 지원을 동시에 해결하는 지원주택을 확충하겠습니다.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형태의 지원주택을 도심지역에 대규모 건립, 원룸 형태의 주거공간을 독거 또는 부부 어르신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
- 어르신 등이 도심에 위치한 지원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가족(자녀)과 지인 등과 수시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비대면 진료 체계 확립과 방문 진료 활성화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 주치의를 통한 비대면진료 및 협진체계 확립
- 거동불편 환자 대상 방문진료 활성화로 '집으로 찾아가는 병원' 사업 확대
- 공공 심야 약국으로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 확대

☑️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의료와 돌봄 서비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사는 곳에서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의료·재활 등 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재가(방문)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의료·재활 등 서비스 대폭 확충
- 의료나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아동·병약자 등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주거시설 및 공공 의료·돌봄 서비스 인프라 확충
- 지역사회 의료·돌봄 서비스 One-Stop 신청·연계·공급체계 구축, 돌봄 매니저(care manager) 채용 추진

☑️ 국가를 위한 헌신, 더 깊고 강하게 예우하겠습니다.

-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보상 확대 추진
- 보훈심사 전자심의제 확대로 보상심의 접근성 제고
- 보훈대상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신개념 예방형, 맞춤형 보훈의료체계 구축
-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 보훈대상자의 진료 접근성 확대
- 골프장 등 국가부지에 병원·요양원·임대주택·체육시설이 어우러진 보훈복지 종합타운조성 추진 검토

☑️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시설개선비 지원 확대
- 경로당 전산회계프로그램 지원 및 여가 프로그램 다양화



5. 여성

☑ 임금·채용 등 성차별과 성희롱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계획 수립
- 노동위원회 산하 (가칭)고용공정위원회 설치
- 지방고용청 내 고용평등 전담부서 설치
-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 및 강화
-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 및 대국민 공표제 도입
- 전국 광역단위에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지원 기관 설치 추진
- 직장 성희롱 행위자 제재 강화

☑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데이트폭력 처벌 법제화
-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스토킹처벌법」 개정, '온라인 스토킹' 등 스토킹 범죄 유형 확대
- IT기술을 활용한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자 접근 차단 등 선제 조치 강화
- 젠더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 체계 개선
- 성폭력 범죄의 양형 감경 요소 개선 및 성폭력 2차 피해 보호 강화
- 수사 과정, 민·형사 재판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 보호 강화

☑ 일상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 디지털성범죄 대응 컨트롤타워 및 광역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
- 범죄 악용 우려 있는 변형카메라 관리 강화
-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기술개발 투자
-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음성·영상에 '표시의무제도' 도입
- 전국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 일하는 모든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도 도입
- 불안정 일자리 노동자 대상 육아휴직 제도 확대
- 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보장제 도입
-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및 아버지의 육아휴직 참여 강화
- 맞벌이 부부 영유아 돌봄서비스 세제 지원 추진

☑ 남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모든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대 구입비 지원' 및 건강검진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 추가
- 모든 남녀 청소년 대상 HPV(사람 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지원
-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 피임,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난임시술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및 정서적 지원 강화
- 임신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위험회피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현실화
-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
-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단위 확충 및 시설·서비스 표준화

☑ 사회 전반의 동등한 성별 대표성과 균형 있는 참여를 도모하겠습니다.

- 기업의 성평등 경영 지원 확대
- 군 사관학교 등 제한선발제도 개선
-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통합정부 균형내각 구성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 확대 및 성주류화 추진체계 강화
- 정치영역의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도 마련

☑ 역사 왜곡과 전시 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인권과 평화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 국무총리실 산하 '1325위원회' 설치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적·종합적 추진체계 마련
- 일본군 '위안부' 역사 왜곡 및 피해자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 수립
-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6. 장애인

☑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소득보장의 보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장애인연금을 종전 소득하위 70% 이하 1급, 2급, 3급 대상에서 3급 단일 중증장애인까지 확대 추진
- 장애인연금 지급 시 불합리한 부부 감액을 폐지
-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단계적 확대

☑ 장애인의 삶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
- 장애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 모든 장애인 이중 차별 방지 대책 마련
-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 장애 영·유아,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국가책무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친화여성전문병원 기반 마련
- 폭력피해자 쉼터 확대 및 피해구제 제도 강화
-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

☑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모두가 차별 없는 건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 아동 및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 전면 확대로 구강건강 향상
-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과 장애인 치과 서비스 확대 시행

☑ 누구나 이동이 자유로운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장애물 없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확대, (전기)저상버스 도입 대폭 확대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으로 장애인 미디어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자막방송수신기 내장형 TV 및 화면해설방송(DVS) 수신기 보급 확대
- 자막방송, 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
- 장애인 미디어 창작자 스타트업 교육 및 인프라 지원 확대
-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및 스타트업의 제작 역량 지원 확대



7. 일하는 모든 사람들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기본법’ 제정

☑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하겠습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고용안정망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 고용보험 사각지대 단계적 해소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겠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단계적으로 보편 지급
- 부모 육아휴직을 단계적으로 확대

☑ 국민 누구나 평생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전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체계 구축
-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기업훈련 지원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국가기술자격 취득 국민편의성 제고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으로 산재사고 사망률을 OECD평균 이하로 감축하겠습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 후진적 산재사망 ‘Zero’ 추진
-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 산업안전보건 감독강화
- 산업안전보건 노동자 참여 확대

☑ ‘전국민 산재보험’ 도입하여 ‘다치면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 산재보상제도의 보장성 강화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제 보호대상 단계적 확대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을 병행하는 효과적인 협력 모델 구축
- 연금수급기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속 고용정책 발굴 및 지원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과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비정규직 및 소규모기업 노동자 차별 개선
-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 비정규직·미조직노동자 이해대변시스템 구축
- 차별 없는 노동시장을 위한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 영업양도 등 사업 이전시 고용승계 제도화로 하청업체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영업양도 등 사업이전시 노동관계 승계 제도화
- 원청에 의한 하청업체 변경시 기존 하청업체가 수행하던 업무가 동일하게 계속되는 경우 노동관계 승계
- 승계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조건 변경과 부당해고 제한 추진

☑ 지역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고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기본적 제도 마련
- 전문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담할 지역중심의 고용서비스 전담기구 설립 추진



7. 일하는 모든 사람들

☑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각종 고용·노동정책 수립시 경제사회주체인 노·사의 실질적 참여 보장
-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추진
- 사업장 취업규칙을 노·사 합의 '사업장협정'으로 변경 추진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및 추진
- 주4일 또는 주4.5일제 시범실시 지원
- 가족돌봄휴가·휴직 등 지원 확대

☑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동전환으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동전환 이행 및 지원체계 구축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체계' 구축

☑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후 단계적 도입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와 개인의 협력으로 적정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 공적연금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연금개혁위원회' 운영
- 2023년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과 연계해 연금개혁안 마련하고, 국민 동의 바탕 개혁 추진
- 소득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삭감액, 단계적 축소

8. 저소득층

☑ 생활안전망을 강화하여 '빈곤 제로'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빈곤선 이상의 삶이 보장되도록 최후의 생활안전망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 최저생활 보장 수준을 절대빈곤선인 중위소득 30%에서 상대적 빈곤선인 50%로까지 단계적 상향 검토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긴급끼니 돌봄' 제도를 도입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바우처 확대
 - 소득 상실 등 긴급한 빈곤 상황 발생시 음식을 제공
 - 영양 취약계층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농식품 지원

☑ 누구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 국가를 구현하겠습니다.

- 디지털 접근권 보장
 -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기기·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스마트 기기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교육 확산
 - 디지털 소외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장·노년층 등)에 수준 단계별 SW·AI 맞춤형 교육으로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9. 소상공인·자영업자

☑️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재도전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복지 등 공제혜택 확대

☑️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임대료 분담제도 도입
-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 자율적인 임대료 분쟁 해결 절차 마련
- 임차상인의 단체협상권 보장

☑️ 상가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임대차 기간 단계적 확대 추진
-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 상가 관리비의 투명성과 편법인상 방지 방안 마련 검토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채무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생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조정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고리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대사면을 단행
-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포용적 금융 지원을 통해 서민의 삶을 촘촘하게 지원

☑️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 한국형 PPP 도입 지역화폐 확대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회복지원 기금 확대
-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마련
-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한국형 PPP)
-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
-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인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기반 확충

☑️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 온라인 플랫폼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성장 지원
- 가맹점·대리점의 상생협력 체계 조성
-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 결성 및 협상권 부여 추진
- 가맹점·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 안착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 소상공인·자영업자 창업교육 등 지원으로 전문성 강화
- 경영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신호등 개발

☑️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각 지역별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 설립
- 골목상권 특성을 고려해 지역 상권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르네상스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디지털 전환 교육 지원

☑️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공인 종합지원으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실시
- 소공인 협동조합 설립 및 공동사업 지원
-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지역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 구축



10. 중소기업인

☑️ 중소기업인이 존경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명품 중소기업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기업인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조성
-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원활한 영속성 확보 방안 마련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사다리 보강 및 확대
-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큰 폭으로 향상
- 특성화고, 계약학과(대학)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청년인력 역량 보완
- AI·반도체설계·SW 등 전문분야 중소기업 인력 양성 적극 추진
- 대기업 퇴직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전 분야 탄소중립 등을 위한 ESG 맞춤형 지원 확대
- 탄소제로 팩토리, 안전한 휴먼 팩토리 등 스마트공장 2.0 추진
- 금형·열처리·주조 등 국가핵심 제조뿌리산업 지원 강화
- 전통산업과 신산업과의 공존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및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 신기술 상품 수출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벤처혁신제품 국내 공공구매 확대 및 최저가 낙찰 관행 개선
- K-팝, K-푸드 등 K-브랜드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확보

☑️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대상 데이터 수집 분석 인프라 구축
- 안정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 센터 설치
- 연구, 생산 및 OEM등을 포괄하는 스마트 공급망(가칭 스마트 엑셀러레이션 플랫폼) 구축
- 지역별 중소기업 R&D 실증센터 구축 및 공공기관 실증 공간 개방
- K-혁신밸리 조성(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AI, 우주 등 미래기업 육성)
- 디지털, 탄소중립 등 전통기업의 미래대응 사업전환 기반 마련
-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및 투자형 R&D펀드 1조원 조성

☑️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갑을관계 시정 및 공정 경쟁질서 확보 추진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 확대 및 이행관리 강화
-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확대
- 불공정 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벌배상
- ESG 경영 강화가 하청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담전가 방지책 마련

☑️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로 우리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만들겠습니다.

- 중견기업 월드클래스+, 지역대표 중견기업 100 등 유망 중견기업의 맞춤형 지원 확대
-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내수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및 대규모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소부장 중견기업 육성
- 지역투자자와 고용을 이끄는 성장잠재력 있는 지역 중견기업 발굴

☑️ 지식재산(IP) 보호를 강화하여 글로벌 기술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특허를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한국형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으로 중소·중견기업 혁신성장 지원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우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국내외 지재산 침해·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 지식재산(IP) 중심의 국가 R&D 관리체계 마련
- 국가 R&D와 표준 연계 강화로 산업혁신을 지원하는 국가표준체계 강화
- 스타트업 특허심사 단축을 위한 인력증원 및 우선심사 강화



10. 중소기업인

☑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상생기반의 기업가정신의 확산 프로그램 강화
- 기업의 일자리 투자 확대를 위한 일자리 환류세제 강화
- 자발적 상생한 기업 제도화 및 참여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마련
- 상생협력 우수기업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상생협력 활성화 유도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 제도로 중소기업의 기본적 공정 안전망 구축
- 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강화
- 기술분쟁 조정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등 '올'의 권리보장 방안 마련
- 플랫폼 거래환경에서 중소기업의 '공정 안전망' 구축

☑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혁신제품 구매 방식을 수동적 방식에서 제품 개발 제안의 적극적 방식으로 개선
- 혁신제품 목표 구매 비율 상향 및 수의계약 확대
-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통한 제품심사, 홍보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

☑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의 선도국이 되겠습니다.

- 전자상거래 갈등조정 국제기구 설립 추진
-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피해 방지 방안 마련
- 거대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 제도 재정립

☑ 품격있는 콘텐츠 제작·공급을 위한 외주제작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방송사업자와 제작자(사)간 공정 거래 질서 확립
- 건전한 중소 제작사 지원 확대

11. 벤처·창업가

☑ 과감한 벤처투자로 '혁신 창업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해 벤처투자 10조원 달성
- 혁신적 초 연결이 가능한 클라우드 펀드·기술 플랫폼 구축
-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K-비전펀드 조성

☑ 견고한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 M&A 세제지원, 펀드조성 및 보증 확대 등 M&A 활성화 적극 지원
-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글로벌 유니콘 100 프로젝트 추진
-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지역으로 확대, 17개 지역별 옴부즈만 운영

☑ 실패도 자산이 되는 '재도전 가능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상생협력기금 등을 활용, 민관협력형 재창업기업 스케일업 촉진
- 실패를 자산화하여 재창업을 성공하는 재도전·혁신캠퍼스 건립
- 실패를 반면교사할 수 있는 실패 분석 시 플랫폼 구축
-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전 지원체계 강화

☑ 신산업 발굴과 혁신의 기회 확장을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 미래 첨단산업 영역에서 사후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 공정경쟁 분야 규제 강화와 혁신성장 분야 규제 합리화
- 규제 샌드박스과 규제자유특구를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발전
- 디지털 신산업과 전통산업 간의 갈등 조정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 추진
- 체계적인 국가 갈등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갈등관리법 제정 추진



12. 농어업인

☑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 하겠습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하여 경제적 기본권 보장
- 임기 내에 농어촌지역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을 각각 인상
- 난개발로 훼손된 농촌을 농어촌공간계획 제도화로 쾌적하게 정비
-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행복농촌) 추진으로 300개 읍면권 생활권 정비
- 소멸위기지역 1가구 2주택 비과세 범위 확대로 농촌 주택 이용 활성화
- 농촌 불법투기 폐기물 국가책임 강화로 쾌적한 농산촌 조성

☑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어촌지역 소멸방지 등 '잘 사는 어촌,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뉴딜500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촌 삶 공간 만들기 사업 시행 및 내륙 어촌 마을에 대한 강마을 재생사업 신설
- 청년 어선임대사업 신설 등 청년귀어귀촌 지원
- 어업인의 소득인정과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산 공익 직불제의 지급대상과 지급액 확대
- 어가 경영부담 감소 및 소득 안정 추진
- 연안 수변공원 조성 등 연안정비로 해안가 안전을 강화
- 해양관광지구 지정, 해양치유산업, 마리나산업, 레저관광산업 등 육성으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
- 도심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대

☑ 국가예산중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5%로 확대하고, 분권·협치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농업농촌 및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확대
- 공익형직불금 미지급 농지 중 정당한 농지는 선별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추진
- 농정 예산구조를 개편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농가직접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자치 분권형 농정을 실현하고 중앙-지방정부간 협치 제도화
-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및 설치 확대로 농업인 중심 농정 실현

☑ 식량 자급률을 높여 식량 안보 농업으로 대전환 하겠습니다.

- 식량자급률 목표 60% 달성 추진
- 공익형 직불제 내에 밀·콩 등 주요작물에 대한 '식량안보 직불제' 도입으로 식량자급 확대 추진
-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하고, 무분별한 농지전용 방지
- 밭 기반정비 면적 확대 및 밭 기계화율 제고
- 평화 이행시대 남북 농업교류 및 평화농정 실현

☑ 농촌 일손 걱정을 해결하고 청년·여성 미래 주체를 육성하겠습니다.

- '농업인력지원법'을 제정하여 농업 인력난 해소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농지확보 등 원스톱 지원강화
- 여성 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농업인 안전보험 의무가입, 특수건강검진 확대로 농어업 분야 노동 안전권 보장
- 고령(75세 이상) 은퇴농업인에게 '은퇴농 연금' 지급방안 적극 검토

☑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 탄소중립형 농업으로 대전환을 하겠습니다.

-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비중 20%를 목표로 저탄소 축산시스템으로 전환
-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주요산업인 축산 및 사료산업의 위상을 강화
- 농업인·농촌주민 공동체 주도 에너지 마을을 육성하여 농산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거점화
- 이상기후 대응 재해비상대책 수립, 재해보험 대폭 강화

☑ 농산업을 첨단기술이 함께 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 청년 미래 혁신인재 5만명을 육성하여 농업·농촌의 전환적 성장 주도
- 생명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으로 미래 농식품산업 성장 선도
- 4차산업혁명 기술로 스마트 팜·스마트 빌리지 확대
- 식품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미래 농산업을 견인할 스타트업, 혁신기업, 지역중심 전문기업 등 육성

☑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만들겠습니다.

- 숲가꾸기 확대 및 인프라 확충으로 탄소 흡수력이 큰 건강한 산림 조성
- 산촌의 고유 특성을 살리고 순환경영 위한 '산림뉴딜 클러스터' 조성 추진
- 탄소순환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강화 및 임업경영 개선
- 산림을 활용한 생애주기 산림복지 구현 및 맞춤형 산림 일자리 창출
- 남북 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및 글로벌 산림 복원 주도



13. 문화예술인

☑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예술활동 지원 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인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보장제도 강화
- 예술 진흥체계를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혁신
- 공공 기여 확대를 문화예술 창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 공연 분야 등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
-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실시와 청년 마을예술가 국가 고용
- 문화 예산 2.5% 확충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연 100만 원 지급
- 예술인 고용보험과 문화예술인 복지금고 지원 확대
- 문화예술인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 국민이 즐기고, 국가가 책임지는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겠습니다.

- 코로나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로 극복의 예술치유 프로그램 확대
- 콘텐츠의 보존, 활용, 유통을 위한 '국민 창작플랫폼' 운영

☑ 콘텐츠 산업의 혁신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성장 기반 마련
- 공공기반 콘텐츠 투자회사 설립 지원
- 창작자 중심의 콘텐츠 생태계 조성

14. 체육인

☑ 행복한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체육인 복지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스포츠행정 조직 혁신 및 기능 효율화 방안 마련
- 스포츠 성평등 문화 확산과 체육계의 폐단 근절을 통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 스포츠 빅데이터 구축·공유·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스포츠 산업 활성화
- 국민 건강 스포츠 인프라 확대
-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 '스포츠 참여포인트' 제도 도입으로 국민 건강 증진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 종목 클럽 육성 지원
- e스포츠활성화 지원



15. 과학기술인

☑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습니다.

-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 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고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전환
- 정부 주도였던 국가 연구개발 R&D 지원 체계를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으로 대전환
- 정부와 기업이 과제 기획을 포함한 R&D의 전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민간 협력형 R&D 대폭 확대
- 대학과 출연연구소의 실험실 창업과 기술이전 지원 확대

☑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해 기술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 초격차 선도기술과 미래 전략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통해 기술주권과 미래산업의 주도권 확립
- 범부처 차원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 정립과 국가 첨단전략기술 육성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국가첨단전략기술 프로젝트'를 5년 이상의 장기과제로 추진
- 임무지향형 프로그램으로 '국가전략프로그램'을 추진
-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한국형 K-ARPA(고등혁신연구개발원) 설립 추진
- SMR(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기술 연구개발 지원

☑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과학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겠습니다.

-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R&D 투자방향을 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 확보
- 지역대학 중심의 거점연구소 구축과 예산 지원 확대
-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육성하고 공급
- 지역별 특성에 맞춤형 민·관·학 공동협력 지역인재 혁신 플랫폼 구축
- 바이오-의료 혁신 허브 클러스터 구축, 탄소중립 거점연구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 계획 추진
- 지역의 연구산업 기업 육성으로 연구산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창출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되는 대형핵심연구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R&D 연구과제 선정방식을 전문 연구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과학기술자와 민간의 창의적 연구와 혁신 활동을 보장
-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역량 극대화를 위한 연구환경 조성
- 단기성과를 강요하는 평가보다는 연구자의 자율성과 장기간 연구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고효율 평가방식으로 혁신
- 공공기관운영법상 연구목적기관에 적용하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

☑ 전환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인력을 폭넓게 양성하겠습니다.

- 국가 과학기술 연구 및 산업 현장의 인적 수요·공급 균형의 안정성 확보
- 과학기술 인력 양성정책을 시장·지역·청년·여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원 확대
-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과 복귀를 위해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R&D 혁신활동 참여 확대
- 초중등의 과학, 수학, SW교육 등을 강화하여 우수 이공계 인력양성 토대 구축
- 해외 우수 연구인력의 지속적 유입과 장기 연구 장려를 위해 연구여건과 정주 환경을 국제수준으로 개선

☑ 인공지능(AI) 활성화로 세계 디지털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습니다.

- AI 기술 구현의 핵심요소인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 AI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및 R&D 지원 확대
- 인공지능 윤리의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16. 다양한 가족

☑️ 1인가구도 안심할 수 있고 다양한 사회관계망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는 제도적 기반 구축 및 불이익 개선
- 돌봄·의료·장례 영역에 '연대관계등록제' 도입
-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 행복마을관리소 모델 확대로 1인가구 지원 강화
- 혼인 외 다양한 주택수요 포괄하도록 주거정책 개편
- 1인가구 주택수요를 반영한 공유형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시설 지원 확대

☑️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의 소득기준 폐지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로 단계적 확대
-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강화 및 양육비 이행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 한부모가족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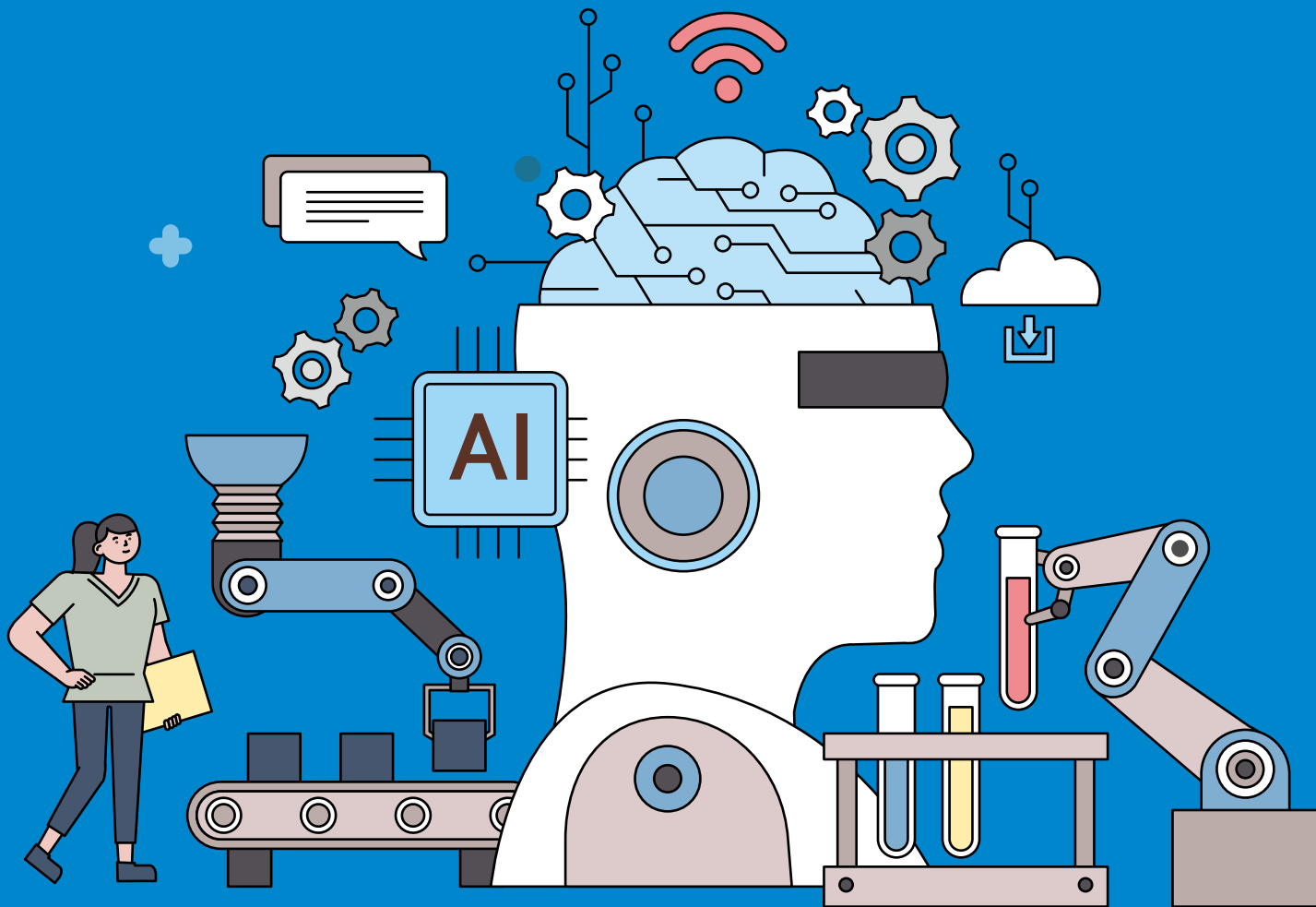
☑️ 다양한 배경 속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자녀 유무에 따른 차별적 체류·귀화 정책 폐지
- 결혼이주여성 중 국내에서 발생한 젠더폭력 피해자의 체류 보장 방안 마련
-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치유 및 가족 상담 지원 제공 확대
- 하나원의 여성인권 교육 확대 및 성차별 등 인권상담 업무 강화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형

5G



Vision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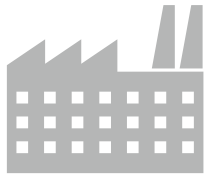
I. 신경제

☑ 20대 핵심 추진 과제

1. 산업혁신
2. 디지털전환
3. 에너지전환
4. 탄소중립
5. 미래인재양성



01. 산업혁신



- ☑ 수출 1조 달러 시대, 글로벌 5대 강국(G5)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 제조강국 도약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GVC)에 적극 대응하는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 ☑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미래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로 우리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만들겠습니다.
- ☑ 지식재산(IP) 보호를 강화하여 글로벌 기술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 중소기업인이 존경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명품 중소기업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 ☑ 과감한 벤처투자로 '혁신 창업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 ☑ 견고한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 ☑ 실패도 자산이 되는 '재도전 가능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 바이오헬스산업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 ☑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습니다.
- ☑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해 기술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 ☑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시대를 선도하고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습니다.
- ☑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 콘텐츠산업의 혁신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 농산업을 첨단기술이 함께 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 ☑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 신산업 발굴과 혁신의 기회 확장을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 ☑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 기업의 ESG 경영이 확산되고 내실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1조 달러 시대, 글로벌 5대 강국(G5)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특정국가 수출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시장·수출품목 다변화 지속 추진과 수출효자 신산업의 적극 발굴
 -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신형 수출시장 개척,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확대
 - 반도체·석유화학 일반기계와 같은 수출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차세대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산업 품목, 농축수산물까지 수출 품목의 다양화 추진
- 신성장·고부가 유망 전략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을 통한 중장기 수출경쟁력 확보 및 미래 시장수요 창출
-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무역을 상품 무역 수준으로 지원하고, 디지털 무역체제로의 전환 동시 추진
 - 문화콘텐츠·게임·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수출 확대
 - 불합리한 서비스 무역장벽 해소에 선제적 대응
- 수출의 저변 확대를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추진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략, 해외지사화사업 확대, 전문무역상사 역량 강화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플랫폼 혁신을 위해 메타버스 무역플랫폼 등 디지털 인프라 확충
 - '정부24' 같은 '수출길라잡이24' 수출 포털 구축
 - K-Studio 확대, 공공 B2B 무역플랫폼 통합 운영

제조강국 도약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GVC)에 적극 대응하는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 우리산업의 장단점과 경쟁우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혁신형 'K-주력산업 발전비전 및 전략' 수립
 -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혁신역량 강화
 - 원천기술 확보,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주력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
- 혁신성장·미래신산업을 선도할 'BIG10 산업 프로젝트' 추진
 - 글로벌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5대 슈퍼클러스터 구축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 이머징 신산업 5대 프로젝트 추진(로봇,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패션테크, 메타버스)
 - BIG10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기반(인력·자금·규제) 개선 및 모태펀드 조성
 - BIG10 선도를 위한 혁신기술교육 및 산학연 파트너십 제도 마련
- 주력산업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기술 초격차 실현·유지를 위한 제도 혁신 추진
 - 원천기술 R&D, 인력양성, 규제완화 등
-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 활성화로 우리경제의 성장활력 제고 및 성장잠재력 기반 확충
 - 디지털전환·탄소중립에 선제적 대응, 이업종간 융합 등 공동사업재편 활성화
 - 사업재편 펀드 신설, 전용 R&D 등 인센티브 확대
-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후방산업 및 전문기업 육성, 창업활성화 지원
 - 신기술·신제품의 사업화 및 시장창출 지원 확대

■ **소재·부품·장비 3.0 추진으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2029년까지 5년 추가 연장 및 관련 예산 확대
- 글로벌 Top 소부장기업 육성을 위해 으뜸기업 200개 이상 발굴 지원
- 뿌리산업에 대한 인력, R&D, 금융 등 지원 강화

■ **글로벌 공급망(GVC) 안정을 위한 공급망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및 대응전략 마련**

- 대외의존도가 높고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관리
- 요소수 등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자립화 및 수입 다변화 등 대응시스템 구축

■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및 '참여혁신연계망' 구축**

- 첨단산업분야 계약학과 확대, 업종별 산업혁신아카데미 설립, 기술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등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대폭 강화
- 산업혁신을 위해 산·학·연·정이 함께 기술과 정보 등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인 '참여혁신연계망' 구축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미래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인, 산업계의 전환비용 부담 완화, 업종별 특화 혁신기술 개발 및 투자환경 정비, 취약산업 종사자 지원 확대 등 기반 마련

■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촉진**

- 재제조 산업 확대, 도시광산(금속재자원화, 폐전자제품 등), 사용후 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등 재활용체제 구축 등

■ **탄소다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탄소중립 전환·제조공정 효율화 추진**

- 대규모 R&D 투자 지원으로 탄소국경조정(CBAM)에 선제적으로 대응

■ **전기차·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그린모빌리티로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 자동차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 및 미래차 인력 양성
-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전용 R&D 및 투자펀드 조성

■ **기후위기 대응 신시장 적극 발굴 육성**

- 그린에너지산업(재생에너지, 수소), 저탄소 신산업(바이오, 모빌리티), 기후산업(탄소포집활용 및 저장, 순환경제) 등

■ **중소제조업의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원 강화 및 범위 확대**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로 우리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만들겠습니다.

- 중견기업 월드클래스+, 지역대표 중견기업 100 등 유망 중견기업의 맞춤형 지원 확대
-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내수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및 대규모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소부장 중견기업 육성
- 지역투자자와 고용을 이끄는 성장잠재력 있는 지역 중견기업을 발굴
 - 중소기업과의 공동R&D, 해외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거점기업으로 육성

지식재산(IP) 보호를 강화하여 글로벌 기술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특허를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한국형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으로 중소·중견기업 혁신성장 지원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우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국내외 지재산 침해·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 지식재산(IP) 중심의 국가 R&D 관리체계 마련
 -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특허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 국가 R&D와 표준 연계 강화로 산업혁신을 지원하는 국가표준체계 강화
 - 디지털기술·저탄소 분야의 국제표준 확보로 글로벌 시장 선점
- 스타트업 특허심사 단축을 위한 인력증원 및 우선심사 강화

중소기업인이 존경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명품 중소기업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기업인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조성**
 - 명문장수 유공기업을 발굴, 예우하여 기업인의 사회공헌 인식제고
 - 은퇴한 기업인의 사회봉사, 국가발전 기회 제공 확대
-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원활한 영속성 확보 방안 마련**
 - 사전 증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후관리 기간·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 기업상속 공제제도 사전·사후 요건 개선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사다리 보강 및 확대**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및 금융·조세·규제개선 등 중소·중견기업 성장 특화 지원정책 마련
-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큰 폭으로 향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일몰기한 연장 및 가입기간 확대
 - 중소기업 노동자 주택 특별청약 지원 확대
 - 중소기업 노동자-사업주간 성과공유제 도입 장려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성화 및 복지플랫폼 가입 노동자 복지포인트 매칭 지원
- **특성화고, 계약학과(대학)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청년인력 역량 보완**
 - 대학과 협업하여 협회·단체 중심의 계약학과를 운영하되 관련 대기업 전문 인력의 프로그램 참여 등 계약학과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 중소기업 특성화고 확대를 통한 정예 기술인력 양성 강화
- **AI·반도체설계·SW 등 전문분야 중소기업 인력 양성 적극 추진**
 - 교육부, 과기부, 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 AI·반도체설계·SW 등 전문분야 인력 양성 종합대책 수립 추진
 - 대학 특성화 관련 분야를 신설, 관련 기업 협회·단체 전문 과정 운영 추진

- **대기업 퇴직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 핵심기술 보유 대기업 퇴직 전문 인력의 중소기업 생산현장 매칭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전 분야 탄소중립 등을 위한 ESG 맞춤형 지원 확대**
 - ESG 대응력 향상을 위해 「준비→진단→이행」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 **탄소제로 팩토리, 안전한 휴먼 팩토리 등 스마트공장 2.0 추진**
 -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기능을 고도화하여 마이제조데이터 확산
 - 기존 스마트공장을 선진형 스마트공장으로 고도화
 - KAMP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기능 강화
- **금형·열처리·주조 등 국가핵심 제조뿌리산업 지원 강화**
 - 공정자동화·지능화 등 스마트화 지원, 현장인력 부족 애로 해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등 지원
- **전통산업과 신산업과의 공존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 사회적 대타협 원칙하에 정부, 기업, 학계, 노동계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화채널 구축·운영
-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및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 공항, 항만 등에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주요 수출국 현지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구축·운영 검토
- **신기술 상품 수출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벤처혁신제품 국내 공공구매 확대 및 최저가 낙찰 관행 개선**
 - 특정기업 쓸림방지, 신산업 조달 촉진, 제값 받는 중소기업 제품 등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 공공조달 제도 개편
- **K-팝, K-푸드 등 K-브랜드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확보**
 - 다양한 온·오프라인 글로벌 유통채널에 K-브랜드 활용 중소기업 수출 참여 확대 프로그램 마련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대상 데이터 수집 분석 인프라 구축**
 - 매출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 활용 소프트웨어 도입 및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모델 전환 지원
- **안정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 센터 설치**
 - 디지털 관련 정보 능력 배양, 교육 학습, 참관 실험 등 제공
 - 사업전략에 기반 수요기업의 투자 유인과 비즈니스 모델 지원
- **연구, 생산 및 OEM등을 포괄하는 스마트 공급망(가칭 스마트 엑셀러레이션 플랫폼) 구축**
 - 최적 생산방식(Lean Production)의 공급망과 중소제조기업 전국 네트워크 연결 및 연구, 공유생산설비 운영 등 연구기관-정부-기업간 제조협력의 장 마련
- **지역별 중소기업 R&D 실증센터 구축 및 공공기관 실증 공간 개방**
 - 각 지역 규제자유특구(지역전략산업)와 연계 실증센터 설치 및 생산기술원 등 공공기관 내 실증공간 활용 플랫폼 구축
- **K-혁신밸리 조성(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AI, 우주 등 미래기업 육성)**
 - 지역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기 구축된 산업, 기업 인프라를 연계하여 생산, 연구개발, 금융, 세제, 교육 등 융·복합 지원
 - 과감한 수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별 거점 기능 수행
- **디지털, 탄소중립 등 전통기업의 미래대응 사업전환 기반 마련**
 - 사업전환 촉진의 대상을 업종별, 규모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금융, 인력 등 관련 지원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
-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및 투자형 R&D펀드 1조원 조성**
 - 중소기업 R&D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사업(KOSBIR) 제도에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높은 출연연 추가

과감한 벤처투자로 ‘혁신 창업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해 벤처투자 10조원 달성

- 5년간 모태펀드 신규예산 2배 확대(1조원 → 2조원)
- 벤처펀드 출자시 세제지원 확대 등 민간의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의 배당소득에 저율 분리과세 적용

■ 성공한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 기금은 선배스타트업-정부-지자체가 공동 조성하되, 비수도권 청년 스타트업을 선배 스타트업이 발굴·선정 지원
- 정부와 지자체는 후속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되 기금 출연 선배 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 검토

■ 혁신적 초 연결이 가능한 클라우드 펀드·기술 플랫폼 구축

- 지역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혁신지원기관, 민간 및 정부가 공동으로 클라우드펀딩 조성
- 지역혁신기업 연결, 혁신기술 투자리스크 방지 등을 위해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정부(지방정부) 민간 공동 지역별 기술 플랫폼 구축

■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K-비전펀드 조성

- 유니콘 기업을 넘어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메가 테크펀드 조성
- 벤처투자 수의 확대를 넘어, 규모의 증대, 투자금액 대형화 유도

■ 청년 신산업 위주 기술·경영혁신형 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 개막

- 연차별 기술창업기업수 확대 추진
-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BIG3),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및 친환경 등 신산업 창업 분야 사업화 집중 투자
- 군장병의 창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대군인창업사관학교 신설
- 틈스프로그램을 지방 스타트업 중심으로 2배이상 확대 추진

견고한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 창업에만 전념토록 준비-실행-성장단계에서 창업기업 부담 완화

-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가 양성 및 창업분야 고교학점제 운영
- 청년창업가 부담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 창업기업 전용 정책자금 규모 확대

■ M&A 세제지원, 펀드조성 및 보증 확대 등 M&A 활성화 적극 지원

■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글로벌 유니콘 100 프로젝트 추진

- 규제자유특구 실증 이후, 사업화를 통한 시장진출을 본격화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벤처·창업기업 100개 육성

■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지역으로 확대, 17개 지역별 옴부즈만 운영

- 조례 등 지자체 규제까지 세심히 관찰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을 17개 광역 지방정부로 확대

실패도 자산이 되는 '재도전 가능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상생협력기금 등을 활용, 민관협력형 재창업기업 스케일업 촉진**
 -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유망 재창업기업 육성 확대
 - 재도약펀드 조성을 확대하여 재도전의 활로 회복
- **실패를 자산화하여 재창업을 성공하는 재도전·혁신캠퍼스 건립**
 - 실패의 경험과 노하우 등 축적된 역량 재활용 지원 시스템 구축
- **실패를 반면교사할 수 있는 실패 분석 SI 플랫폼 구축**
 - 교육부, 중기부, 법원(회생법원) 등 공동 참여, 실패사례 제공·분석
 - 학생, 시민 및 기업 등 전 국민에게 무료 오픈하여 활용 제고
-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전 지원체계 강화**
 - 재도전 교육·멘토링 및 투자유치 지원 등 재도전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재도전 중앙센터 설치

바이오헬스산업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바이오헬스 산업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 부처 간 칸막이 없애고 단일 체계 하에 정책 추진,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 제정
 - 민간주도형 바이오헬스산업 수퍼 클러스터 형성 지원
 - 신의료기술 평가 방식, '선사용 후평가 시스템' 전환
 - 첨단분야 심사인력 및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으로 정부기관 전문성 대폭 향상
- **감염병 대응 위한 생산력, 기술력 확보로 보건안보 국가 경쟁력 강화**
 - 신종감염병 백신과 치료제의 국내 원천기술 기반 신속 확보
 - 백신 글로벌 허브 구축 통한 생산역량 강화
 - 백신제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원료의약품과 핵심 의료기기부품 자급화 확대 방안 마련
- **건강정보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 건강정보를 통합·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사업(마이헬스웨이), 공공의료기관부터 추진
 - 100만 명 규모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재편, 임상과 유전체 정보 집중관리로 활용도 향상
-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조성 및 기업투자 활성화**
 -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개방형 융복합 공동연구센터 설립, 소규모 시료생산 시설 확대
 - 민관합동 메가펀드 확대 조성, 블록버스터급 신약개발 3상 지원
 - R&D 세제지원 확대, 혁신 신약과 선진국 GMP 인증시설 갖춘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바이오헬스분야 R&D 예산 및 인재양성투자 대폭 확대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습니다.

-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 기획과 예산 편성 권한을 갖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고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전환
 - 새로운 지식과 미래 기술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연구에 투자 확대
- 정부 주도였던 국가 연구개발 R&D 지원 체계를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으로 대전환
- 정부와 기업이 과제 기획을 포함한 R&D의 전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민간 협력형 R&D 대폭 확대
 - 단순한 기술개발 위주의 R&D 사업이 아니라 R&D, 인력양성, 실증, 사업화, 국제협력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성
- 대학과 출연연구소의 실험실 창업과 기술이전 지원 확대
 - 공공조달과 해외협력사업 지원 확대로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 창출
- 우리기업의 기술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여 탄탄한 기술 역량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지원
- 신기술개발에 기반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 조정 기능을 정립하고 입법체계를 선제적으로 재편
 -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선허용-후규제'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해 기술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 국가차원의 기술확보를 위해 담대한 도전(Grand Challenge) 추진
- 초격차 선도기술과 미래 전략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통해 기술주권과 미래산업의 주도권 확립
 - 양자기술, 인공지능 등의 '10대 대통령 빅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
 - 핵심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독자적인 연구와 생산능력 확대 지원
- 범부처 차원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 정립과 국가 첨단전략기술 육성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국가첨단전략기술 프로젝트'를 5년 이상의 장기과제로 추진
- 임무지향형 프로그램으로 '국가전략프로그램'을 추진
 -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향후 5년간 5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
 - 관련 사업 전담 연구개발 및 혁신조직을 신설하고, 범부처 역할조정 등에 대한 전권을 부여
-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한국형 K-ARPA(고등혁신연구개발원) 설립 추진
- SMR(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기술 연구개발 지원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시대를 선도하고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습니다.

- 대통령 직속으로 범부처 우주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전략본부 설치
-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 개발 지원
- 발사체, 발사 인프라(발사대, 해상 스페이스포트 등), 우주정거장 등으로 구성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
-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
 - 우주탐사의 시작인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조기 실현
- 민·군 협력으로 인공위성 구성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첨단 인공위성 관련 민간산업 육성
- 우주자원 확보, 우주영토 확장(ISRU), 우주 에너지(우주태양광) 등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가적 미래 프로젝트 추진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AI, 우주·위성, 군사로봇 분야 등 국방 신산업분야 육성에 집중 투자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산 소·부·장 강소기업 50 육성 프로젝트
 - 매년 10개씩 5년간 50여개 전문 중소·벤처기업 육성 추진
 - 첨단 국방기술 개발을 위한 군(軍)·산(産) 생태계 조성
-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 기업 발굴 및 집중 지원 확대
 - 군에서 실증된 제품을 민간용으로 표준화하여 산업화할 수 있도록 군실증제도 도입
 - 국방 R&D 관련 인력과 민간 R&D 인력 간 교류 및 협력 확대
- 방위산업 국내외 수요확보를 통한 고용기반 확대
 - 국외 도입 무기 시 국내업체 의무참여 강화, 해외 무기 수출 시 국내 기업 현지 생산 연계 지원 방안 확대 등
- 국내 방산기업들의 부품국산화 개발 확대 및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국산화개발된 부품을 실시간 공개하도록 제도화
 - 체계개발 시 등록된 기개발품을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국산부품 등록제도」 도입
 -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부품 국산화를 산정방식 개선
- 국방기술품질원의 방산 부품인증 업무 민간 이관 확대

콘텐츠산업의 혁신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문화콘텐츠 세계2강 도약을 위한 K-콘텐츠밸리 조성
 - 교육기능⇄기업맞춤형인력고용⇄기업⇄연구기관R&D의 산업화
-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성장 기반 마련
 - 다양한 문화자산과 첨단 과학기술의 융복합 문화산업 육성
 - 50만개 문화 일자리 창출, 유니콘 문화기업 10개 이상 나오도록 지원
 - 웹툰, 웹소설 크리에이터 발굴지원 등 1만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 지원 추진
 - 영상콘텐츠 제작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 애니메이션 투자펀드 확충
- 공공기반 콘텐츠 투자회사 설립 지원
 - 콘텐츠산업 육성 위한 5년간 총 50조원 이상 투자, 융자, 보증 지원
- 창작자 중심의 콘텐츠 생태계 조성
 - 영화제작 보증 금고 도입
 - 문화 콘텐츠의 공정 유통구조 정착 지원
 - 웹툰 고유의 식별체계 도입
 - 국내외 콘텐츠 저작권 침해와 불법서비스 근절 전담 기구 인력확충 등 기능 강화

농산업을 첨단기술이 함께 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 생명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으로 미래 농식품산업 성장 선도
 - 국내 부존 동식물 자원을 활용하여 IT, BT, NT와 융복합 연구 및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등을 세계 수준으로 육성
 - 디지털 육종기술 등 첨단기술 활용 종자산업 발전기반 및 종자생명산업 클러스터 구축 추진
-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스마트팜·스마트빌리지 확대
 -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무인·자동화 농작업 기반과 체험·실습체계 구축, 노지재배·축산의 스마트화 등 농업 SOC와 생산·가공·유통·소비 가치사슬 전반의 디지털화 추진
 - 스마트빌리지, 스마트교육, 스마트관광 등으로 도농간 생활환경 격차 해소 추진
- 식품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맞춤형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친환경로컬식품, 수출식품 등 육성
 - R&D 확대, 스마트팩토리 지원, 식품빅데이터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
 -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본격 추진 및 6차산업 연계 푸드파크 조성, '권역별 식품기업 지원 체계' 구축
 - 농식품 가공업체의 국내산 원료 농산물 공급 지원 확대
- 미래 농산업을 견인할 스타트업, 혁신기업, 지역중심 전문기업 등 육성
 - 농업의 디지털 전환, 그린바이오·식품산업 확산이 새로운 성장동력화, 농업인의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주체 육성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R&D 연구과제 선정방식을 전문 연구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과학기술자와 민간의 창의적 연구와 혁신 활동을 보장
-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역량 극대화를 위한 연구환경 조성
 - 출연연 연구원의 인건비 지원 비중을 높여 기본연구비 보장
 - 출연연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연구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개혁하고, 이를 위한 출연금 예산 비중 확대
- 단기성과를 강요하는 평가보다는 연구자의 자율성과 장기간 연구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고효율 평가방식으로 혁신
- 공공기관운영법상 연구목적기관에 적용하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
- 국책연구기관 긴급현안 대응체계 및 연구 역량 강화
 - 미래연구, 융복합 연구, 협동 연구 등 공동연구 플랫폼 재구축
 - 우수인력 확보, 연구자 차별 방지책 마련
 - 부동산 관련 정보 취급 연구기관의 정보 유용 차단 등 투명성 제고
 - 미래 대비 중심으로 연구기관의 구성과 연구회 체제 개편 추진

신산업 발굴과 혁신의 기회 확장을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 미래 첨단산업 영역에서 사후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 공정경쟁 분야 규제 강화와 혁신성장 분야 규제 합리화
 - 중복규제·정부 부처 간 칸막이 해소
- 규제 샌드박스과 규제자유특구를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발전
- 체계적인 국가 갈등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갈등관리법 제정 추진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혁신제품 구매 방식을 수동적 방식에서 제품 개발 제안의 적극적 방식으로 개선
- 혁신제품 목표 구매 비율 상향 및 수의계약 확대
-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통한 제품심사, 홍보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

기업의 ESG 경영이 확산되고 내실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기업의 ESG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신성장동력 육성
 - 탄소배출 저감 기업 자금조달 지원
- ESG 공시, 측정 및 평가 인프라 제고
 - 상장기업의 ESG 공시 내실화를 통한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
 - 객관적인 ESG 평가체계 구축 및 무늬만 ESG 규율 강화
- ESG 생태계 구축 지원
 - 공적 연기금의 ESG 투자 활동 강화
 - ESG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

02. 디지털전환



- ☑ 인공지능(AI) 활성화로 세계 디지털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습니다.
- ☑ K-디지털 전환으로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 X+디지털 기술 융합으로 전 산업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 ☑ 디지털 경제 필수 핵심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 ☑ 가상융합기술 활성화로 신용합산업시대를 열겠습니다.
- ☑ 디지털 대전환과 세계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기구를 운영하겠습니다.
- ☑ 정부 데이터를 국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활성화로 세계 디지털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습니다.

■ AI+X를 넘어 X+AI로 융합산업 활성화

- 대규모 AI 학습 데이터를 활용한 X+AI 신규 유망 서비스 발굴 및 지원 강화
- AI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확대
- AI 기반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 개발·활용
- 특화 산업형 AI 지역집적단지 조성 확대와 입주기업의 사업화 및 AI 응용기술 고도화 지원

■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핵심기반인 'AI 반도체' 산업 육성

- AI 반도체 시장에 도전하는 유망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 사업화에 주기별 맞춤형 지원
- AI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실증 지원

■ AI 기술 구현의 핵심요소인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 공공데이터 및 민·관이 함께 투자한 시학습용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통합데이터포털 설치·활용
- 데이터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치평가, 품질인증제 도입
-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 활용 추진
- 의료, 금융 등 산업별 데이터 결합·활용을 위한 규제 혁신 추진
-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

■ AIoT·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 AI와 IoT가 결합한 AIoT기반 신시장·수요 창출이 가능한 핵심 산업 분야 발굴·육성
- AI와 클라우드가 연계하는 통합 관리체계 및 서비스 개발 지원
- 정부·공공서비스 등의 공공 클라우드를 국내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한 적극행정 추진
-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 촉진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디지털전환 01

■ AI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및 R&D 지원 확대

- 인공지능 전문대학원 및 전문 연구기관 확대 추진, 일반대학원 시용복합 학위과정 증설
- 산·학·연 연계로 AI 융합을 위한 AI·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및 현업 산업전문인력의 AI 역량 강화 지원
- AI 기술분야 R&D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 확대
- 정부출연기관의 AI분야 연구원의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AI 스피노프' 제도 활성화

■ 인공지능 윤리의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 한국형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산업현장의 DNA(Data,Network,AI) 생태계 조성

- 자동차, 조선, 철강, 섬유·석유화학, 에너지, 기계, 가전·전자, 헬스케어, 유통·물류, 뿌리·소재 등 10대 업종의 디지털 전환으로 제조업 혁신 추진

■ 센서·임베디드 SW·지능형 로봇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제조 혁신 기반 산업 육성 방안 마련

- 센서 산업 역량 강화 추진, 임베디드 SW 기반 기술 확보
- 미래 지능형 로봇 기업 육성 및 로봇산업 인프라 강화

■ 디지털 기술의 산업현장 활용도 제고

- 산업 현장의 공정혁신, 제품·서비스 개발, 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추진

■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및 확산 기반 조성

- 산업데이터·AI 플랫폼, 디지털 전환 제품·서비스, 시스템 인증체계 구축 등

■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격차 해소

- 중소제조업의 기술역량 강화로 스마트화 2.0 추진
- 대·중소기업 협업을 통한 디지털 전환 촉진 및 협업지원센터 구축

■ 고부가가치 제조기반 서비스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추진

- 제조업과 AI·Data 융합 촉진

X+디지털 기술 융합으로 전 산업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디지털 경제 필수 핵심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 X+디지털 기술 융합 확산

- 디지털 기술의 전 산업 융합으로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가능 분야 기술 개발 및 지원 강화
- 제조, 농식품, 의료, 비즈니스 등 특화 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디지털 기술 전문인력의 전문기업, 연구소기업 창업 시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 강화

■ SW 혁신기술 활용 확산

- SW융합클러스터를 통한 거점 특화 산업 경쟁력 강화
- 지역 및 중소 SW기업의 성장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투·융자 확대
- 공개SW 기반 혁신 융합기술 활용 확산
- 국내 SW·AI 기술 스타트업과 해외 우수 SW·AI 융합기술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합작·연계 사업 지원 강화

■ 규제 혁신을 통한 SW산업 성장 지원

- SW 수요 예보, 일방적 과업 변경금지 의무화, 합리적인 SW 사업 대가 산정 등 공공SW 발주 제도 혁신
- 공공SW의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및 국내·외 기업 역차별 개선
- 민간·SW개발계약 시 개발자의 지식재산권 및 정부·공공기관의 상용SW에 대한 개발자의 저작권 보유 개선
- IT·SW 융합분야의 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로 혁신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 강화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 지원 강화

- 5G 네트워크 선도적 구축 이행
- 6G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선도적 R&D 투자 및 6G 국제표준 주도로 글로벌 장비·단말기 시장 선점 기반 마련
- 6G 네트워크 실현의 핵심기술인 위성통신 기술 개발 적극 추진

■ 5G 네트워크시대 필수 요소기술인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의 안전한 활용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 확대

■ 디지털 경제의 보안기술 인프라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R&D 투자 가속화

■ 미래 정보통신의 핵심기술인 양자정보통신기술(Quantum ICT)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

■ 3D프린팅 기술 개발 고도화와 사업화 확산을 위한 투자 지원 및 전문 기술인력 양성

가상융합기술 활성화로 신융합산업시대를 열겠습니다.

가상융합경제 활성화로 신융합산업 선도

- 7대 핵심산업 분야(게임, 엔터테인먼트, 제조, 교육, 의료, 국방, 유통 등)의 '가상융합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강력 추진
- XR 기술개발·콘텐츠·디바이스의 3중 1세트 병행 육성 전략 추진
- 메타버스를 공공인프라, 산업, 문화 등 사회 전반에 활용되는 혁신적 플랫폼으로 육성
- 가상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민·연·관 협력체계 구축
-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가상융합 콘텐츠 기업 육성·지원

- 실감콘텐츠 관련 유망 인기업, 스타트업 대상 인큐베이터(Biz Incubator) 지원
- 가상융합서비스 스타트업,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의 제작·테스트·실증 지원
- 메타버스 기반 스타트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클라우드서비스 및 고용지원금 우선 지원으로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
- 고품질 실감 콘텐츠 분야의 제작 지원을 위한 기반 시설 고도화 및 고가의 공동 활용 인프라 확충
- 대용량의 실시간 3D 영상을 표시하기 위한 고성능 컴퓨팅 파워와 그래픽 처리 성능 고도화 및 디스플레이 기술 지원

주요 권역별 '메타버스 허브' 구축 및 '메타버스 아카데미' 운영

- 메타버스 실증테스트 환경구축, 기술지원, 신서비스 발굴·실증,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주요 권역별 '메타버스 허브' 확대 구축
- 메타버스 허브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 산·학·연과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 특화 메타버스 신서비스 개발 및 확산
-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메타버스 생태계를 선도할 창의적인 지역 특화 전문인력 육성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메타버스 활용 환경 구축

- 메타버스 활용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 메타버스 시스템 해킹·침해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장치 구축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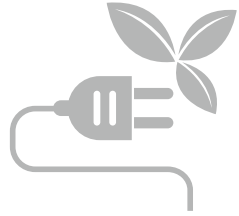
디지털 대전환과 세계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기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정부 데이터를 국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 IT·SW 기반의 디지털기술 혁신과 범국가적 디지털 대전환의 전략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전략기구 설치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디지털 경제 활성화 기본정책 수립
 - 디지털 대전환 관련 부처간 중복·유사 사업 조정 및 협업체계 구축
 - 산업분야별 첨단기술 융·복합화 등 미래 핵심 전략사업 선정 및 예산 지원 방안 마련
 - 부처간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 규제외 컨트롤타워 역할
 -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규제 해소를 위한 법·제도 혁신 추진
-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신규산업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
- 데이터산업진흥법상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최고데이터책임자(CDO, 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해 기획·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부처별 데이터의 통합적 융합과 연계를 지원
- IT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제도 운영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 정부의 데이터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Machine Readable) 형태로 공개 추진
- 정부가 공개하는 자원은 민간 클라우드 사용 추진

03. 에너지전환



- ☑ 재생에너지 확대로 신성장의 기회를 열겠습니다.
- ☑ '에너지고속도로'와 인프라 구축으로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 탈탄소 경제·산업 전환으로 글로벌 녹색산업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 석탄발전을 조기 대체하고, 무공해차로 전환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신성장의 기회를 열겠습니다.

- 재생에너지 303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충
 - 부유식 해상풍력,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바이오가스 공급원 확대, 그린수소 공급체계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충
 - 주민참여·주도형 재생에너지 생산 거버넌스 구축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 재생에너지 전력망 우선접속 보장·국가책임제, 우선구매 의무화 추진 등 재생에너지 수급 효율성 제고
 - 행정절차 간소화,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행정 개선
- 국가 주도의 재생에너지 입지확보 추진
 - '그린 에너지 벨트' 지정 등 계획입지 확보 강화
 - 이격 거리 규제 등 입지 규제 개선 추진
- 자유로운 재생에너지 생산·유통·판매 지원
 - 누구나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 공급, 소비할 수 있는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제도 혁신
 - 전력시장 가격입찰제도 도입 추진, 수요자원시장 및 보조서비스 시장 개설

‘에너지고속도로’와 인프라 구축으로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탈탄소 경제·산업 전환으로 글로벌 녹색산업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분산형·지능형 에너지 공급체계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와 지방정부 및 민간 협력을 통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추진
- 선제적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 쌍방향 지능형 전력 유통 플랫폼 구축
- 풍력, 태양광 등 중소규모 생산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시스템을 적용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가상발전소(VPP) 구축으로 에너지 거점 확보

■ 탄소중립 R&D와 에너지 산업·기술 지원 확대

- 에너지 민간 투자 활성화 지원, 금융지원 강화 및 투자 세제지원 확대, 녹색 공공조달 확대
- 초고효율 태양전지, 전고체 배터리, 대형·부유식 해상풍력, 차세대 가스터빈, 탄소포집활용 및 저장 등 탄소중립·에너지 기술 R&D 지원 확대

■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

- 여러 부처에 분산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업무 등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 전력시장, 전력망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규제기관의 전문성 확보

■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대한 탈탄소 전환 지원 강화

-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은 탄소저감 공정개선을 통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R&D 지원 강화
- 수소환원제철, 화이트바이오 기술, 저탄소 연료전환 등 신기술 적용을 통해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 산단 내 지붕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로 자급 전기 비중 확대
- RE100 참여기업 확대를 위해 세제·금융지원, RE100 공급단지 조성, 제품 인증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 녹색 신산업 육성과 녹색 일자리 창출

- 그린 디지털 플랫폼, 에너지 신산업, 제로에너지건축, 탄소저감설비, 스마트시티 등 녹색 신산업 적극 육성 및 녹색 일자리 창출 위한 제도개선과 금융지원 강화, 투자세제 지원 확대
- 수송부문 탄소감축 가속화를 위한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슈퍼스테이션), 자율주행특구 확대 등 그린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모빌리티 데이터센터 구축
- 청정수소 생산 플랜트, 청정수소 가스터빈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경제 기반 구축과 수소상용차·선박·열차 등 수소연계산업 확대

석탄발전을 조기 대체하고, 무공해차로 전환하겠습니다.

■ 석탄발전 조기 대체 추진

- 2040년까지 석탄발전 가동 중단 추진
- 효율이 낮은 노후 발전소부터 온실가스 발생이 적거나 없는 발전소로 대체
-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추진
- 발전산업 전환의 원칙과 지원 방안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 추진

■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및 무공해차 전환 추진

-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국내 판매 중단 추진
-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 확대 및 체계화
- 공공부문 조기 전환,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단계별 전환 추진
- 급속 및 초고속 충전 주요 도로·고속도로 확대 설치 등 충전 인프라 확대 추진
- 신속한 전환을 위한 강력한 배출량 규제 및 연비 규제 현실화
- 내연기관차의 인구밀집 지역 운행 제한 시범사업과 대중교통 이용 전환 촉진
- 현행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로 개편
-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기술·업종 전환 시 금융지원 확대, 재교육·고용지원 등 일자리 안정 지원 강화

04. 탄소중립



- ☑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 ☑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 탄소중립형 농업으로 대전환을 하겠습니다.
- ☑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만들겠습니다.
- ☑ 국립공원, 습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탄소흡수원을 조성하겠습니다.
- ☑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 공공과 시민이 함께 멈춤 없는 자원순환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 ☑ 모빌리티 대전환과 탄소중립에 부응하는 교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한반도 탄소중립을 앞당기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 **재생에너지 적기 계통연계를 위한 전력 인프라 확충**
 -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연계 및 송변전설비 적기 계통 보강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춘 유연성 자원(에너지저장장치, DR) 확보
 - 재생에너지 송배전선로에 직류(HVDC, MVDC) 계통체계 구축
-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에너지 공급시스템 확충**
 - 전력 수요지 인근의 발전설비 및 도심형 분산전원 확대
 -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태양광, ESS, V2G 등)을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한국형 가상발전소(VPP) 도입 등
- **풍력발전 인허가 일괄처리를 위한 한국형 원스톱삽 도입**
 - 원스톱삽을 통해 계획 입지(국가 주도 입지발굴, 지자체 주도의 주민수용성 확보), 인허가를 일괄 수행·처리
-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기 구축**
 - 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 및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수소클러스터 조성, 수소융복합 슈퍼스테이션 기반 확대, 수소 가스터빈 기술개발 등 추진
- **탄소중립 에너지 미래기술 확보 및 ICT융합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 **국민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강화**
 - 주민참여·이익공유형 프로젝트 확대로 주민의 적극적 사업 참여 환경 조성
 - 지역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 확대
- **RE100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 탄소중립형 농업으로 대전환을 하겠습니다.

-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비중 20%를 목표로 저탄소 축산시스템으로 전환**
 -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감축하고, 논농업부터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전환하며 탄소저감형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조성
 - 환경과 조화되는 지역자원 기반 경종·축산 순환농업과 동물복지·생태 축산 활성화
 - 가축분뇨에너지화 확대 등 가축분 퇴·액비 중심의 통합 양분 공공관리체계 구축, 축산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 강화
-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주요산업인 축산 및 사료산업의 위상을 강화**
 - 조사료·사료원료의 안정적 생산 및 확보, 저메탄·저단백질사료 보급 확대, 다양한 밀원수 확대, 주요 가축의 육종·개량 강화, 산업동물 수의인력 육성
- **농업인·농촌주민 공동체 주도 에너지 마을을 육성하여 농산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거점화**
 - 마을회관, 주택지붕, 축사지붕, 도로, 유희부지 등에 햇빛농사 및 농지전용 없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추진
 - 가축분뇨, 목재, 어패류, 음식물, 에너지 작물 등 바이오매스 재생 에너지화
 - 생산된 전력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하고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연금으로 지급
- **이상기후 대응 재해비상대책 수립, 재해보험 대폭 강화**
 - 대상품목·보상범위 및 보상률 확대, 복구비 지원단가 상향 등
 - 기후변화 적응 대체작목 개발과 병해충·질병 등 품목별·축종별 대응강화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만들겠습니다.

- **숲가꾸기 확대 및 인프라 확충으로 탄소 흡수력이 큰 건강한 산림 조성**
 - 환경 친화적 숲가꾸기 중심의 산림 경영 확대
 - 신규 탄소 흡수원 확보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도시숲 조성 확대
 - 임도 확장, 임업기계 확대 및 고성능화, 스마트 산림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산림 인프라 대폭 확충
 - 지역단위 산림계획 수립 및 산림 경영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림행정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산림관리
 - 산림 보전 및 생태복원 확대를 통한 백두대간 '숲 평화벨트' 구축 추진
- **산촌의 고유 특성을 살리고 순환경영 위한 '산림뉴딜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자연휴양림, 폐교·빈집 등을 정비하여 '숲오피스' 제공 등 정주여건 개선 추진
 - 목재 및 산림부산물 생산·가공 및 소비를 통한 지역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추진
 -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소규모·분산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지원
 - 공공 건축물 등 공공부문에 목재 의무 사용비율 설정 등 저탄소 목재 친화도시 조성 추진
- **탄소순환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강화 및 임업경영 개선**
 - 임업 직불제 안착 및 '산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
 - '산지연금', '산지은행' 도입 검토
- **산림을 활용한 생애주기 산림복지 구현 및 맞춤형 산림 일자리 창출**
 - 숲속 치매예방, 숲 치유 건강증진 등 '숲 처방 프로그램' 운영
 - 숲 치유활동을 건강보험과 연계 추진
 - 산림자원 활용 바이오산업 육성, 전국단위 사계절 산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국립공원, 습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탄소흡수원을 조성하겠습니다.

- **유휴공간, 습지, 국립공원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탄소흡수원 조성**
 - 육상·해양의 자연생태보호지역 지정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등 탄소흡수원 조성·확대 추진
 - 농촌지역의 인공습지, 자연공원 등 생태공간으로 탈바꿈, 생태-산업 연계, 주민주도형 재생 추진
 - 도시지역의 자투리 공간과 훼손지역을 생태복원하여 생태연결성 강화, 자연접근성 보장 추진
 - 우수습지 발굴 및 훼손습지 복원 확대, 복원모델 개발 및 국립공원 내 자연숲, 갯벌 등을 활용한 탄소저장고 기능 확대
- **국가 탄소흡수원 관리기반 정비**
 - 습지, 초지 등 생태계 건강성과 탄소흡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합 기능평가 도입을 통해 이행평가·정책 환류체계 구축
- **탄소중립을 접목한 탄소흡수형 비점오염 관리 대책 추진**
 -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하는 농촌지역 등 전국에 산재한 휴경농지 및 유휴부지에 식생형 비점저감시설 설치 지원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플라스틱 원천 감량 추진

-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원칙 수립
- 공공부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중단 추진
- 경제성과 식품안전 등을 보완한 다회용기 스타트업 지원, 그린배송 인프라 구축
- 기업의 폐기물부담금 현실화로 일회용 포장재 및 플라스틱 사용 저감 유도

■ 플라스틱 재사용·재활용 확대 추진

- 대형유통매장의 재충전 설비 설치 및 리필스테이션과 같은 포장재 없는 상점 확대
- 일정 비율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업이 재생원료 사용 시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 자원이용성 향상

- 용도·품목별로 재질·구조를 표준화하고, 일회용 포장재 재질 단일화 추진을 통해 분리수거 효율 강화
- 친환경디자인규정(ECO Design Directive) 도입과 무라벨 제품의 생산 확대 지원
- 전자제품 및 주요 생활용품의 '고쳐 쓸 권리(Right to repair)' 보장 확대

■ 플라스틱 자원화 시장 활성화

- 식물 등 재생가능 자원으로 기존 화학제품을 대체하는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및 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 강화
- 플라스틱 대체 상품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플라스틱 자원화 관련 기술 R&D 투자 확대와 기업 상생 지원으로 시장 활성화 유도

공공과 시민이 함께 멈춤 없는 자원순환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 '공공책임과 시민중심'의 수거 체계로 개선

- 재활용폐기물 공공책임 수거 전환 지원
- 시민중심 공동체(공동주택, 업체, 지방정부 3자) 협정 제도화
- 공공비축 창고 등 재활용 안정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충

■ 안정적 폐기물 처리기반 확충

- 공공선별장 확충 및 현대화, 재활용품 품질 등급 관리
-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시 폐기물 처리시설 의무화
-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하는 직매립 금지 이행 지원체계 구축
- 환경친화형 폐기물 처리 시설 추진
- 폐자원 인센티브 등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 계획 수립

■ 스마트하고 쾌적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 IoT 기반 센서, GPS, 빅데이터 등 스마트 폐기물 관리 융복합 기술 지원 강화
- 수거가 어려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품 무인수거기 설치 지원
- 남은 식재료 및 음식물 활용을 위한 플랫폼 허브 구축 및 관련 스타트업 지원

■ 재활용 산업 경쟁력 강화

- 재활용 원료·제품 구입 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안정적 수요 창출
- 광역권 특화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및 기술 개발 지원

모빌리티 대전환과 탄소중립에 부응하는 교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선제적 제도 마련 및 기술개발 지원
-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 지원
 - 자율협력주행 디지털도로인프라(C-ITS) 구축사업 확대
 - 공영주차장 등 도심 유희공간 활용, 모빌리티허브(UAM 이착륙장 등) 구축 추진
 -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자율주행, UAM, 드론택배 등) 대상 지방정부 리빙랩 사업(우리동네 실험실) 시행
-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 인프라 확대 및 관리체계 개선
 -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겸용 전용도로 및 주차장 확대 지원
 - 휴게 및 샤워시설 확대 지원,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기간 단축
- 사업용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 및 인프라 확충 지원
- 대중교통 이용자 알뜰교통카드 대상지역 확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한반도 탄소중립을 앞당기겠습니다.

-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공동선언 및 남북협약기구 설치 추진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남한이 북한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한 만큼 감축량을 인정받는 청정개발체제(CDM) 활용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민간 기업 참여 유도
- 한반도 생태계 보호와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남북 녹색협력
 - 녹색기술협력을 통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공동번영 추진
 - 자연재난 예방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남북공동방재, 산림·토양·수질 분야 협력

05. 미래인재양성



- ☑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컨트롤타워를 재구조화하겠습니다.
- ☑ 사람 중심의 디지털 미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 전환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인력을 폭넓게 양성하겠습니다.
- ☑ 내실있는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 ☑ 경직된 학교를 혁신하고 공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 개방·융합형으로 직업교육 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 ☑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추진하고 로스쿨의 문호를 확대하겠습니다.
- ☑ 청년 미래 혁신인재 5만명을 육성하여 농업·농촌의 전환적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 ☑ ICT 강국 KOREA를 상징하는 ICT 랜드마크를 건립하겠습니다.
- ☑ 국민의 자산형성 및 합리적 소비를 위한 금융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컨트롤타워를 재구조화하겠습니다.

-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청의 역할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 **국가 및 지역차원 인재양성정책 수립·시행**
 -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복원하여 산재된 인재양성 정책·사업 통합 관리, 지역 및 대학과 연계한 인재양성시스템 구축
- **지역교육지원청 권한 강화 및 기초자치단체 협업시스템 구축**
 - 교육장 임기보장 등 교육지원청 권한 및 역할 강화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기획, 예산 집행 권한 일부 인정
 - 교육경비보조,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학교복합시설, 지역특색 교육과정 등 실질적인 교육협력 시스템 제도화
- **교육정책 영향분석·평가제 도입**
 - 교육정책의 설계 및 결정시 사전에 교육정책 타당성과 실효성, 교육현장 업무부담 등 분석 평가
 - 교육정책에 대해 학생참여 온라인 플랫폼 설치·운영
- **학부모회·학생회·교직원회 법제화 등 학교자치 강화**
 -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권 확대 및 학생 참여 보장 추진

사람 중심의 디지털 미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디지털시대를 주도할 '100만 혁신 미래인재' 양성

- AI 대학원 지원 사업 확대 및 초광역 권역별로 '4차 산업 전문대학원' 신설 추진
- 비전공자를 위한 AI+X(자신의 전공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실시
- 민간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AI 전문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평생교육 사업과 연계

■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SW, AI, 빅데이터 교육 강화

-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근거하여 초·중학교 교육과정에 SW, AI, Data 기반의 컴퓨팅 사고력 교육 등 정보 관련 교과 시간 추가 확대
- 정보교과 외의 모든 교과에서도 디지털 교육과 AI, 빅데이터 활용 및 융합교육 추진
- AI교육 전문센터 구축 및 디지털·AI교육지원단 구성으로 교육지원 강화
- 중·고등학교 당 1명의 정보교과 담당교사 확보로 양질의 전문교육 담보
- 비대면 수업 확산에 대비, 학생 개인 수준 맞춤형 온라인 SW·AI 학습용 플랫폼 활용 확산

■ 디지털 전환 사회를 선도할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 K-에듀버스 구축

- 유아, 초·중등, 대학, 직업 및 평생교육용 포털로 활용
- 인공지능 맞춤형 학습분석 기제로 활용
-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개인별 학습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 모든 교사와 학생이 공유하는 디지털 교육 아카이브(DATA BANK) 구축

■ 디지털·인공지능 전문 교사 양성 및 배치

- '초중등 교원양성기관 AI교육 강화 지원 사업' 확대 및 교육대학원 AI 전공 신설
- AI 교육 관련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와 AI 기반 융합 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연수 강화를 통해 AI 현직교사 전문가 양성
- 일정 규모 이상 학교별 1인 이상의 디지털·AI 전문 산학협력교사 또는 정보교사 배치

■ 디지털 교육 정착을 위한 1인 1 태블릿 기기 확대 보급

-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1인 1 태블릿 기기 지급
- 저소득층부터 우선 지급 후 단계적 확대

전환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인력을 폭넓게 양성하겠습니다.

■ 국가 과학기술 연구 및 산업 현장의 인적 수요·공급 균형의 안정성 확보

- 여러 부처에 산재된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과 지원체계 일원화

■ 과학기술 인력 양성정책을 시장·지역·청년·여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원 확대

- 인력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여와 통제 최소화

■ 청년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이공계 국가우수장학생 선정 확대 및 지원 강화
- 출연연 중심의 박사후 연구자와 신진연구자의 일자리 확보와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취업까지 연계하도록 지원

■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과 복귀를 위해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R&D 혁신활동 참여 확대

-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프로그램 마련

■ 초중등의 과학, 수학, SW교육 등을 강화하여 우수 이공계 인력양성 토대 구축

■ 국가과학자 양성 확대

■ 의과학자 양성 추진

■ 해외 우수 연구인력의 지속적 유입과 장기 연구 장려를 위해 연구여건과 정주 환경을 국제수준으로 개선

- 과학기술인력 특별비자 K-PASS 제도 도입

내실있는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 SW, AI, 사이버보안 등 기업 필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약학과 확대 지원
- 군(軍) SW 및 AI 분야 전문 복무 더욱 확대
- 재직자 및 구직자 대상, SW·AI 전문교육 강화로 고급 실무인력 양성

■ 디지털 체험학습 강화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흥미유발(게임·메타버스) 수준부터 기본(SW 블록코딩)과정, 전문(알고리즘) 과정까지 체계적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전국 과학관을 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한 과학기술+디지털 융합교육 제공
- 대학을 중심으로 방학기간을 활용한 SW, AI 등 디지털 기술 체험학습 프로그램 참여 지원

■ 내실있는 SW·AI 학교 교육 구현

- SW·AI(정보과목) 교육 필수시간을 주 1회(매년 약 34시간) 수준으로 확대하고, 초등~고등학교 까지 연속성 있는 교육 제공
- 중·고등학교 당 1명의 정보교과 담당교사 확보로 양질의 전문교육 담보
- 비대면 수업 확산에 대비, 학생 개인 수준 맞춤형 온라인 SW·AI 학습용 플랫폼 활용 확산

■ SW·AI 교육 전문인력 확보

- 초등학교 SW 교육 지원 및 지역의 '디지털 기본역량 센터'에서 SW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디지털 튜터(digital tutor) 도입
- 산업 현장의 숙련된 재직자 활용을 통한 SW·AI 교육 전문강사 보강 및 재직자의 교육 활동 허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SW·AI 분야 경력자와 퇴직자 및 경력단절 여성 개발자에 대해 최신 기술 재교육 과정 이수 후 전문강사로 활용

■ 디지털 인재 역량 강화 기반 조성

- SW, AI 등 디지털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우선지원하고, 취직후 後 일부(약 70%)를 갚는 '한국식 휴먼캐피털 제도' 도입
- 기존의 시대학원, 이노베이션아카데미, SW마에스트로, 이노베이션스퀘어 등을 통한 인재 양성 지원 강화, 'SW중심대학'은 지방대학을 거점으로 두 배 이상 확대

경직된 학교를 혁신하고 공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의무교육단계 기본학력 책임 강화

- 경계성 지능 학생 및 기본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
- 초등 단계부터 기본학력을 다질 수 있도록 기본학력전담교사 확충·배치
- 초등 단계부터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K-에듀버스 기반 개인 맞춤형 수업과 기본학습역량 진단 및 학습 보정 실시

■ '지역에서 함께 배우는 행복한 요일(지요일)' 도입

- 일주일에 하루 또는 교육과정의 20% 수준은 지역의 역사, 지리, 생태·환경, 예술, 스포츠 등과 결합한 현장 체험형 진로교육 실시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역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 강화
- 교육기반 확충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력단절 여성, 지역전문가 참여

■ 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교육 프로그램 도입

- 중학교 졸업생 중 희망자 대상 보충학습·진로체험 제공 전환학교제도 도입
- 고교졸업 후 대학 미진학자 대상 '한국형 갭이어' 도입

■ 기후·생태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강화

-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탄소중립학교·대학탄소중립캠퍼스 단계적 도입
-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탄소중립학교로 운영
- 친환경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 탄소중립문화 및 환경생태교육 중점 실시

■ 국가교육과정의 실질적 분권화, 자율화 확대

- 고교학점제 모니터링, 수업의 질관리 및 평가 공정성 확보
- 교육과정 학년별 시간 배당 일부 교육청에 위임, 교육과정 간소화 및 교과서 범위 축소
- 고교학점제 일환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설계하고 운영하는 '창의학점제' 교육과정 도입

개방·융합형으로 직업교육 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 특성화고 지원 확대, 단계적으로 마이스터고·일반고로 전환 추진

- 특성화고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교육과정 및 교사 임용·양성 제도 혁신
- 산업현장의 유능한 인력이 실습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개방
- 특성화고를 신산업 중심 학과로 개편, 졸업 후 연계대학에 진학, 입시·학비 부담없이 일·학습을 병행하는 P-TECH(특성화고-전문대), P-TECH Prime(특성화고-4년제 대학) 도입
- 특성화고를 단계적으로 마이스터고나 일반고로 전환 추진

■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체제 마련

- 노동인권교육 강화, 산업직군·직종별 현장실습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현장점검 강화
- 현장실습생은 도제학생(학습근로자)으로 최저임금 적용
- 학습기업에 금리우대,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청소년 유해·위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습 폐지
- 공공기관·공기업 등 안전한 현장실습처 마련을 위한 범부처·지방정부 협력 강화

■ 직업계고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 중앙취업지원센터의 취업지원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시·도 취업지원센터 확대(권역별·직종별) 및 인력 보강, 지자체·기업체 연계활동 강화
- 학교별 취업지원인력(취업지원관 및 취업전담교사) 확대
- 졸업예정 학생, 졸업생까지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확대로 현장실습에 의존하는 직업계고 취업 관행 개선
- 실무형 직업교육 청년 일자리 '매치포인트' 사업 추진

■ 전문대간 컨소시엄 및 공유계약학과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 산업계 전문가와 공동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계
- 첨단·신산업분야 공유·협업 활성화
- 전문대-지방정부가 연계하여 지역특화 전문대 육성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추진하고 로스쿨의 문호를 확대하겠습니다.

- 사법시험 일부 부활 추진
- 전일제·주간 과정으로 획일화 되어 있는 로스쿨 운영을 다양화하여 문호 확대
 - 로스쿨에 온라인·야간 과정을 추가하고, 신규 인가도 추진
- 온라인·야간 로스쿨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비율 대폭 확대
-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입학한 로스쿨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 추진
- 각 로스쿨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익적 법률 사건에 참여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리걸클리닉 프로그램 내실화
- 로스쿨의 지역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 개선방안 마련

청년 미래 혁신인재 5만명을 육성하여 농업·농촌의 전환적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 농업분야의 각종 교육과정에 '혁신인재 아카데미'를 접목하여 혁신인력 양성체계 구축

ICT 강국 KOREA를 상징하는 ICT 랜드마크를 건립하겠습니다.

- 박물관-도서관이 함께 자리하는 한국의 ICT 랜드마크 'ICT 뮤지러리(MUSIRARY, Museum+Library)' 건립 추진

국민의 자산형성 및 합리적 소비를 위한 금융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통합 및 초·중·고교 등 찾아가는 금융교육 확산
- 경제와 금융에 대한 조기 교육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 추진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공약

Vision 02

II. 공정성장

☑ 20대 핵심 추진 과제

6. 기본소득·기본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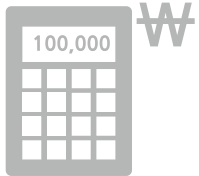
7. 기본주택

8. 공정질서

9. 균형성장



06. 기본소득·기본금융



- ☑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준비하겠습니다.
- ☑ 탄소세제 개편과 배출관리 혁신으로 탄소중립 기반을 닦겠습니다.
- ☑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토지이익배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 기본금융으로 금융불평등을 완화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준비하겠습니다.

-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기본소득 공론화**
 -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 및 지급기준·방안 등 결정
- **전국민 보편기본소득 추진**
 -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동의를 받아 전국민 대상으로 보편기본소득 지급
 -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말 연 100만원을 목표로 추진
 - 토지이익배당과 탄소배당을 재원으로 추진
 -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 추진
- **청년기본소득 지급**
 - 23년부터 만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 지급 추진
-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 단계적 지원 추진
-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 및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 지급
- **아동·청소년수당 지급 대상 확대**
 - 현행 만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아동·청소년수당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7년에 만18세까지 지급
- **장년수당 지급**
 - 만60세 퇴직 이후부터 공적 연금 수급 전까지 연 120만원 장년수당 지급

탄소세제 개편과 배출관리 혁신으로 탄소중립 기반을 닦겠습니다.

■ 탄소세 도입 및 탄소세제 개편 추진

- 국제 동향과 국내 산업 현황 등을 고려한 탄소세 도입 단계별 추진
- 탈탄소 산업 전환, 에너지복지 지원, 기본소득 등의 재원으로 활용
- 기존 교통환경에너지세,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에너지 세제 혁신과 탄소세제 전면 개편 검토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 혁신

- 발전업종의 유상할당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 연료와 상관없이 전환부문에 동일한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통합BM) 적용 추진
-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배출량, 연차별 감축률 등 투명한 정보 공개
- 제3자 참여 확대와 선물거래 등 파생상품 도입으로 거래시장 활성화 유도

■ 탄소중립-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추진

- 연기금 등 공공분야 재원의 국내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 투자 전환
- 탈탄소 기술 개발 및 관련 신산업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활성화 추진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토지이익배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토지이익배당제 도입

- 토지이익배당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
-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도입 추진
- 토지분 종부세와 재산세는 토지배당과의 이중과세 방지

기본금융으로 금융불평등을 완화하겠습니다.

■ 기본대출 도입

-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 대출
-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
-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
- 연체 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 마련 추진

■ 기본저축제도 도입

- 국민 누구나 일정액(5백만원~1천만원) 한도에서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저축할 수 있는 기본저축제도 도입
-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은 구조로 설계하여,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 추진

■ 불법 사채 및 불법 대부업 근절

- 이자제한법 위반 불법대부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 무효화
-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인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
- 금융약자 대상 악성범죄 처벌 강화
- 특별사법경찰 수사 및 단속을 통하여 불법 사채를 발본색원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교육, 피해상담 및 법률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시스템 구축

07. 기본주택



- ☑ 내 집 마련을 위한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 ☑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 취득세 인하를 통하여 실거주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으로 국민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월세 세액공제를 늘려 세입자의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 재개발·재건축, 신속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 ☑ 1기 신도시를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 ☑ 주거취약계층 사회주택과 중산층 공동체주택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고히 정립하겠습니다.
- ☑ 많은 국민이 부동산 개발·운영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 전국 총 311만호의 주택(기존 정부 발표 206만호+105만호 추가)을 신속히 공급

-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
- 기본주택(임대형)은 저렴한 임대료·고품질·장기간 거주 주택으로 80만호 공급
- 기본주택(분양형)은 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른 다양한 선택 기회 부여를 위해 누구나집형*, 건물분양형,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공공분양형으로 60만호 공급
* 사전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 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 공유
- 택지공급가격기준 변경(감정가격→조성원가), 분양가상한제 민간 적용, 분양원가 공개 확대하여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
- 신규 공급물량의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
-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호는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 무주택자,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비롯한 서민·실수요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모기지 대폭 확대

■ 서민·실수요자의 금리상승에 따른 고통 경감

-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전환 프로그램 마련
- 잔금대출이나 전세대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 대출한도 상향 등 공적 보증 확대
-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보증한도 증액
- 청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 적용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이직, 취학 등 일시적 2주택자이지만 종부세가 부과된 사례 구제
- 상속지분으로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가 부과된 사례 구제
- 투기 목적이 아닌 종종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
이나 고향집 등에 대한 종부세 종과사례 구제
-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 종부세 납부 연기

취득세 인하를 통하여 실거주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50% 감면 기준 조정
 - 수도권 4억, 지방 3억에서 수도권 6억, 지방 5억으로 상향
- 취득세 최고세율 3%의 부과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으로 국민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과세 부담 완화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비율 등 하향조정
- 부동산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항목에 대한 제도 개선
 - 공시가격으로 인한 복지수급 탈락, 근로장려금 조정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계수 적용

월세 세액공제를 늘려 세입자의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이월제도 도입
 -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향후 5년간 이월 가능
 - 청년 월세 세액공제 확대로 두달치 월세 지원
- 공제율 인상 : 10%~12% ⇒ 15%~17%
- 주택요건 완화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재개발·재건축, 신속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 신속협약제 도입과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 대폭 단축
 -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개선
- 공공재개발 시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 공공기여 비율 탄력적 조정
- 고도제한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에 생활형 사회간접자본 등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 강화

1기 신도시를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신도시 특별법 제정
 -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 완화
 - 4종 일반주거지역 적용,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사업 지원
 - 주요 역세권은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조성

주거취약계층 사회주택과 중산층 공동체주택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주거취약계층 수요를 반영한 사회주택 등 공익적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
- 공동체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중산층 주거의 새로운 모델인 공동체주택의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 혼인 외 독립·동거·비혼·이혼·미혼출산 등에 따른 다양한 주택수요 포괄하도록 주거 정책 개편
- 1인가구 주택수요를 반영한 공유형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고히 정립하겠습니다.

- 실거주주택과 업무용 부동산의 부담·제한은 완화하고,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강화
-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경작자만이 소유, 농지투기 금지
 -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명령제도 실효적 강화
- 부동산정책의 신뢰 회복
 -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 비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 청년 주거 취약층 대상 임대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 관리 강화
 - 원룸·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청년 대상 불투명 관리비, 불법건축물, 불공정 임대차계약 관행 개선

많은 국민이 부동산 개발·운영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개발이익 공공환원의 원칙·수단·기준을 명시, 환원(부과·징수 및 사용) 투명 공시
 -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
 - 개발비용을 부풀려 개발이익을 축소하던 관행을 바로잡아 개발부담금 공정 부과 추진
- 개발이익인 실물자산과 연동된 코인 발행, 국민개발리츠 등으로 전국민과 이익 공유
- 사모리츠보다 유리한 세제지원 등 우호적 환경 조성을 통한 공모·상장형 리츠 활성화
- 앵커리츠(모리츠) 육성과 상장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자산증식 도모



08. 공정질서



- ☑️ 공정한 경쟁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 ☑️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의 선도국이 되겠습니다.
- ☑️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 글로벌 청렴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 ☑️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 기업의 윤리·준법 경영을 촉진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 공매도 차별금지 등 자본시장 불공정을 해소하겠습니다.
- ☑️ 시세조종과 주가조작을 근절하겠습니다.
- ☑️ 현금 없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겠습니다.
- ☑️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 미등록 전자금융업자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 ☑️ 보험소비자의 피해방지 및 지급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 ☑️ 지역금융 활성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포용금융을 강화하겠습니다.
- ☑️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ی겠습니다.
- ☑️ 국가재정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 ☑️ 예비타당성 수행 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습니다.
- ☑️ 대학입시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 사회 전반의 동등한 성별 대표성과 균형 있는 참여를 도모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강화**
 -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의 기능과 인력 확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내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지원범위를 대리점 등 공정거래 전 분야로 확대하고 독립화 추진
 - 기업결합(M&A) 심사에 대한 수수료 제도 도입
 - 일감 몰아주기 모니터링 강화 및 전속고발권 폐지 등 제도 개선
 - 공정위 의결서 디지털화 체계 구축
- **소상공인·대기업 등 각각의 수준의 맞는 과징금 체계로 불법행위 억제 효과 확대**
- **투명한 조사상황 공개(통지 의무 입법화)로 공정위 사건처리 신뢰 제고**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의 선도국이 되겠습니다.

- **전자상거래 갈등조정 국제기구 설립 추진**
-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피해 방지 방안 마련**
 -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결성권과 협상권 등 부여
 - 공정 플랫폼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 플랫폼 기업과 이용사업자 등과의 상생·연대를 위한 자율기금 조성 추진
 - 온라인 플랫폼 거래 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기반 정비
- **거대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 제도 재정립**
- **소비자간 거래에 대한 피해방지 및 구제 제도 마련**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 결성 및 협상권 부여 추진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갑을관계 시정 및 공정 경쟁질서 확보 추진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 확대 및 이행관리 강화
-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확대
 - 지방정부에 조사권, 고발요청권, 시정권고 권한 등 부여 추진
 -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확대 및 공정위 지방사무소 확대 설치
- 불공정 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벌배상
 - 징벌배상액 및 징벌배상 범위 확대
 - 자료제출명령제 확대
- ESG 경영 강화가 하청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담전가 방지책 마련
- 가맹점·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 안착 지원

글로벌 청렴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 부동산 정보취급 국가기관에 대한 투명성 확보 체계 강화
 - 이해충돌방지법의 철저한 시행 준비 및 점검체계 마련
- 국민신문고 활성화로 사회갈등 해소 노력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선 보호, 후 검토' 체계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신고자 보호
 - 신고자 인적사항 유출, 신고자 색출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포괄적으로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
- 공공사업 비리 발생 시 계약해지·부당이익 환수 등 청렴이행서약서 실효성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부문 부패방지 기능 강화
 - 검찰, 공수처 등의 수사과정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 조사대상으로 확대
 - 공공 부문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 조사 권한 강화
- 공직자의 부패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의 벌금 형량 강화
 - 공직자의 민간기업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강화 제도 개선 추진
 - 지속적 거래관계에서의 부당한 금품 수수 금지 등 민간분야 갑을관계에서의 부정비리 예방 대책 강화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상생기반의 기업가정신의 확산 프로그램 강화**
 - 사회적 상생가치 확산을 위해 학생부터 청년 창업가를 중심으로 상생의 가치를 기업가 정신으로 승화하는 교육 확대
- **기업의 일자리 투자 확대를 위한 일자리 환류세제 강화**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고용유지 과세특례, 고용증대세제 등 확대 추진
- **자발적 상생한 기업 제도화 및 참여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마련**
 - 사회적 합의로 추진되어온 자생한 기업을 제도화하여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상생협력 우수기업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상생협력 활성화 유도**
 -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해 업종·입지에 대한 규제 특례 방안 마련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 제도로 중소기업의 기본적 공정 안전망 구축**
 -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조사, 구제 등 피해구제 강화
 - 지방정부에도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 **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강화**
 - '기술분쟁조정관리제도'를 도입해 실질적 구속력 강화
 - 기술보호 전문가의 진단 바탕으로 단계별 맞춤형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선도기업을 5년간 1,000개 육성
- **기술분쟁 조정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 기술탈취 등에 따른 분쟁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 할 수 있는 중소기업 분쟁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기관과 연계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등 '올'의 권리보장 방안 마련**
 - 하도급·수위탁 거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
 - 납품단가원가연동제 도입 및 기업간 거래에 대한 공동행위 허용 등 추진
 - 국가 계약 발주 책임 강화로 공공사업 과정의 하도급 불공정 근절 추진
- **플랫폼 거래환경에서 중소기업의 '공정 안전망' 구축**
 -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알고리즘 이용 부당행위 피해 방지

기업의 윤리·준법 경영을 촉진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증권분야에 한정되어 있었던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고, 분야마다 달리 규율되고 있는 징벌배상제도를 통합하여 일반법으로서 적용을 확대·강화
- 기업의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촉진
- 미국 사례처럼 분식회계 등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수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 추진
- 임의규정인 집행임원제(상법 제408조의2) 내실화 추진

공매도 차별금지 등 자본시장 불공정을 해소하겠습니다.

- 개인과 외국인투자자간 공매도 차입기간 차별을 금지
 -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 기업의 인수·합병, 물적 분할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여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
- 대주주 탈법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단속 역량 강화,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 대주주 전횡을 막고 대주주와 연계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

시세조종과 주가조작을 근절하겠습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불법이익을 환수하고 강력 처벌
- 대주주, 경영진 및 내부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내부고발 활성화
 - 자본시장 참여 제한 또는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식을 도입
-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하여 악성 주가조작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징벌과 배상 강화

현금 없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겠습니다.

- 현금 없는 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디지털 화폐 도입
-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 예금계좌 도입 추진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상자산 법제화 조속히 추진
 -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다양한 사업 기회 보장
 -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 투명화
 -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호규정 마련
- 가상자산 공개제도(ICO) 허용 모색
 -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
-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추진
 -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
-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
- 가상자산시장 모니터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미등록 전자금융업자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 머지포인트와 같은 미등록 업체의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등록을 확대하고, 이용자 예탁금을 별도 관리하여 파산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 추진
-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해지는 디지털 금융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화
- 첨단기술 활용, 수사역량 강화 등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 피해자의 가해자 둔갑 등 보이스피싱 전반의 문제 해결을 위해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가해자 처벌 수위 상향

보험소비자의 피해방지 및 지급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 보험소비자의 자발적 고지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불이익 방지
-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최소화
-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그리고 병의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 추진
-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

지역금융 활성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포용금융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정부가 출자하는 지역은행 설립 지원
- P2P, 크라우드 펀딩, 가상자산 투자 등을 사칭하는 새로운 형태의 미등록 영업행위 및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규율 강화
-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금융서비스 편리성 제고
- 추심연락 총량 제한 등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채권 추심 부담 경감
-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한정책임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누구나 담보대출' 등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 추진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구분 평가하여 기관별 맞춤형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공공기관 평가단과 평가기관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관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ESG 평가 체계 도입
-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투자시 대상 기업의 ESG를 고려한 평가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ی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구분회계제도 적용 확대를 통해 책임경영 확립, 방만경영 방지 및 재무건전성 제고
- 부채 발생 관리 및 재무건전성 평가 강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 강화
- 공기업 등 공공기관 의사결정 및 관리체계 혁신을 통해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의 균형 확보

국가재정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성과평가시 성과 저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예산편성시 부처간 동일목적 유사사업 조정 및 성과지표 제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 재정전략회의 기능 강화, 재정 칸막이 철폐로 포용과 공정성장을 위한 재정개혁 추진
- 투명한 재정정보 공개,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도입 추진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혁

예비타당성 수행 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습니다.

- 예비타당성 요청 기관과 협조적 예비협의를 통해 자료 보완에 따른 기간 단축
- 예비타당성조사 전문 기관 및 인력 양성

대학입시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대입 공정성 위원회' 설치 및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

-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통해 각 대학 수시전형 과정 모니터링 및 신입생 선발 결과 분석 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 제공
- 수시전형의 모범 사례 발굴·전파, 입시 부정 철저 조사 및 엄단
- 정부 선발 '공공 입학 사정관제'로 수시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사교육 의존도 높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

-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와 검토에 교사 참여 확대
- 수능 문항 검토에 대학생 참여 추진

■ 대입 전형 선발 인원 합리적 조정으로 학생선발의 공정성 제고

- 수시 전형 선발 인원이 과도하게 높은 대학의 수시 정시 비율 합리적 조정

■ 국가교육위원회 주도 2028학년도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설계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일자리 창출

- 디지털 전환 135조원 투자와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 양성
- 디지털 기술의 전산업분야 융합으로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혁신
-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녹색일자리 창출
- 돌봄·간병·보육 및 공공보건 일자리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

■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아우르는 일자리전환 정책체계 구축

- 일자리정책을 정합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
- 경제·사회정책 전반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는 일자리전환기본전략 수립
- 일자리 분석, 맞춤형 훈련·상담, 일자리 이동을 연계하는 일자리전환 플랫폼 구축

■ 공정한 일자리경제로 정책체계를 개편하고 일자리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

- 기획재정부에 일자리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을 부여해 일자리전환을 총괄하도록 개편
-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하고 업종·계층·지역 관계자의 참여 보장
- 일자리서비스 기능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관련 집행조직을 국민 편익에 맞게 개편

사회 전반의 동등한 성별 대표성과 균형 있는 참여를 도모하겠습니다.

■ 기업의 성평등 경영 지원 확대

- 기업의 ESG 평가지표 상 성별다양성 항목 비중 확대
- 공적 연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요소 고려에서 성평등 관점 확대

■ 군 사관학교 등 제한선발제도 개선

- 여성 모집 비율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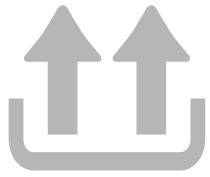
■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통합정부 균형내각 구성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 확대 및 성주류화 추진체계 강화

■ 정치영역의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도 마련



09. 균형성장



- ☑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 지방분권을 책임지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습니다.
- ☑ 지역투자 촉진과 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 ☑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여 혁신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 ☑ '남부 수도권' 조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 중앙과 지방이 두루 발전하는 실질적 재정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 ☑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 하겠습니다.
- ☑ 국가예산 중 농림수산물분야 예산을 5%로 확대하고, 분권·협치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 농촌 일손 걱정을 해결하고 청년·여성 미래 주체를 육성하겠습니다.
- ☑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어촌지역 소멸방지 등 '잘 사는 어촌,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 해운-조선-수출입의 상생경제 시스템 추진으로 해운재건을 완성하겠습니다.
- ☑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 대학체제 대전환으로 균형발전과 대학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과학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겠습니다.
- ☑ 누구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 국가를 구현하겠습니다.
- ☑ 도서민의 단절된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 스포츠 클럽을 육성하겠습니다.
- ☑ 지역 특화 관광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 국가 균형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 군사시설 인접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지자체 지원 및 위기대응 기능을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방상생발전위원회” 설치
 - 수도권·대도시는 저출생사회정책, 지방소멸지역은 지역개발정책을 처방하여 상황에 맞는 적극적 대응 추진
- 초광역 단위의 산업-현안 중심의 메가시티 활성화
 - 부산·울산·경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남권 메가시티를 전국단위로 확산하여 지역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메가시티에 대한 행·재정지원 강화

지방분권을 책임지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자치분권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능 강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습니다.

-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 행정부 등 추가 이전 추진

지역투자 촉진과 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 지역투자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으로 지역투자 지원제도 체계화 추진
 - 허브기업 중심의 기업군 이전 촉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초광역 협력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산업 발굴 및 패키지 지원
- 스마트 그린산단과 주변도시를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 일과 삶이 공존하는 복합산업 공간 조성 추진
- 산업단지, 경자구역 등에 첨단투자지구와 산업융합지구를 지정하여 국내외 첨단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산학협력의 활성화 추진
- 지역산업 전주기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산업 생태계 안정 기반 마련
 - 산업위기대응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지역경제 회복과 산업전환 지원
-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가 발굴로 지역활력을 높이고, 성공모델 조기 창출
-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를 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
 -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산학융합지구 등과 연계 추진
 - 기업의 도시개발 자율권을 강화하고 배후지역의 주거·교육·의료·문화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
-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또는 국내복귀 기업에 세제 지원 확대 검토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여 혁신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 국민 여론을 수렴해 지방이전계획을 조속히 확정·시행

‘남부 수도권’ 조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산업과 일자리를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 수도권 조성
- 독립 도시국가에 준하는 혁신 거점도시인 ‘신산업 특화수도’를 2곳 이상 조성
- 가덕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수소트램, 영호남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등 교통인프라 및 사회기반 시설 확충

중앙과 지방이 두루 발전하는 실질적 재정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 국세:지방세 비율 6:4를 목표로 추진
- 지방 간 재정불균형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 하겠습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하여 경제적 기본권 보장
 -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 촉진
- 임기 내에 농어촌지역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을 각각 인상
- 난개발로 훼손된 농촌을 농어촌공간계획 제도화로 쾌적하게 정비
 -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으로 농촌다움을 체계적으로 유지보전
 - 축사·공장 이전 등 공간정비와 정주환경, 경제기반, 사회서비스 등 패키지 지원
- 「농촌재생뉴딜 300」프로젝트(행복농촌) 추진으로 300개 읍면권 생활권 정비
 - 농촌기본주택, 혁신학교, 마을실버타운 조성
 - 농촌재생 활동가, 마을주치의, 생활 돌봄 제도 도입
 - 농촌 '체험-교류-살아보기-이주-정책'을 일괄 지원하는 '도농융합 상생마을' 조성
 -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치유 농장·마을, 치유 지구를 제공하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 건강보험과 연계, 민간 건강관리 손해보험 상품화
- 소멸위기지역 1가구 2주택 비과세 범위 확대로 농촌 주택 이용 활성화
 - 주말 농촌주택(3村 4都) 추진으로 도시민의 소멸위기 농산촌 거주 확대

국가예산 중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5%로 확대하고, 분권·협치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농업농촌 및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확대

- 탄소중립 실천, 토양탄소저장 확대, 친환경유기농업 등 환경생태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동물 복지·친환경자원순환 축산·조건불리지역 영농 등 실천농가에 직불 지원
- 공익형직불금 미지급 농지 중 정당한 농지는 선별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추진

■ 농정 예산구조를 개편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농가직접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자치 분권형 농정을 실현하고 중앙-지방정부간 협치 제도화

■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및 설치 확대로 농업인 중심 농정 실현

- 예산 편성, 농정 협의 등에 농업인 참여 거버넌스 강화

농촌 일손 걱정을 해결하고 청년·여성 미래 주체를 육성하겠습니다.

■ '농업인력지원법'을 제정하여 농업 인력난 해소

- 전국·광역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및 지원강화
- 지역단위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 및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처우 개선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농지확보 등 원스톱 지원강화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급대상 및 기간 등 확대
- 청년농업인 '체험-준비-심화-독립'을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 농촌기본주택, 창업자금, 농지(임대, 구입), 멘토링 패키지 지원 확대
- 청년농업인의 농지 임차기간 및 육성자금 상환기간 연장
- 상속 세제 개편 방향과 연계하여 영농상속 공제한도 상향 추진

■ 여성 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여성농업인 중앙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여 전국 여성농업인 협력활동 플랫폼 구축
- 지방정부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설치 지원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어촌지역 소멸방지 등 '잘 사는 어촌,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뉴딜500*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촌 삶 공간 만들기 사업 시행 및 내륙 어촌 마을에 대한 강마을 재생사업 신설

* '소득·일자리 창출(창업, 귀어귀촌 연계)+주거 안정(빈집정비, 임대주택)+삶의 질 개선(생활SOC 구축)+안전(여항시설 개선)을 연계한 '3+1' 사업으로 확장

- 청년 어선임대사업 신설 등 청년귀어귀촌 지원
-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산 공익 직불제의 지급대상과 지급액 확대
 - 휴어기에 어선원 생활안정지원제도 마련
- 어가 경영부담 감소 및 소득 안정 추진
 - 군 급식 및 학교 급식용 수산물의 국내산 공급 추진
 - 저온보관시설 및 양식업 등에 농사용 전력 확대 적용 추진
- 연안 수변공원 조성 등 연안정비로 해안가 안전을 강화
- 해양관광지구 지정, 해양치유산업, 마리나산업, 레저관광산업 등 육성으로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추진
- 도심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대

해운-조선-수출입의 상생경제 시스템 추진으로 해운재건을 완성하겠습니다.

- 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통한 친환경 고효율 선박 발주 및 컨테이너 박스 확보 지원
 - 수출입 물류망 안정을 위한 중소선사 특례지원과 국적선사 컨테이너 선복량 확대 및 동남아, 유럽 등 해외 항만 터미널 확보 지원
- 친환경선박 펀드, 노후선박 폐선 보조금 등 상선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추진
-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제도 도입을 통한 선박금융시장 육성 추진
- 전 물류구간 스마트 운영체계 구축
- 우수선화주 인증 제도를 부정기 선화주까지 확대 및 공제혜택 강화 추진
-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
 - 新해양산업 육성 및 기술 확보 추진
 - 자율운항선박사업 클러스터 구축, 디지털 종합해상교통관리체계 구축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탄소중립 그린도시 100개 확대를 목표로 추진

- 향후 5년간 전국 100개소(근린생활권)를 대상으로 맞춤형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 지방정부 탄소중립 지원 체계 구축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및 광역·기초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 지원과 네트워크 등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대학체제 대전환으로 균형발전과 대학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산업체-지자체-대학 동반성장형 '지역대학혁신체제' 조속히 확대

-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 교육비 집중 투자
- 지역에 따라 초광역 단위 '지역대학혁신법인' 설치
- 학부단위, 권역별 공유국립대학 체제 및 국·사립대학 공유체제와 공동입학·학위 등이 가능한 연합체제 구축
- 지역소재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지역 출신 우선 채용 강화 등 지역 정착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와 정주여건 마련
- 정부 내 '대학서열해소위원회' 설치

■ 대학 전공과 직업 간 미스 매치 해소

- 각 부처 산학연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정해 통합적 기획 추진
- 대기업·중견기업 계약학과 활성화 및 내실화, 대학생 진로 및 취업지원 강화
- 대학(기술지주회사)이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공동투자·인수하여 운영
- 산업체 취업 및 재교육 기능을 하는 계약학과에 대해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평가 인증제 도입

■ 대학평가제도 개선 및 규제 개혁

- 사학비리 근절 추진
- 대학 재정 여건 개선 가능성이 없는 한계대학 구조조정
- 평가제도 통합 및 선 재정지원 후 평가 체계로 전환
- 대학 운영 상 불합리한 규제 대폭 개선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과학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겠습니다.

-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R&D 투자방향을 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 확보
- 지역대학 중심의 거점연구소 구축과 예산 지원 확대
-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육성하고 공급
- 지역별 특성에 맞춤형 민·관·학 공동협력 지역인재 혁신 플랫폼 구축
- 바이오-의료 혁신 허브 클러스터 구축, 탄소중립 거점연구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 계획 추진
- 지역의 연구산업 기업 육성으로 연구산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창출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되는 대형핵심연구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누구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 국가를 구현하겠습니다.

- 누구나 쉽게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생활 SOC를 적극 활용한 '디지털 기본역량 센터' 설치
- 디지털 접근권 보장
 - 보편적 서비스로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디지털 접근권 보장
 -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기기·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스마트 기기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 국민의 편리한 데이터 이용을 위해 공공시설과 도심 등 다중 이용 공간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및 품질 향상
-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교육 확산
 - 디지털 소외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장·노년층 등)에 수준 단계별 SW·AI 맞춤형 교육으로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SW·AI 교육과정 수강 지원
 - 기존 직업훈련 프로그램 전 영역에 디지털역량 교육 포함
-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 마련

도시민의 단절된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배가 안다니는 섬이 없도록 하고 모든 도서를 1일 생활권화 추진
 - 택배비용 부담 완화 추진
-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천원여객선, 내륙인 대상 명절 할인 등을 통해 도서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섬 주민·섬 방문객 이동권 보장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 스포츠 클럽을 육성하겠습니다.

- 지방체육회 지원을 통한 지역체육 활성화
- 지역중심의 스포츠 종목 육성과 지역 스포츠시설 등을 활용한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지원
- 지역특화 비인기스포츠종목 동호회 육성 지원

지역 특화 관광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지역 문화자산 활용한 지역콘텐츠 발굴, 글로벌 관광상품 육성
- 야간관광 경제 육성을 통한 지역(골목, 마을)경제 회복
- 지역 강소 관광기업 육성·지원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환경현황조사 공탁제의 도입 및 단계적 확대 추진
 - 공공기관 주도로 신뢰성 있는 조사 진행 및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확대
- 환경영향평가 신기술을 개발·보급하여 의사결정을 지원
 -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디지털 트윈 등 4차산업 기술을 통해 과학적 예측·평가 실현
-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 공개로 투명성 확보, 주민 의견수렴 등 참여 기회 확대

국가 균형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비중 상향 조정

군사시설 인접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민간인 통제구역을 절반으로 축소하여 접경지역 주민 고충 최소화
- 군 사격장 및 기동 훈련장 환경을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안전 및 재산권 보호
 - 방음 공사, 소음피해보상 등 실질적 대책 마련
- 미 활용 군용지 개발 및 무단 점유 군용지 지속 반환 추진
- 접경지역 주민의 희생에 따른 보상 및 지원 강화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확대
 - 접경지역 주민 우선채용과 안정적 고용 계약 지원
 - 군의 미사용 유휴부지를 지방정부와 함께 개발가능토록 개선
 -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적극적 지원
- 한강변 철책 및 지뢰 제거, 지역 주민에 개방
- 후방지역 주둔부대 지뢰제거와 경계시스템 현대화 및 등산로 등 공원 조성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형



Vision 03

III. 민생안정

☑ 20대 핵심 추진 과제

10. 일하는 사람들 권리보장
11. 안전사회
12. 돌봄국가책임
13. 의료격차해소
14. 문화지식강국
15. 민생활력



10. 일하는 사람들 권리보장



-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전국민 고용보험'을 조기 실현하겠습니다.
- ☑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출산휴가와 부모 육아휴직을 보장하겠습니다.
- ☑ 국민 누구나 평생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으로 산재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감축하겠습니다.
- ☑ '전국민 산재보험'을 도입하여 '다치면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과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 ☑ 영업양도 등 사업 이전시 고용승계 제도화로 하청업체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 지역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동전환으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ILO 사회보장 협정을 비준하여 국제적 수준의 국민 생활보장을 실현하겠습니다.
- ☑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 ☑ 임금·채용 등 성차별과 성희롱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 ☑ 실업 예방과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플랫폼종사자와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혁신정부와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기본법’ 제정

-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주로’ 직접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일하는 모든 사람(노무제공자)’의 권리 보장
-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할 권리, 안전과 보건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리 보장 및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전국민 고용보험’을 조기 실현하겠습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고용안전망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 등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인 소득기반 고용보험료 체계 조기 구축
- 특고·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차질없이 실현

■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를 위한 노사합의 추진 지원
- 자발적 이직자의 생애 1회 실업(구직)급여 보장 추진
-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게는 급격한 소득 상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고용보험 사각지대 단계적 해소

- 일정 소득 이상 초단시간(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근로자, 65세 이상 취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
-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출산휴가와 부모 육아휴직을 보장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평생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부모 육아휴직 보장하여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

- 예술인·특고·(계약기간 만료된)비정규직·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단계적으로 지급 추진
- 임금근로자로 제한된 일·생활 균형을 위한 부모 육아휴직(급여)을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 확대

■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전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체계 구축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기간·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 '직무능력은행' 구축으로 개인이 교육·훈련 등으로 취득한 직무능력정보 통합 관리·활용
- 정부-지방정부-기업 협력 양질의 직업훈련 모델 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지원금 2배 수준 확대

■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기업훈련 지원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국가기술자격 취득 국민편의성 제고

- 자격시험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
- 직업계고교의 교육-자격시험 연계로 비용 경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으로 산재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감축하겠습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 재활, 복귀를 총괄하는 전문·독립기관인 ‘노동안전보건청’ 출범
- 후진적 산재사망 ‘Zero’ 추진
 -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장 단위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강화 및 안전보건교육 확대
 - 산재사망 다발 사업장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 할증제도 강화
-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 산재예방 예산 2조원으로 확대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폭 지원
 - 직업·건강위험요인별 맞춤형 건강진단(비) 지원
 - 특고·플랫폼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를 전담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주치의’ 제도 도입
 - 야간노동 과로사 방지 및 감정노동 등 정신건강 장애 예방 방안 마련
- 산업안전보건 감독강화
 - 매년 기업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사고사망 등 산재발생현황,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계획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 신재생·수소 에너지 등 관련 새로운 안전보건기준 마련
 - 도급 위험작업시 2인 1조 이상 작업 등 예방조치 강화
- 산업안전보건 노동자 참여 확대
 - 폭염, 혹한 시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권 도입
 - 일정 규모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전국민 산재보험’을 도입하여 ‘다치면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 특수고용노동자 전속성 요건 폐지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타 사회보험제도와 연계하여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산재보험 제도 도입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비법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추진
- 산재보상제도의 보장성 강화
 - 일하다 다친 사람에게 ‘선 보장 후 승인(상병수당 연계) 제도 도입
 -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추진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제 보호대상 단계적 확대
 - 노동관계법령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단계적 적용
 - 근로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관련 규정 개선
 - 근로자성 추정 규정 신설 및 입증책임 전환
 - 무기계약전환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근거 마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을 병행하는 효과적인 협력 모델 구축
 -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과 임금체불 등을 지도·감독
 - 근로감독관을 추가 증원
- 연금수급기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속 고용정책 발굴 및 지원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임금채권의 시효 연장 추진
 -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제외 및 공공입찰 제한
 - 피해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편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과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비정규직 및 소규모기업 노동자 차별 개선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 공공부문 건설업에 시범 실시 중인 적정임금제를 공공부문 조달영역에 확대 도입
 - ‘경기도형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
 -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방안 마련
-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업무 등 필수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원칙 명시
 -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방안 추진
- 비정규직·미조직노동자 이해대변시스템 구축
 -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대표” 제도개편으로 비정규직 대표 참여·활동 보장
 -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노동상담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지역밀착형 노동지원센터 전국확대 추진
 - 현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사각지대인 미조직 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한 지역노동복지기금 조성 지원
 -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을 위한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추진
- 차별 없는 노동시장을 위한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 직무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 등 임금제도 관련 개혁 추진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영업양도 등 사업 이전시 고용승계 제도화로 하청업체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후 단계적 도입

- 영업양도 등 사업이전시 노동관계 승계 제도화
 - 영업양도 등에 따른 사업이전(사업주변경)시 노동관계 승계
 - 승계대상 노동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 명시 추진
- 원청에 의한 하청업체 변경시 기존 하청업체가 수행하던 업무가 동일하게 계속되는 경우 노동관계 승계
- 승계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조건 변경과 부당해고 제한 추진

지역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지역고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기본적 제도 마련

- 지역사정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집행 지원
- 지역 일자리 효과적 창출·유지,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지원
-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 노·사·정 사회적대화 확대

■ 전문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담할 지역중심의 고용서비스 전담기구 설립 추진

- 중앙·지방의 고용정책을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부처별·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일자리 센터를 통합·재편

■ 청년맞춤형 고용 정책 추진

- 구직포기 청년 니트(NEET) 대상 ‘청년 위기 극복 1:1 프로젝트’ 맞춤형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 공공부문 면접수당 지급 의무화 및 민간기업 확산 유도를 통한 취업면접 지원
- 온라인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

■ 청년 고용률 향상 지원 정책 마련

-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비율을 기관별 정원의 3%에서 5%로 단계적 상향 추진

■ 각종 고용·노동정책 수립시 경제사회주체인 노·사의 실질적 참여 보장

■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및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제한
-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 반영

■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추진

- 사용자 및 근로자개념 확대
-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법적 노력

■ 사업장 취업규칙을 노·사 합의 ‘사업장협정’으로 변경 추진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동전환으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및 추진

- 근로시간 외 SNS 등에 의한 업무지시 금지 등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
- 시간외근로(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포괄임금계약 제한
-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주4일 또는 주4.5일제 시범실시 지원

- 노동자 건강권 및 기업 생산성 향상 위한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제시
- 4.5일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 시작
-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 제공

■ 가족돌봄휴가·휴직 등 지원 확대

- 가족돌봄휴가 대상·기간 확대 및 휴가시 유급지원
- 가족돌봄휴가·휴직 휴가사용권 보장

■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동전환 이행 및 지원체계 구축

- '정의로운 노동전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의로운 노동전환 로드맵' 마련
- 중앙 및 지역에 '정의로운 노동 전환 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및 특별지구 지원 실질화
- 전환대상 기업 노동자 및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사회안전망 제공 위한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실질적 지원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체계' 구축

- 노사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노·사 주도 훈련 지원 등 노동전환 이행력 담보
- 장기유급휴가훈련과 노동전환지원금 확대하고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지원금 확대를 통한 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 선제적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해 지역경제 회복과 산업전환 지원

ILO 사회보장 협정을 비준하여 국제적 수준의 국민 생활보장을 실현하겠습니다.

- 국제노동기구(ILO)에서 1952년에 채택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아동수당 및 상병수당, 국민연금(유족급여, 장애급여) 등 최저기준 미충족 제도의 확충 및 내실화를 추진
- ILO 사회보장 협약 비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충족을 위한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상위기준 협약의 비준 가능성도 검토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단일임금체계 도입 추진
- 사회복지 종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단일임금체계 도입 방안 마련 및 단계적 추진

임금·채용 등 성차별과 성희롱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계획 수립
 -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성별·학력·고용형태·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 항목 공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개선을 통한 실행력 강화
 -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도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확대
 - 돌봄 등 성별집중직군에 대한 가치평가단 설치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계획 수립
 - 공정임금법(Equal Pay Act) 제정 추진
- 노동위원회 산하 (가칭)고용공정위원회 설치
 - 시정명령권을 갖는 위원회를 통한 성희롱·성차별 구제제도의 실효성 강화
- 지방고용청 내 고용평등 전담부서 설치
 - 성차별, 성희롱 사건의 지도 감독 및 진정 처리 추진
-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 및 강화
-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 및 대국민 공표제 도입
- 전국 광역단위에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지원 기관 설치 추진
- 직장 성희롱 행위자 제재 강화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 ‘평생학습 계좌제’ 도입
 - 일부 저소득층에게 제공됐던 평생교육 바우처의 지급 대상을 확대
 -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전환기에 필요한 학습을 지원
- 평생학습 시민대학 체제 구축
 - 기초자치단체별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 및 중앙정부 행·재정 지원 체계 마련
 -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 연계 체제 구축
 - 중장년층의 이·전직 지원을 위한 대학교육 개방, 학업보조금 및 학자금 융자 등 지원
-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
 - 온·오프라인 교육기관을 연계한 학습·훈련이력 관리시스템 제공(K-MOOC, 디지털 집현전, 평생학습관, 방송통신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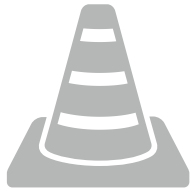
실업 예방과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플랫폼종사자와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프리랜서 및 플랫폼종사자의 협동조합 설립과 지원 확대를 통해 직업 안정과 역량 함양 추진
-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혁신정부와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정부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통한 국민 신뢰 확보
 - 국민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정부투명성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 적극적인 국민 권리구제 위한 '국가옴부즈만위원회' 설치 검토
 - 공직자 청렴성과 부패방지 강화 위한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
- 국민 주도의 열린 정부혁신 추진과 정책혁신
 - 국민 주도형 열린 정부혁신 체계 구축 및 법제도 정비
 - 디지털 가상정부(메타정부) 구축 통한 정부혁신과 정책혁신

11. 안전사회



- ☑️ 흉악범죄 재범률을 낮추는 등 범죄 대응체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 ☑️ 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극복과 피해구제를 준비하겠습니다.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 ☑️ 일상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 ☑️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 우리 사회 영웅, 국가가 지켜드리겠습니다.
- ☑️ 국민안전 제고를 위한 최고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 소방관의 건강과 복지를 국가가 더 책임지겠습니다.
- ☑️ 경찰·소방 책무에 상응하도록 처우와 보수를 개선하겠습니다.
- ☑️ 공인탐정제 도입을 통해 국민안전을 제고하겠습니다.
- ☑️ 민관경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생활안전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 ☑️ 국가미래를 뒷받침하는 정보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균형있게 다루겠습니다.
- ☑️ 식량 자급률을 높여 식량 안보 농업으로 대전환 하겠습니다.

- ☑️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통합 기상재난예보를 실현하겠습니다.
- ☑️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예방하겠습니다.
- ☑️ 미세먼지 걱정없이 숨 쉴 수 있는 푸른 하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합리적인 수도공급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 ☑️ 4대강과 지류·지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겠습니다.
- ☑️ 하천 수질관리를 혁신하여 깨끗한 강을 되찾겠습니다.
- ☑️ 국민건강 위협하는 해양쓰레기를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 ☑️ 농촌 불법투기 폐기물 국가책임 강화로 쾌적한 농산촌을 조성하겠습니다.
- ☑️ 스마트 유통시설 개선 및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로 국민 안심 수산물을 제공할 것입니다.
- ☑️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 '안전한 미래로(路)' 나아가겠습니다.
- ☑️ 건설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으로 건설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 ☑️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흉악범죄 재범률을 낮추는 등 범죄 대응체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 범죄경력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흉악범죄 재범률 하향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범고위험군 관리 강화 및 11 전담 등 보호관찰 인력 증원
-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상행동과 긴급상황에 24시간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확대·배치하고, 주거진입·강제수색 법적근거 보강
- 재소자에 대한 심리치료와 교육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

■ 청소년 범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강화

- 비행초기단계의 청소년에 대한 범죄예방교육과 심리치료를 확대
- 소년범죄 대응 전담조직 강화 및 소년법에 대한 보호관찰 강화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 추진

- 양형위원회에 시민참여 확대
- 벌금형·작량감경 등 양형기준 보완
-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

■ 범죄예방특별법 제정

-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예방대책 마련 및 점검 추진

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범죄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

■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

■ 범죄자가 내는 벌금을 피해자 보호 지원에 더 많이 사용하도록 법 개정

■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몰수·추징·환부 제도 개선

■ 소년범죄 피해자를 위한 임시조치·회복지원 강화 및 국선변호 지원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극복과 피해구제를 준비하겠습니다.

-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국민적 손해 배상 및 보상 등을 위한 국가재난기금(가칭)을 신설 추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 아동 강간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
-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처벌 강화
 - 공소시효 폐지 연령 기준 상향, 공소시효 기간 연장
-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지원 및 정보 보호강화
 -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인조력제도의 개선
 - 피해자 개인정보 및 피해정보 유출 방지 등 보호 조치 강화
-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제도 개선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제도 개선
 - 실거주지 동행 등으로 정보 접근성 향상, 고지 방법 다각화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거주지역 내 모든 세대로 확대
 - 신상정보 공개기간 확대 및 신상 공개 대상 세분화

일상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그루밍 조사 및 국제공조 관련 전문인력 확충
-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 디지털성범죄 대응 컨트롤타워 및 광역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
- 범죄 악용 우려 있는 변형카메라 관리 강화
 - 변형카메라 관련 관리제 도입 및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불법촬영 탐지기 고도화와 공급 확대 및 불법촬영 탐지 인프라 구축
-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기술개발 투자
 -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및 성착취물 유포·확산 예방
-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음성·영상에 '표시의무제도' 도입
- 전국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데이트폭력 처벌 법제화
 -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 스톱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
 -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자의 '보호명령제도' 도입 및 강화
 - 피해자와 주변인까지 신변안전 보호조치 강화, 신변보호 전담 경찰인력 확충
 - 피해자보호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 「스토킹처벌법」 개정, '온라인 스톱킹' 등 스톱킹 범죄 유형 확대
 -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글이나 그림전송, 개인정보 게시·배포, 감시 행위 범죄화
 - 메타버스 등 신종 플랫폼에서의 아동성착취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마련
- IT기술을 활용한 스톱킹·데이트폭력 범죄자 접근 차단 등 선제 조치 강화
 - 스톱킹·데이트폭력 범죄자의 접근 차단용 IT기술 개발 독려 및 상용화 추진
- 젠더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 체계 개선
 - 피해자 위기·위험 정도에 따라 다각화된 맞춤형 주거보호 서비스체계 구축
- 성폭력 범죄의 양형 감경 요소 개선 및 성폭력 2차 피해 보호 강화
- 수사 과정, 민·형사 재판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 보호 강화

우리 사회 영웅, 국가가 지켜드리겠습니다.

- 소방·경찰 등 제복입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공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공상추정제도 도입 추진

국민안전 제고를 위한 최고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보다 스마트한 현장 대응
 - 소방시설 수신기에 IoT 단말기를 부착하여 소방시설 이상징후 발생 시 관계인과 소방서에 실시간 전송체계 구축
 - 건축물 안전관리정보 DB(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AI(인공지능)를 활용·분석하여 맞춤형 안전관리 및 재난현장 소방작전 활용
 - UAM(도심교통항공), 웨어러블 로봇슈트 등을 활용하여 재난 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인명 구조활동 추진
- 안전약자에 특화된 소방서비스 제공
 - 중증질환자, 고령자 등 안전약자 적극 발굴 및 119안심콜 사전등록 확대·관리
 - 119 긴급구조의 사각지대인 농·어촌지역에 펌프구조대(Pump-Rescue) 확대·운영

소방관의 건강과 복지를 국가가 더 책임지겠습니다.

-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로 규정
- 소방관 직무스트레스 및 정신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힐링센터 설치
- 코로나19 등으로 출동이 많은 119구급대 4조 2교대제 도입으로 119구급서비스 제고

경찰·소방 책무에 상응하도록 처우와 보수를 개선하겠습니다.

- 경찰, 소방, 해경 직군을 공안직 보수체계 편입

공인탐정제 도입을 통해 국민안전을 제고하겠습니다.

- 공인 탐정자격증 도입
 - 실종자 수색, 물건의 소재파악, 개인의 권리 보호 및 피해조사 업무를 통한 국민 편의와 안전 강화

민관경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생활안전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치안봉사단체 지원 및 협력강화

국가미래를 뒷받침하는 정보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식량·백신·에너지 등 글로벌 위기 선제대응·국민안전 정보역량 강화
- 세계 주요국 정책·글로벌 트렌드·이슈 등 미래전략 정보 수집 역량 확충
-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및 방산 기술 보호 역량 강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사이버 안보 강화로 디지털 영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 대비
 - 국가안보, 기업거래정보,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및 핵심 인프라 보호 강화
 -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융합 보안, 인프라 보안, 신종 사이버 위협 대응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보안 신기술 개발·확보
 - 민·관 사이버 위협 대응 협력 및 사이버보안 훈련, 대국민·기업 대상 보안컨설팅 등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확립
 - 주요 동맹국과 사이버보안의 전략적 협력, 대응을 위한 '글로벌 사이버위기 대응 협력체계' 구축
- 정보보호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추진
- 첨단기술을 활용한 ID 탈취,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 근절 추진
- 사이버 위협 대응 정보보호 전문인력 및 지능형 공격방어 기술 분야 특화 전문인력 양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균형있게 다루겠습니다.

- 개인정보 불법 침해에 대한 과징금 실효성 강화,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 자기결정권 사각지대인 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권 강화
- 디지털 노동감시 환경 증가에 따른 적용지침 마련
- CCTV 증가에 따른 운영·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평가 강화
-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 드론 등 이동형 영상장비 급증에 대응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정비
-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자율보호 체계 육성
 - 우수기업 포상제도 등 자율보호 법·제도 기반 마련

식량 자급률을 높여 식량 안보 농업으로 대전환 하겠습니다.

- 식량자급률 목표 60% 달성 추진
 -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품목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자급 확대
 - 김치, 주요 축산물 등 기본 먹거리에 대한 자급목표 설정 및 자급 확대
- 공익형 직불제 내에 밀·콩 등 주요작물에 대한 '식량안보 직불제' 도입으로 식량자급 확대 추진
-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하고, 무분별한 농지전용 방지
- 밭 기반정비 면적 확대 및 밭 기계화율 제고
 -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가뭄 대응 위해 수리 시설 및 배수개선 사업 확대
- 평화 이행시대 남북 농업교류 및 평화농정 실현
 - 농산물 교류협력, 농업개발협력, 공동식량계획 등 단계별 교류 추진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통합 기상재난예보를 실현하겠습니다.

■ 기상·기후·환경·재난 정보의 통합 관리

- '예보-대응-모니터링'의 모든 단계의 통합관리로 국민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
- AI 등 4차산업 기술 기반 기상청-산림청, 기상청-농업·어업 간의 정보 융합
-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변동성 증가에 신속 대응 체계 마련
- 산사태 사전 경보를 1시간에서 48시간 전으로 대폭 개선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연재난 탐지·예측·예방시스템 구축

- 홍수, 산불 등 재난유형별 위험인자 빅데이터 분석하여 지자체 및 재난 대응 부처 적극 활용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 서비스 제공

■ 유해·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화학물질안전원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예방적 화학물질 관리체계 마련
- '정보없는 화학물질의 시장진입 금지'(No Data, No Market) 원칙에 따른 기업의 독성물질 등록 강화, 화학제품 등록제 도입·시행
-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용·폐기 등 화학물질 전생애(Life-cycle) 통합정보전달체계 구축과 대국민 정보 제공
-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신속한 구제·조사 및 치료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화학물질·독성물질 피해 관리 전담기구 설치
- 어린이·학생 활동 공간 납·석면 등 '유해물질 제로(환경안심인증)' 확대 지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 지속적인 추진

■ 환경 피해에서 구제까지 원스톱 실행체계 구축

- 환경피해 조사, 피해구제, 피해지원 등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립
- 환경성질환 연구, 진단, 치료 및 재활 등을 총괄하는 전담의료기관 확대 추진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예방하겠습니다.

■ 홍수취약 주요 지방하천의 관리 강화

- 홍수 대비가 시급한 주요 지방 하천의 홍수 피해 사전 예방 사업 지원
- 기존 하천 직강화 위주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수질·수생태 환경 고려한 생태 소하천가꾸기 사업으로 전환 추진

■ 도시형 통합물관리 도입과 도시침수 예방사업 추진

- 도시하천을 생태문화 공간으로 재구성, 국민의 하천 향유권리 확대 추진
- 홍수 예방, 수질·생태, 문화·경관, 하천-도시 연계 등을 결합한 도시형 통합물관리 개념 도입
- 도시하천의 하천-하수도-저류시설 연계, 배수시설 강화 등 침수예방사업 추진

■ 스마트 홍수관리 체계 도입

-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 기술과 연계한 댐, 저수지 등 수자원시설의 안전성 강화
-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디지털 트윈 등 댐-하천 연계 스마트 홍수관리 플랫폼 구축

미세먼지 걱정없이 숨 쉴 수 있는 푸른 하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 촘촘한 미세먼지 발생 관리체계 구축

- 배출단속기준 상향, 적용 대상 확대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강화
- 교통 분야의 저배출 구역 운영을 위한 도로변 대기질 측정소 대폭 확충
- 주민생활권과 인접한 소규모·영세 사업장(4~5종)의 방지시설 및 실시간 배출 모니터링 설비에 대한 설치·운영 지원
-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 운영 확대 및 주민참여형 관리체계 도입

■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관리 체계 구축

-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융합한 생활맞춤형 미세먼지 대응체계 '스마트 클린 도시' 확대 구축
- 어린이·청소년 통학·통원차량의 무공해차 교체 신속히 추진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
-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상습 교통체증 구간의 오염물질 확산 방지 추진
- 지하시설물의 미세먼지 포집 및 제거 사업 확대

■ 미세먼지 국제협력 강화

- 한·중 대기질 개선 양국 협력체계 '청천 계획'의 실효성 강화
- 동북아 대기오염방지 정보공유와 기술협력 추진
- '아시아·태평양 다자간 대기협약'을 주도적으로 추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합리적인 수도공급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 수돗물 전 과정의 평가시스템 도입 및 시민참여 활성화

- 원수·관망관리·정수·서비스 만족도 평가 등 전 과정 안전 평가시스템 구축
- 평가시스템의 시민참여를 통한 모니터링 및 감시 체계 보완
- WHO·수자원공사·지방정부 물안전계획 등을 고려한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 '수돗물 안심 서비스' 전국 확대 추진

■ 지역간 물복지 형평성 제고

- 수도사업을 일정 규모별로 통합하고 가능한 수도사업 구조를 구축해서 국민에게 격차없는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확대

- 국고 보조를 통한 취약계층 등의 자부담 완화 및 교체 대상 확대 추진
- 옥내급수관의 위생조치 등 적정 관리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신규 주택에 절수 장치 도입 추진

4대강과 지류·지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겠습니다.

■ 4대강 자연성 회복과 유역별 통합물관리 강화

- 4대강 보 처리 방안 이행계획을 포함한 자연성 회복 종합대책 수립 및 신속한 추진
- 4대강 유입 산단폐수에 대한 상수원 수준 관리 강화로 분류 수질의 획기적 개선
- 댐, 하천 등 유역별 물관리 기능 이전·통합을 통해 물관리 효율성 증대
- 농업용수 안정 공급을 위한 취양수장 개선 조속 진행
- 유역주민 물관리 참여 활성화 및 강 문화 복원·전승과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 지류·지천 연속성 증진 사업 확대

- 지류·지천에 설치되어 있는 중·소형 보 평가 및 연속성 증진 사업 추진
- 하천 자연성·회복력 증진 관련 연구 및 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추진

하천 수질관리를 혁신하여 깨끗한 강을 되찾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제도 혁신

- 가축분뇨 퇴·액비의 사용 경작지 면적을 고려한 축산규모 조정 검토
- 축산단지 내 축산업 운영 시 인센티브제 추진
- 가축분뇨 양분은행제도 도입 추진으로 양분 과잉에 따른 수질오염 예방

유역별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개선

- 대규모 처리장 중심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및 시설 고도화
- 유역 내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방류수 수질 강화 기준 설정 추진

지하수 개발·이용 체계 혁신

- 지하수보전지역 지정 확대 추진 및 인허가 제도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지하수 수요관리 강화
- 지하수저류지 설치 등을 통한 가뭄 등 비상 대비 지하수 인프라 구축

국민건강 위협하는 해양쓰레기를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국가해양쓰레기대응센터 기능 강화로 해양쓰레기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각 주요 연안·도서별 해양쓰레기 처리 시설 및 인력 확충

-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쓰레기 전처리 시설, 해양환경지킴이, 정화운반선 등 확충

연안·도서지역 해양쓰레기 복구 지원 강화

- 해양쓰레기 저감 사업 확대
- 침적 쓰레기 수거, 강하구 쓰레기 처리, 태풍 등 피해복구 지원 확대

광역 해양환경위원회 설립으로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

- 지방정부가 함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지원

어촌과 상생하는 해양 신재생 에너지 체계 마련

- 해상 풍력 등에 어업인의 참여 보장, 어업인 소득 확보형으로 상생 추진

해양의 난개발 차단 및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 해양 이용·개발에 대한 환경성 평가를 해양환경평가로 일원화

농촌 불법투기 폐기물 국가책임 강화로 쾌적한 농산촌을 조성하겠습니다.

- 신속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지원단,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올바로 시스템) 혁신 및 지자체 정보 공유 강화
- 불법폐기물 전담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불법투기 행위자 처벌 및 구상권 청구 강화, 불법투기 공익제보자 포상 확대 추진

스마트 유통시설 개선 및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로 국민 안심 수산물을 제공하겠습니다.

- 시설 개선이 시급한 노후 위판장을 저온 유통시설로 현대화
- 방사능 검사 장비·인력 등 인프라 확대를 통한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 강화 및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
- 어민의 양식보험 국고보조율 확대 추진
- 불법 조업을 확실하게 막고 해양경제 영토를 적극 확대
 - 불법어업 대응을 위해 국가 어업지도선 확대 및 노후선박 대체건조
-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수산업으로 전환
 - 친환경 어선 개발 및 어선대체 지원
 - 블루카본 해조류·패류 양식 추진과 바다숲 조성 지원
- 가두리 양식 등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R&D지원 확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음주시동 잠금장치 의무화 및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치료 의무화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 대상 차량 내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 습관적 과속(기준속도 초과 40km이상 / 연3회) 및 난폭·보복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기준 강화 및 재취득 금지기간 확대
-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 및 소음단속 강화
- 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위 확대 및 보호구역 내 감시카메라,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 안전시설 확충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법제도 정비

‘안전한 미래로(路)’ 나아가겠습니다.

- 빅데이터, AI기반 교통안전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 추진
 - AI기반 실시간 교통안전 예보체계 구축
 - 버스, 화물차 졸음운전 예방 등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체계 구축
 - 스마트 신기술 적용을 통한 안전점검 사각지대 해소, 과적·적재불량 차량 단속
- 어린이 중심의 교통안전 교육시설 확대 및 국가책임 강화
 -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확대 및 등·하굣길 안전 국가책임 강화
- 이륜차 관리체계 구축 및 보험료 체계 개선 추진
- 자동차사고 과실산정, 보험·정비업체 투명성 제고로 운전자 보험료 부담 완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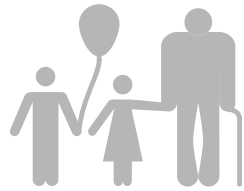
건설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으로 건설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 안전 책무를 강화를 통한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 건설근로자 사고 피해 보상하는 근로자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 건설공사 일요일무제를 공공건설현장에서 모든 건설현장으로 단계적 확대
 - 단, 건설공사 특성(재해복구, 격·오지, 도로 긴급보수 등)을 고려해 발주청 사전·사후 승인을 통해 일요일 공사 허용
- 일정규모 이상 공공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의무 도입 의무화
- 공공입찰 건설공사 페이퍼컴퍼니 단속 확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감염병,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등 인류가 직면 중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험 R&D 과제 선정과 해법 제시 중심의 임무지향형 프로젝트를 추진
- 지능형 통신망을 구축해 사이버 범죄, 보이스 피싱 등 생활 속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일상에서 유용한 국민체감형 과학기술 연구에 주력
- 코로나 바이러스, 조류독감, 구제역 등 국민의 삶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각종 바이러스 퇴치 연구와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R&D 투자 확대

12. 돌봄국가책임



- ☑ 돌봄국가 책임제를 통해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시키겠습니다.
- ☑ 유아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유보서비스를 보장하겠습니다.
- ☑ 일하는 모든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중심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형평성있게 지급하겠습니다.
- ☑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의료와 돌봄 서비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 노인·장애인의 주거·일상생활·복지 지원을 동시에 해결하는 지원주택을 확충하겠습니다.
- ☑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소득보장의 보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 장애인의 삶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으로 장애인 미디어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 어르신 건강관리를 국가가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고령(75세 이상) 은퇴농업인에게 '은퇴농 연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 사회서비스형 치유농업을 육성하여, 복지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치유경험을, 농민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 ☑ 코로나19 세대의 교육 결손을 회복하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 ☑ 농업인 안전보험 의무가입, 특수건강검진 확대로 농어업 분야 노동 안전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 남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1인가구도 안심할 수 있고 다양한 사회관계망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 ☑ 다양한 계층의 여성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 서비스 수혜자가 참여하고 이웃이 돌보는 공동체 돌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돌봄국가 책임제를 통해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시키겠습니다.

■ 어르신 요양돌봄 서비스 강화

-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전국적 확대
-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 구축
-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 간호·간병 통합돌봄 강화

-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제도를 재설계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
- 간호·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 제고

■ 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 지원

■ 초등 돌봄서비스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누구나 필요하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의 보편화 실현
- 초등돌봄교실과 마을 돌봄시설 획기적 증설, 돌봄전용교실 개선
- 국무총리 소속 돌봄 컨트롤타워 신설, 범정부차원의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

■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로 보육의 질 제고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서비스 제공
-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50% 이상으로 확대
- 교사의 임금 격차 해소 추진

유아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유아교육 및 보육의 단계적 통합 추진

- 관리부처 통합, 안정적 재원 확보, 법률 제·개정으로 유아 교육과 보육 격차 해소
- 유보통합위원회 구성, 관련 부처·지방정부·교육청·학부모·어린이집·유치원 등이 참여하여 단계적 실행방안 마련
- 장애 영·유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안정적 교육 및 돌봄 기회 제공

■ 국공립유치원 비중 상향 및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사 동등 처우 노력

-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확대, 통학버스 운영, 방학·돌봄 시간 조정
- 사립유치원 교사 지원 확대, '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서비스질 제고

■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 컨트롤타워 신설

-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오후 7시까지 운영시간 연장, 돌봄전용교실 획기적 개선
- 권역별 긴급돌봄센터 설치를 통한 야간 및 토요일, 과밀·과대학교 돌봄수요 지원
- 방과후학교 및 돌봄 지역협력체계(교육지원청+지방정부) 구축을 통한 운영·프로그램 지원

■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도입

- 국제적 추세에 맞춰 초등학교 전학년 동시 오후 3시 하교 추진
- 국가교육과정과 별도 지역교육과정 도입으로 기본학력·예술체육·체험활동 등 학생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유보서비스를 보장하겠습니다.

- 모든 영유아가 유치원/어린이집 어느 시설에 다니더라도 양질의 유보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혁안 및 단계적 이행 로드맵 마련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양성·자격 기준 및 처우, 시설 운영시간 및 프로그램, 재정지원 및 행정 관리 등의 이원화 문제 단계적 해소
 - 동일한 종류의 시설(유치원/어린이집) 내 민간과 국공립 시설 간 이원화 문제 해소

일하는 모든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도 도입
 - 출산휴가 종료 시 부모 모두 '자동 육아휴직등록제' 도입
- 불안정 일자리 노동자 대상 육아휴직 제도 확대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반영, 프리랜서·특고·비정규직 등 대상 확대
- 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보장제 도입
-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및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 강화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한선과 하한선 상향
 - 아빠 육아휴직 권리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도입 추진
- 맞벌이 부부 영유아 돌봄서비스 세제 지원 추진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중심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및 미혼부 출생신고 간소화 제도 마련

-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시행

■ 국가의 아동 보호 책임 강화

- 친권상실·제한 사유 구체화,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 공적 입양체계 구축
- 영케어러, 수용자 자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 및 지원

■ 아이들의 몸과 마음 건강 증진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놀이시간과 공간 확충, 연령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아동의 정신건강 대응 전문인력 확대 및 서비스 접근성과 전문성 향상
-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등을 연계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 디지털 세상 속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 보장

- 폭력적인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아동 보호
- 키즈 유튜버 등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 보호 지침 보완
-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를 위한 아동 보호 규정 마련
- 아동 전문 디지털 범죄 피해 지원 강화
- 아동 눈높이에 맞는 개인정보 안내문 작성 권고
- 아동의 개인정보 영리적 사용 금지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아동 관련 항목 추가 및 대상 확대

■ 위기 아동 발굴 및 학대로부터 아동 보호

- 아동학대 담당 부처 간 정보연계 시스템 개선
- 지역사회 보호시설 전문화, 가정형 보호 활성화
- 부모 교육 및 서비스 연계 등 행복한 원가정 지원
-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 폐지
- 잔혹한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배제
-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음주·약물 형 감면 금지
- 범부처 차원의 아동사망 조사제도 도입
- 위기 아동 조기발견 위해 '경기도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 전국 확대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형평성있게 지급하겠습니다.

-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을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공제 도입 추진
- 부부 동시 수급에 따른 감액규정 폐지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시설개선비 지원 확대
- 경로당 전산회계프로그램 지원 및 여가 프로그램 다양화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의료와 돌봄 서비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사는 곳에서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의료·재활 등 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재가(방문)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의료·재활 등 서비스 대폭 확충
- 의료나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아동·병약자 등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주거시설 및 공공 의료·돌봄 서비스 인프라 확충
- 지역사회 의료·돌봄 서비스 One-Stop 신청·연계·공급체계 구축, 돌봄 매니저(care manager) 채용 추진

노인·장애인의 주거·일상생활·복지 지원을 동시에 해결하는 지원주택을 확충하겠습니다.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형태의 지원주택을 도심지역에 대규모 건립. 원룸 형태의 주거 공간을 독거 또는 부부 어르신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
 - 공동식당 및 빨래방 등을 설치하여 일상생활 영위 지원
 - 물리치료실 및 요양보호실 등을 설치하여 돌봄·보호 서비스 제공
 - 복지관 및 사랑방 등을 설치하여 여가·놀이활동 지원
- 어르신 등이 도심에 위치한 지원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가족(자녀)과 지인 등과 수시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소득보장의 보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장애인연금을 종전 소득하위70% 이하 1급, 2급, 3급 대상에서 3급 단일 중증장애인 까지 확대 추진
- 장애인연금 지급 시 불합리한 부부 감액을 폐지
-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단계적 확대

장애인의 삶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
 -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
 -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사무에 장애인 당사자 참여 확대
 -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 도입
 -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확대 및 장애 유형별 활동지원 전문가 양성
- 장애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해 정부 임금보조 제도 도입
 -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 장애학생 통합교육환경 조성
 - 대학 진로지원 강화,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발달장애 학생 지원 전담 직원 배치
 -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 확충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 차별 없고 자유로운 대중교통이용,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 공공주택과 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 확충
 - 장애인 재난정책 전담부서 설치
- 모든 장애인 이중 차별 방지 대책 마련
 -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
 - 고령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서비스 도입 및 맞춤형 사회참여,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지원체계 확충
 -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장애 조기 발견 및 재활 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 양육자 상담·코칭 서비스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제도 법제화, 권익옹호 지원체계 강화,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 위기쉼터, 24시간 이동지원, 응급병상 등 정신장애인 위기지원 체계 확립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으로 장애인 미디어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자막방송수신기 내장형 TV 및 화면해설방송(DVS) 수신기 보급 확대
- 자막방송, 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
- 장애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교육 및 인프라 지원 확대
-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및 스타트업의 제작 역량 지원 확대

어르신 건강관리를 국가가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예방중심의 통합노쇠집중관리 급여 도입 추진
 - 어르신들의 노쇠와 퇴행성 질환 예방과 관리 강화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으로 확대 재편
 - 질 좋은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어르신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 환자와 가족 모두 평온하고 존엄있는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 시설 중심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가정 중심으로 전환
- 어르신, 장애인 공공이송체계 확립
 - 공공이송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 장애인 이동권 보장
 - 병의원 외래 등 보건의료서비스 기관 이용시 활용

고령(75세 이상) 은퇴농업인에게 '은퇴농 연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은퇴농의 농지는 농지은행 매각·위탁 의무화, 신규·청년농에 우선 제공
- 은퇴농의 농지매각 양도세 조건 완화 검토

사회서비스형 치유농업을 육성하여,
복지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치유경험을,
농민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이용하는 사회서비스로 제도화
- 치유농장(농민)에 대해서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제공 실적에 따라 경제적 보상 제공, 농민의 새로운 소득원이자 농촌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
 - 복지시설에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시설 이용 실적에 따라 경제적 보상. 치유농장에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보상 제공
- 산림자원·곤충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등 사회서비스로 제도화 추진

코로나19 세대의 교육 결손을 회복하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세대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회복을 위한 '교육회복 사업' 확대
 - 방과 후와 방학을 활용한 학습컨설팅, 교과 보충, 튜터링, 정신건강 상담·치유 등 학습결손 프로젝트 제공
- 장애 영·유아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 영유아 조기 특수교육 확대, 유치원 특수(통합)학급 확대, 유아특수교육 담당교원 확대
 - 장애학생 직업전환교육을 위해 직업훈련기관 연계 활성화, 장애 대학생 교육지원시스템 구축
 -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생활 및 사회 참여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학력·학벌 차별금지 제도 마련
 - 모집·채용, 임금지급, 교육·훈련, 승진 등에 있어 능력이 아니라 학력과 학벌이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차별적 요소 제한
- 교육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학생 및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 확대 및 학교운영비 지원
 -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새터민청소년 지원 확대
 - 학교밖 청소년 바우처 지원, 지방정부 청소년 시설 확대와 모든 청소년에게 개방, 대안교육기관 학생 지원 강화 및 프로젝트 중심학교 확대

농업인 안전보험 의무가입, 특수건강검진 확대로
농어업 분야 노동 안전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사회보험 형태의 농업노동 안전보험을 도입하여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 강화
-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전체 농업인(51~70세)으로 단계적 확대

남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모든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대 구입비 지원 및 건강검진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 추가
- 모든 남녀 청소년 대상 HPV(사람 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지원
 - 만12~17세 남녀 청소년 대상 무료 접종
-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 피임,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피임시술 및 개정되는 모자보건법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 적용
- 난임시술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및 정서적 지원 강화
 - 난임 시술별 칸막이를 간소화하여 총 지원횟수 내 자유롭게 지원
 - 난임 조기 예방을 위해 남녀 기초검사를 건강검진항목에 포함
- 임신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위험회피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현실화
 - 임신노동자 생식독성과 작업환경에 따른 유해인자 특수건강검진 항목 추가
 - 임신노동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50인 미만 사업체부터 적용 후 단계적 확대)
-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
-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단위 확충 및 시설·서비스 표준화

1인가구도 안심할 수 있고 다양한 사회관계망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는 제도적 기반 구축 및 불이익 개선
 - 1인가구, 친밀한 관계 등이 돌봄·의료·장례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연대관계등록제' 도입
 - 친족가구 중심의 직장 복리후생제도, 보험 지정대리인청구제도 등 민간 영역의 다양한 차별과 불이익을 발굴하여 제도개선 추진
- 1인가구의 안전·건강 강화 및 사회적 고립 방지 위한 지역사회 체계 구축
 -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모델을 강화·보완, 1인가구 밀집지역에 설치 운영
 -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시설 지원 확대
 - 1인가구가 치매·질환·고령·장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보편성 강화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의 소득기준 폐지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로 단계적 확대
 - 복지급여 등 소득보장 이외의 서비스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으로 확대
-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강화 및 양육비 이행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의 재산은닉 방지를 위한 소득과 재산 조회 추진
 - 양육비 불이행시 감치명령 신청 가능 기준일 90일에서 30일로 단축
 - 양육비이행관리원 기능과 역할 강화
-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 양육비이행법 개정 및 아동의 최저생계 기준 마련
 - 양육비 미지급되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 대지급 후 이를 채무자에 구상

다양한 계층의 여성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국가책무 강화
 -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친화여성전문병원 기반 마련
 - 폭력피해자 쉼터 확대 및 피해구제 제도 강화
- 여성 농·어민의 지위 개선 및 건강권 강화
 -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및 부부 공동 경영체 등록 제도 마련
 -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질병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
- 결혼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등 인권 보호 강화
 - 배우자 유무(사망·이혼), 자녀 유무에 따른 차별적 체류·귀화 정책 폐지
 - 국내에서 발생한 젠더폭력 피해자의 체류 보장 방안 마련
- 북한이탈여성 맞춤 상담 및 자립 지원 등 인권 보호 강화
 -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치유 및 가족 상담 지원 제공 확대
 - 하나원의 여성인권 교육 확대 및 성차별 등 인권상담 업무 강화

서비스 수혜자가 참여하고 이웃이 돌보는 공동체 돌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학부모 등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형 아동돌봄시설 확대

-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아동돌봄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 민간(사립) 아동돌봄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유도 및 활성화 지원

13. 의료격차해소



- ☑ 각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고, 필수요료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 꼭 필요한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 ☑ 간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하겠습니다.
- ☑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모두가 차별 없는 건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 ☑ 비대면 진료 체계 확립과 방문 진료 활성화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 ☑ 국산 백신 개발과 필수약품 공공생산을 통해 백신주권과 보건의료 안보체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 ☑ 공공성과 혁신성의 조화를 통한 민관협력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대전환을 이끌겠습니다.
- ☑ 보험재정 악화시키고 대리수술과 과잉진료 일삼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완전히 척결하겠습니다.
- ☑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비롯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고,
필수의료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추진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
- 지역에 우수한 공공병원을 신·증축하여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공공병원 확보
 - 국립대병원 신·증축하고 지역 병원들과 진료협력체계 구축
 - 보건소 확충을 통해 방역 및 거동불편 노인·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공공의료 역할 수행하는 민간병원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 확대

꼭 필요한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 공공·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 의대 정원 합리적 증원 및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의학교육 질 향상과 환자안전 강화
 -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 적극 추진
- 필수 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
 -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별도의 수가 가산제 도입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필수의료인력 확보하도록 시스템 개편
-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으로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대폭 확충
 - 지역 의대와 간호대에서 해당 지역 인재 집중 선발·육성
 -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
 - 간호인력 확보·적정배치·처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의료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
 - 지역의료기관 수련과정 지원 확대, 적정인력기준 마련
 -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 위한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간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하겠습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 확대 및 10만 병상 확보**
 - 간호·간병 인력 배치기준 적정화, 간병비 급여화 확대 추진
- **요양병원 확대 시행을 위한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모델 정립**
- **지역별 참여병원 지정·할당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역격차 해소**
 - 지역 공공병원부터 우선 배정·지원을 통해 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
- **간병인력 양성제도 수립 및 간호·간병인력 처우개선**
 - 간호·보조인력 처우개선 및 간병인력 자격화로 효율적인 팀간호 체계 확립
- **교육전담간호사제와 교대근무방식의 개선을 통한 간호 환경 대폭 개선**
- **불필요한 입원, 사회적 입원 등 방지대책 병행 추진**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모두가 차별 없는 건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추진**
 - 전담 주치의(의원)를 통해 교육, 상담, 진단, 치료, 처방, 의뢰 등 포괄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와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어르신, 아동, 장애인부터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전국민 확대
- **아동 및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 전면 확대로 구강건강 향상**
 -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과 장애인 치과 서비스 확대 시행
- **적정수준의 수가체계를 마련하여 동네병원 활성화와 환자부담 최소화**
 - 대형병원 환자쏠림 방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건강한 일차의료 체계 확립
- **치아 임플란트, 탈모 치료,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비대면 진료 체계 확립과 방문 진료 활성화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 주치의를 통한 비대면진료 및 협진체계 확립

-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 의료취약지역 및 재택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 및 건강관리 체계 마련
- 비대면의료 통합관리센터 설립을 통한 정부-의료계-환자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공공플랫폼을 통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 확립

■ 거동불편 환자 대상 방문진료 활성화로 '집으로 찾아가는 병원' 사업 확대

-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면 확대 추진
- 기존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한방·재활 등 특화된 방문 진료 과목을 추가하여 다양한 진료서비스 제공

■ 공공 심야 약국으로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 확대

- 365일 심야 시간대 운영되는 공공 심야 약국 본사업 전면 확대
-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 및 상담, 사회안전망 연결 서비스 제공

국산 백신 개발과 필수약품 공공생산을 통해 백신주권과 보건의료 안보체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화 적극 추진

- 백신 원천기술 자립을 위한 R&D 집중 투자 및 전문인력 적극 육성
- 백신 원부자재 생산기반 확립으로 안정적인 바이오 의약품 생산체계 구축

■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자체 개발

- 범부처 신약개발사업 적극 지원 및 국제적 수준의 규제조화 추진
- 국내 임상시험 지원 강화 및 신속 심사·허가 체계의 신뢰성 확보
- 코로나19 국내 백신 개발 완료로 백신주권 확립

■ 필수약품의 공공생산체계 구축

-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어려운 필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 정부 투자시설 및 민간 유희시설 활용한 필수약품 공공생산체계 구축

공공성과 혁신성의 조화를 통한 민관협력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대전환을 이끌겠습니다.

-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적극적 투자와 보상체계 마련**
 - 정부 지원 대상·기준 명확화 및 전주기 통합적 지원으로 실효성 제고
 - 매칭펀드 방식 민관협동 메가펀드 조성 및 임상시험 지원체계 강화
 - 국내개발·국내임상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정비
- **제약기업의 환자접근성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
 - 희귀질환 치료제, 고가항암제 등 신약의 환자접근성 강화
 - 제약사 분담금을 통한 환자지원기금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 구현
- **합리적 의약품 사용으로 환자안전과 보험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 특허만료 의약품의 공정한 경쟁과 보험급여 의약품의 실효성 있는 재평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고위험·초고가약의 처방사전승인제 도입으로 환자안전과 합리적 의약품 사용관리 체계 마련

보험재정 악화시키고 대리수술과 과잉진료 일삼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완전히 척결하겠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 불법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경찰과 지자체는 물론 지역의사회 등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 포상 강화**
 - 의료계 내부의 자율정화를 위한 노력 지원
- **불법개설자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
 - 불법개설자 형사처벌 강화, 부당이득 환수 근거 규정 정비
 - 폐쇄명령 등 처분 승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몰수·추징 추진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비롯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24시간 전문의 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 공공과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24시간 핫라인 전문의 상담체계 구축
- 핫라인을 통해 발견된 고위험군은 지자체와 자살예방센터 및 민간기관과 자동 연계
-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5개 국립정신병원 전담인력 확충

■ 환자 차별 방지, 수가체계 및 환자이송제도 개선

- 민간·실손보험의 정신과 환자 차별 방지 및 약관 규정 개편
-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정신질환 정액수가 제도 개선
- 광역별 정신응급센터와 공공이송제도 확립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

- 지방정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통합 관리체계 마련 및 정부지원 강화
- 진단 전 초기 단계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 대상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확대



14. 문화지식강국



- ☑ 대한민국의 문화강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 ☑ 국민이 즐기고, 국가가 책임지는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겠습니다.
- ☑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예술활동 지원 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 ☑ 행복한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 한국관광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 ☑ 방송영상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 품격있는 콘텐츠 제작·공급을 위한 외주제작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을 위한 혁신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 유료방송시장의 상생 환경과 공정경쟁 기반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 ☑ 지역·중소방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국내 OTT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OTT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 시청자인 국민 중심의 방송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방송광고 등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 방송영상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부응하는 법제와 기구를 개선하겠습니다.
- ☑ 세계를 선도하는 학문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 안전하고 획기적인 공간 혁신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강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 신남방·신북방 한류 프로젝트 추진

- 각국 문화를 매개로 하는 문화정상회의 개최
- 한류 페스티벌·K-콘텐츠 마켓 추진
- 국제 문화교류, 문화 개발원조 사업 활성화

■ 국가 문화 브랜드 확산 프로그램 강화

- 해외 문화홍보 기관 재구조화를 통한 한류 컨트롤타워 구축
- 한류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과 해외확산을 위한 외국인 대상 번역대학원대학교 운영 추진
- 해외 한글교육기관 추가 설치 및 지원 확대
- 세계인의 한국 문화유산과 K-컬처 체험을 위한 '코리아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 전통예술, 문화유산, 국어자산 등 지속적인 한국 문화의 국제적 확산

■ 문화재 분야 남북·국제 소통 및 교류 확대

- 개발도상국 문화유산 공동조사 확대
- K-헤리티지 홍보강화, 역사왜곡에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하여 주변국 대응 활동
- 북한에 문화재 인프라·보존기술 제공과 협력, 남북 문화유산 공동 조사 및 연구, 문화재 정비 추진

■ 지역·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정책

- 고도 이외 지역 문화유산 균형 개발·발전 도모
- 국내 지역별 문화유산 개발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회균등 부여
- 발굴·개발 지역의 시민 모니터링 및 참여 확대
- 문화재 유지·보수의 선진 시스템 관리 확대
- 다양한 문화재 콘텐츠 개발로 문화 예술 관광 활성화

■ '한글 빅데이터 사업'으로 말뚝치 사업의 확대 개편

- 전 세계인들의 가상세계 한글학습·체험 프로그램, '한글 메타버스' 운영 추진

■ 종교간 평화 상생 추진 및 종교 문화재 보호 강화

국민이 즐기고, 국가가 책임지는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겠습니다.

- 문화재정을 국가예산의 2.5%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 문화이용권 제공 등 국민문화기본권 확대
 - 생애주기별 문화이용권 제공 추진
 - 학교 내 문화예술·스포츠·미디어 교육 확대 검토
 - '1인 1예술교육' 도입
- 문화가 숨 쉬는 지역 기반 확보
 - '문화도시' 확대 지정과 '3501 문화마을' 조성으로 지역문화재생 활성화
 -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의 상생을 위한 입주형 창작공간 확대
 - 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 확대, 자료구입비·주민참여 도서관정·사서 인력 확대
 - 민간 운영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마을 단위의 작은미술관·작은영화관 확대
- 코로나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로 극복의 예술치유 프로그램 확대
 - 예술인·예술강사 파견사업 지원 강화로 문화돌봄 확대
- 콘텐츠의 보존, 활용, 유통을 위한 '국민 창작플랫폼' 운영
 - 개인 창작 지적재산의 생산, 보존관리, 활용 인프라 구축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예술활동 지원 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인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보장제도 강화
 -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 예술인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확대, 문화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 문화예술인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지역별 장애인지원센터 기능 확대
 - 문화예술인 복지사업 기준인 문화예술인활동증명 기준 개선·확대
 - 문화예술인 활동지수개발로 체계적인 문화예술계 현황진단
- 예술 진흥체계를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혁신
 - 예술기관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방형 직위 공모제 강화
 - 문화예술인 저작권 보호 강화
- 공공 기여 확대로 문화예술 창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 청년·신인 예술가 창작품의 전국 거점 온·오프라인 유통지원
 - 공공기관의 예술창작품 구입 확대, 국·공립시설 활용 창작품 전시 공간 제공, 예술가 해외 진출 지원 확대
- 공연 분야 등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
 -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예술작품 직접 제작을 통한 문화예술인 직접 고용 추진
-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실시와 청년 마을예술가 국가 고용
 -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 문화기관 이용권, 선배 예술가 멘토 지원, 전문가의 사업화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행복한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체육인 복지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체육인 고용보험 도입, 전문체육인 재교육사업 등을 통한 고용지원 강화
- '체육인공제회' 설립·지원을 통한 체육인 복지서비스 강화
- 여성친화 스포츠 프로그램, 인프라 확충
-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 및 공공기관, 기업 운동부 창단 지원 확대
-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지도자 등 일자리 창출
- 어르신 스포츠 활동 지원 강화
- 다양한 종목을 체육진흥투표권 편입 등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 확충
- 체육분야 예산 증액 적극 추진

■ 스포츠행정 조직 혁신 및 기능 효율화 방안 마련

- 전문성·효율성 강화와 정책의 조정·통합기능 강화

■ 스포츠 성평등 문화 확산과 체육계의 폐단 근절을 통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 스포츠 빅데이터 구축·공유·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스포츠 산업 활성화

- 스포츠 산업 기술육성을 위한 스포츠 빅데이터 구축 및 보상유통체계 마련
- 스포츠 산업 고용창출을 위한 스포츠 ICT 전문인력 양성

■ 국민 건강 스포츠 인프라 확대

- 15분 거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대로 접근성 강화
- 파크골프장 확충
- ICT기반 스마트 체육시설 설치를 통한 비대면 스포츠활동 지원, 우리 동네 VR·AR 스포츠체험관 확충 및 신규 프로그램 제공
- 공공·학교·민간체육시설 연계를 통한 체육시설 활용 극대화
- 종목별 생활체육 지도자 체계적 양성 및 의무배치 추진

■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 초등학생 체육수업 확대
- 학교 운동부 지도자 확대 및 처우 개선 추진
- 방과후 체육프로그램 강화 및 스포츠 강사 확대
- 학생선수 운동권 보장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 '스포츠 참여포인트' 제도 도입으로 국민 건강 증진

- 스포츠 참여이력 확인 체계 구축과 포인트 제도로 국민건강 증진

■ e스포츠활성화 지원

- 학교중심 e스포츠 영재육성 시스템 구축
- 국군체육부대 내 e스포츠 선수단 창설

한국관광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관광 권리 보장

- 국민 여가관광권 추진
-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지방정부 파트너십 참여 확대, 특수고용 등 취약노동자까지 확대
- 정부·지자체 매칭의 여행이용권 제공 등 취약계층 휴가지원 확대

■ 관광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 관광산업 기반의 청년창업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 비대면 온라인시대에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 대응 가능한 대표기업 육성
- 의료관광시장, K-culture 시장 등 고부가가치 관광시장 특화 전략 실행
- 글로벌 한류 콘텐츠 활용을 통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 명상치유관광, 자연자원 활용 등 건강·치유 관광상품 개발 지원

■ 자연친화적, 탄소저감형 관광 프로그램 지원 제도 도입

- 탄소저감실천 관광상품 개발 등 그린 관광 서비스 인증제 도입 검토
- 걷기, 자전거, 무동력 바이크 등을 연계한 '국민그린관광바우처' 추진 검토

■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관광 확대 및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 VR, AR, MR 등 활용 메타버스 기반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 블록체인 기반 캐릭터, 그림, 사진 등 디지털 관광기념품 발굴

방송영상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PP의 콘텐츠 가치 정상화를 통한 유료방송 콘텐츠시장 활성화

- 장르별 채널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채널 평가 기준 마련
- 중소PP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선계약 - 후공급 제도 도입 추진

■ 방송영상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 유통과 수출 지원
- 방송영상콘텐츠에 대한 국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재 및 손해배상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품격있는 콘텐츠 제작·공급을 위한 외주제작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방송사업자와 제작자(사)간 공정 거래 질서 확립

- 표준계약서 의무 적용과 불합리한 특약사항 및 권리합의서 작성 금지 법제화
- 프로그램 창작 및 제작기여도에 따른 제작사의 수익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 건전한 중소 제작사 지원 확대

- 중소제작사에 대한 제작비 지원 확대
-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 강화
- 콘텐츠의 창작 기획 및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 방송법상 금지행위 중 불공정 거래행위 보호 대상에 제작사를 포함하도록 법 개정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을 위한 혁신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교육 지원

- 전문적 제작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인 비정형의 다양한 교육시스템 지원
- 단계별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적 소양을 갖춘 창작자 양성
- 실질적인 콘텐츠 제작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수 전문강사 배치 및 실습을 위한 시설(스튜디오) 및 장비 구축 지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의 제작 역량 강화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및 스타트업들을 위한 메이크 스페이스(Maker Space)형 제작 공간 마련 지원
-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의 제작비 지원 확대 추진
- 청년 창업의 거점이 되는 지역별 미디어 콤플렉스 확대 구축 지원
- 스마트 미디어 기반의 다양한 방송영상콘텐츠의 제작·공급을 위한 MCN(Multi Channel Networks) 지원
- 1인 미디어 창작자와 스타트업, MCN의 제작 활성화

■ 1인 미디어 및 MCN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 방안 마련

- 1인 미디어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 부실한 MCN에 의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피해 예방 및 보호

유료방송시장의 상생 환경과 공정경쟁 기반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 건전한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

- 콘텐츠 제공 및 채널편성 변경과 관련된 불공정행위 금지
- 유료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 PP와 일반PP와의 차별적 거래 금지
- 방송의 공적 기능 훼손 및 방송상품의 통신상품 부상품화 방지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회계 구분 및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 유료방송의 불공정경쟁 개선

-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유무선 통신상품과 방송상품의 결합판매 제한
- 방송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이용약관에 대해 승인 그 외 사업자는 신고제로 전환

■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 지수 개발 및 다양성 평가 결과를 재허가 심사에 반영

지역·중소방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기금을 통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 지역과 중소방송사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의 지원 대폭 확대 추진
-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전용기금 설치 추진

■ 정부광고 중 방송광고부문의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확대

■ 결합판매 방송사 및 광고주에 대한 혜택 부여

- 지상파방송 및 종편PP가 자율적으로 지역·중소방송사와 방송광고 결합판매 시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인센티브 부여
- 종교방송에 기부하는 개인, 법인 및 지역·중소방송사에 광고를 하거나 방송광고 결합판매를 하는 광고주에 대해 세제지원 추진

■ 방송의 지역성 구현 지원 강화

- 지역방송사의 지역 소재 콘텐츠 제작 우선 지원
- 유료방송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지역채널 활성화
- 지역 문화 교류 확대 및 지역 시청자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지역-미디어 콘텐츠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

국내 OTT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OTT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국내 OTT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오리지널 OTT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영
- OTT 콘텐츠 제작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
- K-OTT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강화를 위한 국내 OTT 플랫폼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

■ 글로벌 OTT서비스 사업자의 공정거래질서 준수 의무화

- 국내 제작사의 지적재산권(IP) 보장 및 공정한 수익배분 개선

■ 글로벌 OTT서비스 사업자의 망 사용료 지급 등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개선

시청자인 국민 중심의 방송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 보도·제작·편성권과 경영의 분리·독립원칙 확립
- 방송사업자와 취재·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의 명문화
- 공적 지분 보유 언론사에 대한 독립성 강화 및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 시청자 권익 확대

- 공정한 시청자위원 선임제도 도입 및 시청자위원회 심의의견 방송 발표 등 시청자위원회 위상 강화
- 유료방송에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시청자 참여 방송 프로그램 확대

■ 라디오방송 서비스 환경 혁신

-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라디오 청취 환경 혁신
- 라디오 방송의 청취형 매체 특성에 따른 편성·심의 규제 개선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방송광고 등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지상파방송 광고제도 재정비

- 지상파방송 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 정비
- 장르별 방송프로그램 협찬 규제 개선

■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

- 미디어랩의 크로스 미디어 광고 판매 허용
- 정부광고의 독점 대행 제도 개선
-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의 합리적 재정비 및 대안 마련
-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과 홈쇼핑 간 연계편성에 대한 협찬고지제도 개선
- 광고주와 결탁된 홍보성 방송광고 규제 강화

방송영상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부응하는 법제와 기구를 개선하겠습니다.

■ 복수의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의 통합 개선

■ 분산되어 있는 방송영상미디어 정책을 통괄하는 전담 부처 신설 추진

세계를 선도하는 학문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로 대학원 연구 역량 강화

- 국립대, 연구중심 사립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 등과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 구축
- 국가 집중 육성 분야, 특성화 전공 및 연구분야에 대해 교육과정·학점 교류, 복수 및 공동학위제, 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축
-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안정적 지원

■ 기초학문 분야 집중 투자

- 인문사회, 문화예술, 기초과학 전문인력 육성 인프라 지원 및 양성체제 개편
- 우수 연구자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대학원 질 관리 강화 등 안정적 연구 여건 마련

■ 대학의 국제화 지원

-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 및 활용, 우수 연구기관과 실질적 협력 확대 지원
- 아시아권 대학의 협력체제 구축, Asia-MOOC 플랫폼 공동 개발

■ 학문의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학술연구 평가·관리 체제 구축

■ 건전한 학문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별 연구윤리 강화

안전하고 획기적인 공간 혁신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기본학력보장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급당 학생수 20명 목표 단계적 추진

- 코로나19 대응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초과밀학급(30명)부터 모듈러 교실(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 우선 설치 추진
- 과밀·과대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건립으로 학급 증설 추진(주민개방 및 수익형 민간투자)

■ 미래교육, 학생친화형 공간 혁신을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확대

- 30년 경과 노후 학교 시설 대상,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간 교육격차 등 고려
- 감염예방 환경설계디자인(PTED) 반영, 'SI 기반 안티바이러스 교실 공간' 구축
- 미래학교 건물 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
- 디지털 콘텐츠 구현을 고려한 학교공간 재구성

■ 지역사회와 협력한 학교복합시설 확대

- 체육관·주차장·수영장·공연장·돌봄시설 등 방과후·주말 주민 이용 개방(도시형)
- 학교 통폐합을 넘어 관공서·보건소·마을회관·돌봄시설·문화·체육시설 등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형 통합학교체제 구축(농산어촌형)
- 지역 여건에 따라 초·중학교, 중·고등학교 등 연계형 학교 자율 운영
- 수입이 예상되는 시설에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BTL) 검토

15. 민생활력



- ☑️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 ☑️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 한국형 PPP 도입 지역화폐 확대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 상가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채무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공인 종합지원으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 ☑️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와 개인의 협력으로 적정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 ☑️ 생활안전망을 강화하여 '빈곤 제로'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 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 비대면 시대 데이터 비용 절감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 농지투기를 근절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 ☑️ 농산물 수급·유통 혁신으로 가격 걱정 없는 안심 농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 어르신을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 ☑️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 누구나 이동이 자유로운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물류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 주가지수 5천 포인트 시대를 열겠습니다.
- ☑️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자생력 있는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 ☑️ 사회적경제의 확산으로 포용적 전환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우리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재도전 지원

- 폐업지원 확대 및 생계비 지원 방안 마련
- 폐업지체 요인 개선을 통한 적시폐업 후 신속한 재도전 지원
-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 가맹·대리점 계약 등의 계약해지권 보장과 위약금 완화 및 면제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및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복지 등 공제혜택 확대

- 노란우산공제 최소납부금액 완화 등 신규가입 업체 지원 확대
- 10년 이상 장기가입자 임의해지시 퇴직소득세 적용 추진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 한국형 PPP 도입 지역화폐 확대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회복지원 기금 확대

- 위드코로나 방역체계, 손실보상, 빅데이터 플랫폼 등 원활한 소상공인 회복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소진기금 확대 편성

■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마련

-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의 손실보상 제도로 개선
-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보상 확대

■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한국형 PPP)

-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 감면

■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기 내 지역화폐 연간 50조원 발행
-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상시지원 및 지방정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간 불균형 완화
- 전통시장 및 상점가내 고객유입을 통한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

-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

■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인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기반 확충

-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기준을 보증기관별 보증잔액 점유율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 지역신보재단중앙회 재보증 운용배수를 신·기보와 동일한 적정운용 배수 수준으로 개선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환경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보장

■ 온라인 플랫폼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성장 지원

- ‘경기도 배달특급’ 등 공공배달앱 전국 확장
- 동네 슈퍼의 온라인플랫폼 즉시 배송 서비스 지원
- 온·오프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디지털 상권, 메타버스 가게 등 스마트 상점 구축 지원

■ 가맹점·대리점의 상생협력 체계 조성

- 가맹점·대리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가맹본부, 대리점 사업자, 대기업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강화
- 가맹점·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임대료 분담제도 도입

- 감염병 등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실시될 경우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를 분담하는 제도 도입
- 재난 상황 동안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추진

■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 마련

■ 자율적인 임대료 분쟁 해결 절차 마련

- 자율적 상가임대료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닌 방식의 임대료 분쟁 해결 절차 마련 검토

■ 임차상인의 단체협상권 보장

- 임대료,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하여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상가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임대차 기간 단계적 확대 추진
-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 상가 관리비의 투명성과 편법인상 방지 방안 마련 검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채무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생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조정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고리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대사면을 단행
-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포용적 금융 지원을 통해 서민의 삶을 촘촘하게 지원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공인 종합지원으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실시
- 소공인 협동조합 설립 및 공동사업 지원
 -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설립 지원
 -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단가 협상,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 적극 지원
-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비 지원 확대
 - 공정 자동화, 스마트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 지역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 구축
 - 광역별 1개소 구축, 일반에 개방하여 지역 특화업종 경험 지원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각 지역별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 설립
 - 상권활성화재단, 시장상권진흥원 등 지역 골목상권 전담기관 설립
- 골목상권 특성을 고려해 지역 상권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골목상권 특성을 고려한 「지역상생구역 (상권 내몰림 방지)」 과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통해 상권별 맞춤형 지원
 - 골목형 상점이 지정 요건 완화 등 상점과 활성화 촉진
-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르네상스 확대
 - 테마 또는 특색 있는 상권으로 재생시키는 상권르네상스 지정 확대
 - 디지털 특화거리 조성, 온라인 판매, 복합체험 판매 라운지 등 패키지 지원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디지털 전환 교육 지원
 - 경력보유여성, 취업준비생, 학생 등 지역사회 디지털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 중기부내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차관 신설
-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문성 강화**
 - 창업 전 필요한 창업교육을 통한 실패의 위험 최소화
 - 장인·기능장 교육을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 특화 교육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 위기신호등 개발**
 - 위기단계에 따른 대처방안 매뉴얼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와 개인의 협력으로 적정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 공적연금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연금개혁위원회' 운영
- 2023년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과 연계해 연금개혁안 마련하고, 국민 동의 바탕 개혁 추진
- 소득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삭감액, 단계적 축소

생활안전망을 강화하여 ‘빈곤 제로’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빈곤선 이상의 삶이 보장되도록 최후의 생활안전망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 최저생활 보장 수준을 절대빈곤선인 중위소득 30%에서 상대적 빈곤선인 50%로까지 단계적 상향 검토

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사교육 경감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및 교육 플랫폼 구축

- EBS 온라인 학교 전환 및 교재 온라인 탑재, 취약계층 교재 무료 제공 확대를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 온·오프라인 대입 컨설팅 지원 확대 및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이용한 맞춤형 학습 지원
- 중·고교 시험 교과서 밖 출제 금지 및 수행평가 공정성 강화
- 양질의 방과후 학교 확대를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 교육부 산하 '사교육대책위원회(가칭) 설치 운영
- 사교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교육 현황과 원인 등을 상시 점검
- 고액·불법 사교육 근절 및 처벌 강화
- 사교육 유발하는 영재고·과학고 입시제도 개선

■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 학점비례등록금제 도입으로 소수 학점을 이수하는 대학생에게 합리적 등록금 책정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모든 학부생과 로스쿨 포함 대학원생으로 확대
-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 확대 및 생활비 대출 한도 증액 추진
- 졸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탕감

비대면 시대 데이터 비용 절감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전 국민 휴대폰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
- 병사 통신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확대
- 국민 이용 패턴에 부합하는 5G 중간요금체계 도입
- eSIM 도입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자급제 활성화
- 2023년까지 전국 3만여대 버스 5G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
- 5G 백홀의 지하철 와이파이를 광역 지하철(공항철도 포함) 전반으로 확대
- Whitespace(=TV 유휴대역) 활용을 통한 Super WiFi 구축으로 농산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
- '내돈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잔여 데이터의 선물하기 또는 이월 선택) 도입으로 이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제도 확립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공급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어린이 과일간식 제공 확대
 - 어린이집·군대·복지시설 급식에 공공 체계를 확대하여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 증대
- '긴급끼니 돌봄' 제도를 도입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바우처 확대
 - 소득 상실 등 긴급한 빈곤 상황 발생시 음식을 제공
 - 영양 취약계층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농식품 지원
- 먹거리기본법 제정 및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제도화 및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를 아우르는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 구축
- 유전자 변형(GMO) 완전표시제 도입
 - 소비자 알권리·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
-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및 구입시 그린포인트 적립(그린카드) 등 지원 확대

농지투기를 근절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 상속·이농 농지 소유주가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은행 위탁 의무 강화 추진
- 농지 소유·이용에 대한 상시 조사 인력을 확충하여 투기 감시와 임차농 보호 강화
- 농지 임차료 상한제 도입 및 적정 임대차 기간 보장으로 임차농의 시설투자 및 경영 안정 촉진
- 농지실태 전수조사 및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 농지원부 정비,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점검 등 연계 농지 빅데이터 구축
 - 농지실태 전수조사 법적 근거 마련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제한(임차만 허용) 단계적 확대

농산물 수급·유통 혁신으로 가격 걱정 없는 안심 농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농산물 가격과 수급의 안정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 책무임. 농업인의 생산비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
- 채소가격 안정제 확대·개편으로 수급안정 및 최저 가격 보장 효과 제고
 - 무, 배추와 같은 주요채소의 계약재배 비중을 단계적으로 생산량의 50%까지 확대 추진
 - 대상 품목 확대, 적정기준가격 설정, 농업인과 조합의 부담을 경감 등 개선
 - 주요 작물의 저장·가공·유통 및 출하조절 시설 확충
- 농식품 온라인거래소를 만들어 농식품 온라인 유통 고속도로 구축
 - 산지거래 확대와 유통시설 스마트 시스템 강화
 - 전국 도매시장은 시설현대화 및 광역별 물류거점 도매시장으로 육성
- 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
 - 농협 조합간 지역별·품목별 연합 체제 강화로 조합원 생산농산물 책임판매 확대
 -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 확대, 지역 의무자조금 도입, 사전적 생산조절 및 소비홍보 위주 사업방식 개선 등 자조금 제도 개선 추진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역할 확대, 자율 수급조절 매뉴얼 마련 등 축산물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 조절 기능 강화 추진
- 생산에서 소비까지 디지털 정보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사전적 수급 예측·관리 강화
 - 농지, 농산물 생산·수입·가공·소비 등 디지털 정보 통합관리
 - 블록체인, 이력추적기술을 이용한 유통·거래 디지털 안전망 구축 등 디지털 유통관련 제도와 불법유통 단속체계 정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 진료항목 표준화 추진 및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으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 국내 펫푸드 산업 육성, 반려동물 식품 안전성 관리 강화

■ 개물림 사고 등 위험 예방

- 반려동물 양육 전 '반려동물 기본예절교육 의무화'를 통한 보호자 책임의식 강화
- '반려동물 행동지도서'를 양성하여 내실 있는 전문교육 실시
- 보호자 없는 동물로 인한 상해보상 지원 마련

■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추진

- 경찰서에 '동물학대범죄 전담팀' 설치, 지방정부에 '동물복지 전담부서' 확대
-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학대 행위자 동물양육금지 및 수강 명령' 추진
- 길고양이 학대방지 및 공생제도 확립

■ 반려동물 입양 원칙 확립 노력

- 입양 중심의 허브 공간으로 지역 동물보호센터 조성·역할 확대
- 무분별한 동물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무허가 등 영업 단속 강화, 신종 펫샵 근절
- 온라인상 반려동물 판매 홍보행위 금지, 표준계약서 도입

■ 사람과 동물의 통합복지 확대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으로 여러 법과 부처로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 및 제도 정비
- 반려동물 놀이터·테마파크, 동물장묘시설 조성

■ 국내 공공기관 급식 내 채식 선택권 보장, 민간으로 비건 문화 확산 노력

어르신을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 80만개인 어르신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40만개로 확대

■ 민간형 어르신 일자리 및 지역 상생 활동사업 전국 확대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도시내 출퇴근 30분대, 메가시티내 1시간대, 전국 2시간대 대중교통 이동 보장
 - 지역 주요 도시간 고속철도 도입 확대, KTX와 SRT를 통합하여 수혜지역을 확대
 - 메가시티내 이동 증진을 위해 연결구간 보강 등을 통한 광역철도망 구축, 광역교통거점 환승센터 구축 확대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추가, 기존 지하철 급행화·지하화 추진
- 막힘이 없는 전국 대중교통 통합연계교통망 구축
 - 지역간 교통수단(철도, 항공, 고속버스)과 지역내 교통수단(도시철도, 시내버스) 연계
-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철도 확장 기반 마련

누구나 이동이 자유로운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교통약자의 교통기본권,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등 마련
- 광역버스 등 생활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 대중교통취약지역에 버스와 택시를 결합한 콜 기반 대중교통수단 대폭 확대
-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장애물 없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확대, (전기)저상버스 도입 대폭 확대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물류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택배물류허브와 디지털 통합물류 서비스를 구현**
 - 화물처리 자동화 등 디지털 물류체계를 통해 스마트 공항 및 항만 구축
 - 온도민감성 화물 운송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 **철도물류체계 강화, 미래 신성장동력 항공정비(MRO) 육성 등 스마트 물류 혁신**
 - 철도 인입선 확충, 운송 단계별 속도 강화를 위한 R&D 등 지원
-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혜택 보는 배달환경 개선**
 -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배달전문 플랫폼 강화
 - 골목상권 배달 안전 및 소음 개선, 상하차장 공간 개선

주가지수 5천 포인트 시대를 열겠습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내 증시 대외 신뢰도 제고 및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마련, 공공과 민간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 촉진**
- **성장성 중심의 상장제도 개편,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산업생태계 강화 등을 위한 M&A 지원 등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자본시장 구축**
- **공모주 시장의 공정한 룰을 마련하고 개인투자자 참여 기회 확대**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자생력 있는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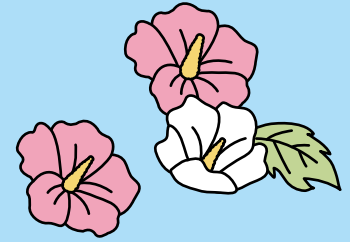
사회적경제의 확산으로 포용적 전환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모든 국민이 경영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대전환 실현
 - 국민이 참여하는 플랫폼 협동조합 활성화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개선,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조성
- 사회적경제 기반 사회안전망 확충과 적극적 투자로 소외 없는 지역사회 형성
 - 사회연대공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 국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전환사업에 적극 투자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우리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기반조성
-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열린 시스템 구축과 민간 투자의 활성화
- 비영리 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
- 청년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혁신활동의 적극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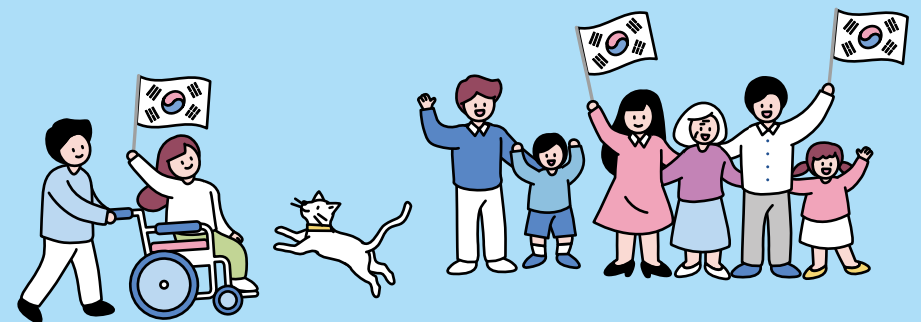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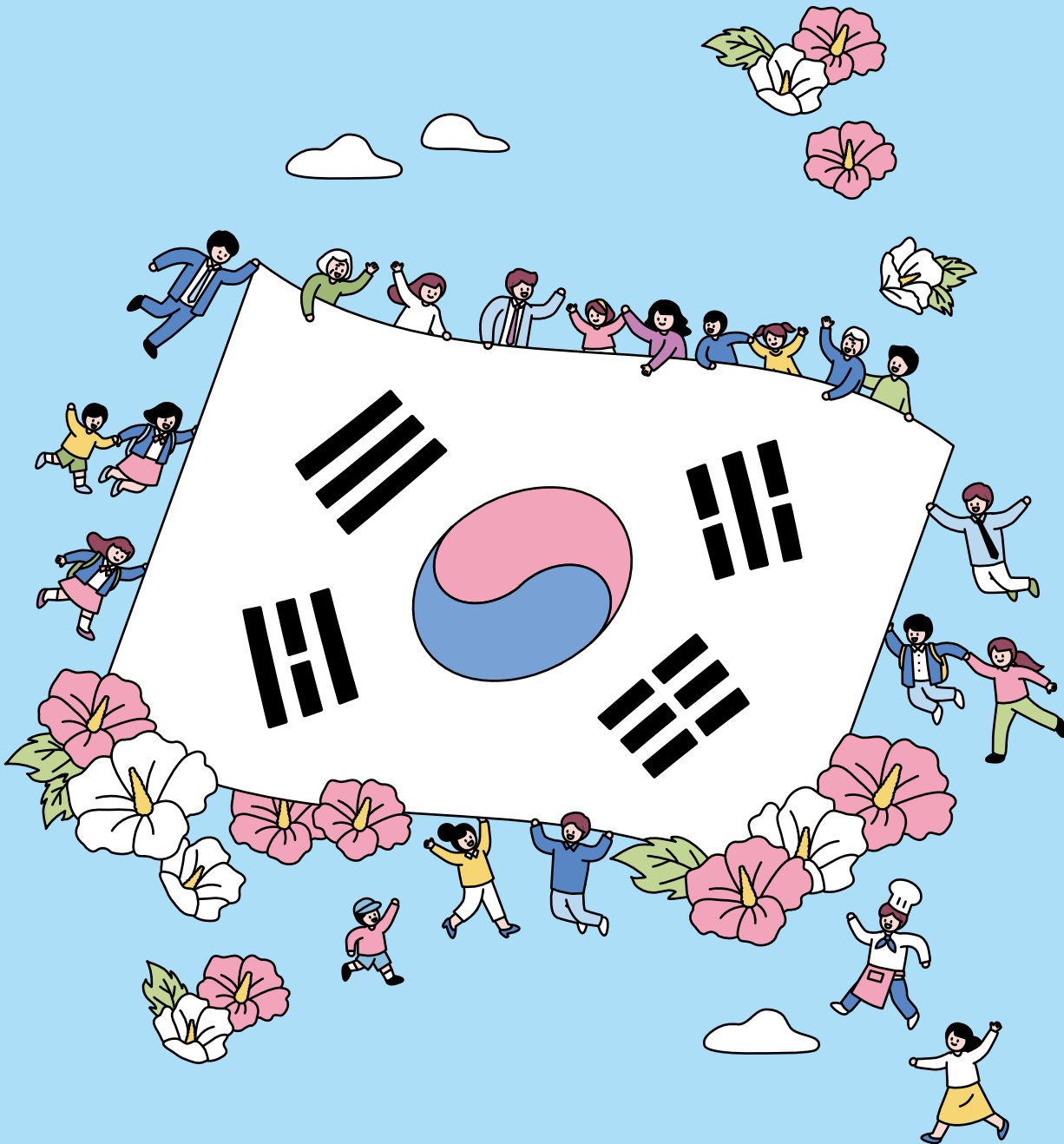


N. 민주사회

☑ 20대 핵심 추진 과제

16. 정치개혁

17. 사법개혁



16. 정치개혁



- ☑️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 끝내겠습니다.
- ☑️ 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경쟁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 ☑️ 특권 대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 ☑️ 미래를 이끌 청년들의 정치참여와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 ☑️ 대전환 핵심 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 ☑️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직무감찰의 실효성을 높ی겠습니다.
- ☑️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 국민이 만족하는 공무원조직을 만들겠습니다.
- ☑️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 ☑️ 진실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 끝내겠습니다.

-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추진
 - 대통령 임기 4년의 중임제 도입
 - 여·야 합의를 통해 개헌시 재임하는 대통령의 임기는 1년 단축하고, 중임제도 적용 배제
-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헌법에 명문화
- 청와대 기능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선
 - 비전 제시와 민의 수렴, 공약 이행과 이를 위한 당정과의 정책조정 기능에 집중
 - 유능한 인재풀 확보 및 철저한 인사검증
 - 제2부속실을 투명하게 운영하며, 대통령 배우자의 국민 통합과 국제 외교활동 지원
- 국무회의의 심의기능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 활성화
 -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행정부 운영
- 책임총리제 실질적 운영 추진
 -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 실질적 보장
 - 부총리 중심으로 각 부처의 자율성 존중
- 진영·출신지역·학벌을 넘어서 능력과 실력 중심으로 통합정부 국민내각 구성
-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하는 '국민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경쟁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비례대표 확대
- 비례대표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
- 기초의회의 2인 선거구 제한
 - 득표수에 따른 기초의회 의석 배분 추진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 국회의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견제장치 강화
 -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여 국회 국정감사 기능 강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추진
-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추진

특권 대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징계심사 신속처리
 - 윤리심사 안건처리 시한을 단계별로 법정화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및 무노동 무임금법 도입
 -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
 - 국회법이 정한 회의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구속 등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국회 의원 수당 등 삭감
- 국민도 보다 쉽게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
 - 입법청원 요건 완화 및 상임위 심사 지원 조직 신설 추진

미래를 이끄는 청년들의 정치참여와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 각급 선거 최초 출마 만 34세 이하 청년후보자의 기탁금 폐지 등 청년 후보자들의 도전 장벽 제거 추진
- 청년 후보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조정
 - 청년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선거비용 전액 보전
 -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미만인 경우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정당의 청년 후보자 추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청년추천보조금제 도입
- 성별·지역을 고려한 청년 공천 의무비율제 도입
- 청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 담당 수석비서관·청년 특임장관 신설
- 각 부처 청년예산에 실질적인 '총액배분 자율편성' 보장, 국민참여예산에 청년참여예산 쿼터제 적용,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 강화
- 청년 참여단 개편으로 '청년의회' 상설화

대전환 핵심 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전환 핵심 의제 논의 추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의 결정 실질화 제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직무감찰의 실효성을 높ی겠습니다.

- 감사원장·감사위원은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복수 추천되도록 선임절차 개선
- 직무감찰의 실효성은 제고하면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
 - 뇌물·품위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강화하되, 그 이외에는 직무감찰은 원칙적으로 회계부정 시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
-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거나 누락됐던 검찰청·기초지방정부·재외공관 등 사각지대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심사를 확대
- 감사 상대방의 변호인 조력권을 확대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원보장을 강화하는 등 권익보호 장치 보완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 요건 도입 등 제도 개선
- 중앙정부 국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
-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국민이 만족하는 공무원조직을 만들겠습니다.

- 공무원 전문직 및 개방형 임용제 확대, 중앙과 지방의 우수인력 교류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성과보상 개편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알맞은 확실한 상벌체계 마련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 강화
 -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의회 조직·운영을 규정하는 근거 마련
 - 지방议회의 입법·예산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무처 인력 확충
-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 지방의회 책임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감사 및 주민옴부즈만 도입
 - 주민참여예산 심사 확대 및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 보장
 - 주민참여예산 심사에 사회적 약자 및 지역·성·연령별 다양한 계층 참여
 - 지방의회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요건 완화 및 간소화 방안 마련

진실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과거사 발굴과 조사, 지원방안마련, 희생자 명예회복을 강구할 수 있도록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17. 사법개혁



- ☑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 국민 중심의 재판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 ☑ 수요자 중심의 '원스탑 법률조력'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 국민을 섬기는 법관에 의해 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 ☑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겠습니다.
- ☑ 전문 법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 검찰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 ☑ 벌금·몰수·추징금의 공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 ☑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분권을 강화하여 경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생명권·안전권·주거권·건강권, 자기결정권, 알권리 등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기본권을 헌법에 명문화
-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추진
 - 국가인권정책의 추진체계를 국무총리가 총괄하도록 제도화하고 국가의 인권 보호와 증진 의무 강화
- 헌법재판관(총 9인) 구성방식을 변경
 -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대법원장 지명(3인)을 폐지하고, 6인을 국회에서 선출
 - 법관이 아니라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의 다양화 추진

국민 중심의 재판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질화
 - 법관을 임기말까지 대폭 증원하고, 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 선발을 확대하여 모든 1심 재판부에 배치
 - 형사재판에서 자백사건 이외에도 양형만 다투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간이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신속성 확보
-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사법 편의성 강화
 - 형사소송 등 모든 재판을 조속히 전자화하고 법원-기관간 전자정보시스템 도입
 - 소액사건의 판결이유 기재 의무화
 - 판결서 공개 의무화 및 임의어 검색 기능 보강 등 개선
 - 재판과정에 대한 녹음·영상녹화 의무화 및 원격영상재판도 활성화
- 취약계층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인지대 등 소송비용 경감방안 마련

수요자 중심의 '원스탑 법률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국가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대국민 법률지원 서비스를 연계·통합하고 서민들에 대한 소송구조를 강화
-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공
- 국선변호 서비스 개선
 - 국선변호 서비스의 세부내용을 사건 유형 등에 따라 표준화하고 이용자 평가 강화
 - 국선변호인의 처우 개선 추진

국민을 섬기는 법관에 의해 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적인 사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개편 추진
-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 대법관 증원 등 상고제도 개혁
 - 비판사 출신 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추진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의 변론 공개를 확대하고 공개변론은 중계 의무화
-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법원에 대한 국민평가제도를 도입
- 법관·검사의 직권남용 등 업무 책임성 강화 추진
-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을 퇴임한 변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적정 수입료 기준 설정 검토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겠습니다.

■ 형사사건의 국민참여재판 개선

-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 판사가 피고인인 경우 국민참여재판 의무 실시
- 배심원 자격 확대 : 만20세 → 민법상 성인인 만19세
- 판사가 임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없도록 요건 및 기준 보완

■ 형사사건 이외의 재판(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대해서도 국민참여재판 적용 추진

■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한편, 재판부의 과중한 업무 부담 해소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확대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무죄 판결 시 검사 측 항소 제한

전문 법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노동관련 분쟁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노동법원을 설치

- 노동관련 민사 및 행정사건 등은 노동법원이 1심으로 재판
- 노동사건의 심리에 노동전문가 참여방안 마련
- 노동사건의 특성을 반영한 절차적 특례 마련

■ 해사사건 및 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법원 도입 검토

검찰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 수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절차법을 제정
- 수사·기소권을 분리,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에 대한 통제장치 강화
 - 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설치, 보완수사 명령제 및 공소유지 전담변호사 도입
 -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실질화
 - 시민 감시·참여 제도의 실질화
- 공수처가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역량 보강
- 검찰·공수처에 대한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외부평가를 반영하며,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 제고
- 검사에 대해서도 법조일원화를 확대하여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 선발

벌금·몰수·추징금의 공정성을 높ی겠습니다.

- 자산·소득 등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범칙금을 부과하는 벌금·범칙금 체계 도입 검토
- 약식절차에도 벌금형 집행유예제도를 도입
- 몰수·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등을 강화
- 독립몰수제 도입
 - 범죄자에 대한 유죄판결시 부가형으로만 선고가 가능한 몰수제도를 개선하여 범죄수의 환수의 실효성을 제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분권을 강화하여 경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국가경찰위원회를 경찰에 대한 실질적 통제기구로서의 권한과 역할 강화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경로 다변화
- 경찰조직 내 비위 등에 대한 감사청구권 및 징계요구권 신설
-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 해임건의권 부여

■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된 '경찰청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경찰청장 추천시 경찰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경찰청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추진

■ 자치경찰제 강화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에 다양한 직역 전문가 참여 확대
- 자치경찰에 유능한 인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및 인사 반영
- 신분과 사무가 일원화된 제주도 자치경찰 모델을 세종시로 확대하고 점차 전국화 준비

■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및 인사·예산의 독립성 강화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공약



Vision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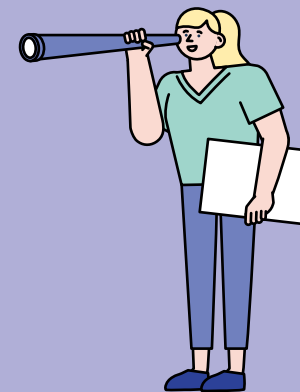
V. 평화안보

☑ 20대 핵심 추진 과제

18. 평화번영

19. 실용외교

20. 스마트강군



18. 평화번영



- ☑️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도화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습니다.
- ☑️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협력으로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 ☑️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 ☑️ 국가를 위한 헌신, 더 깊고 강하게 예우하겠습니다.
- ☑️ 평화 이행시대 남북 농업교류 및 평화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 남북 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및 글로벌 산림 복원을 주도하겠습니다.
- ☑️ 역사 왜곡과 전시 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인권과 평화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도화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습니다.

-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주도성 강화**
 - 남북,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진전의 선순환 추진
- **신뢰조성 및 적대해소를 통한 비핵화 협상 여건 조성**
 - 남북, 북미 정상간 기존 합의준중 및 남북합의 이행 체계화를 위한 국무총리실 내 '남북합의 이행 추진 점검단' 설치 등 이행 노력
 - 개성공업지구 등 민족내부 사업에 대한 유엔의 포괄적·상시적 제재면제 추진
- **스냅백(약속위반시 제재 복원)과 단계적 동시행동을 통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추진**
- **다양한 비핵화 협상틀 구성을 통한 비핵화 협상 진척 유도**
 - 북미양자뿐만 아니라 남북미중 4자, 남북미중일러 6자 등 다양한 협상틀 동시 가동 노력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및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
 - 상호 적대행위 중지 범위 확대 등 공정한 군비통제 합의 적극 추진
- **종전선언 추진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추진**
 -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중 협의체 구성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협력으로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 첨단산업 중심의 '한반도 평화경제 대전환' 추진

- 한반도 신경제구상2.0(에너지·자원벨트·동해권 관광, 서해권 첨단산업·교통벨트, DMZ 생태·환경벨트 조성 등), 북한 인프라 구축 협력 추진
- 4차 산업혁명·기후위기극복, 생태보호, 방역협력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한 남북협력 확대

■ 접경지역 글로벌 평화경제 클러스터 '국제평화경제지대(GPEC: Global Peace Economic Cluster)' 조성

-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접경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조성

■ 글로벌 공급망 남북협력 추진

- 희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 관련 과학기술 교류, 남북 공동 사전조사
- 지하자원 협력 남북 당국자간 회담 재개

■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대비한 기반 조성

-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등 남북관계 제도화
- 남북경협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지원, 통일경제특구 설치, 교류협력 전담 기구 설치 검토, 남북경협결제시스템 구축
- 남북미간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복원,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 남북교류협력 법률 체계 재조정

■ 남북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및 남-북-중, 남-북-러 연결 추진

- 남-북-중 고속철도 연결 대비 KTX와 SRT 등을 접경지역까지 운행하는 방안 검토
- 남북 접경지역 고속도로 신설 및 개선 추진

■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과 인도적 지원 추진

■ 농수축 산업, 경공업 등 전통산업 남북협력 추진

- 스마트 농장 시범단지 조성 및 양묘장 및 양식장 현대화 등 농수축 산업 상생협력 추진
- 북한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경공업 협력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민 공감 대북정책의 제도화

- 한반도 평화 및 통일 관련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지속가능 통일국민협약위원회' 설치
- 대북정책 수립과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 사전 브리핑
- 주요 남북합의서 국회비준동의 추진으로 남북관계의 제도적 기반 강화
- 해외협의회 활동 및 사무처 지원 조직 강화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 강화

■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남북 교류협력 권한 및 자율성 강화

- 지방정부, 민간단체의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통일+센터 설치 지역 확대

■ 청년·미래세대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 한반도 청년 정상회담(한반도 청년 SUMMIT) 개최
- 남북 대학생 역사유적 탐방단 상호 교환
- 공연·체육·예술·교육 등 분야에서 남북한 청년·미래세대 교류 기회 마련
- 2024년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공동개최 추진

■ 청년 평화경제 활성화 추진

- 평화·통일 관련 차세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확대
- 남북협력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육성 지원
- 남북경협기업의 청년 고용 지원

■ 남북 문화·예술·체육 교류 활성화 및 지식공유 추진

- 남북 국회회담, 남북 도시간 자매결연, 보건의료·역사·문화·사회·학술 등 다방면 교류협력 재개
- 남북 공동의 각종 기념행사 추진 및 문화·예술 공연 상호 방문 추진
- 북한 연구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공개 확대
- 남북 지식공유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학술기반 조성 및 공동연구 추진

■ 이산가족 문제 우선 해결

-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 및 증설
- 신청자 전원 이산가족 상봉 추진
- 화상 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 비대면 상봉 추진
- 이산가족 고향방문, 장묘이장, 고향장례 등 추진

■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북한인권 증진

-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추진
- 북한 주민의 경제적·사회적 여건 개선을 통한 실질적 인권증진 도모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공동 실현을 위한 남북 대화·협력 추진

■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 혁신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획기적 개선
-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 사회통합 제고

국가를 위한 헌신, 더 깊고 강하게 예우하겠습니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보상 확대 추진
 - 보훈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
 - 무명의 독립유공자 적극 발굴 등
- 보훈심사 전자심의제 확대로 보상심의 접근성 제고
- 일상 속 보훈문화 기반 조성
 - 정부 기념식에 국민 참여 확대
 - 국내외 현충시설 관리·운영 재정비
- 보훈대상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신개념 예방형, 맞춤형 보훈의료체계 구축
 - 지역 연계 보훈 주치의제 도입
 -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를 위한 방문진료사업 도입 및 마음치료센터 강화
 - 공정 조달체계 구축, 전문인력 확충 등 보훈병원 혁신체계 마련
- 제대군인 지원 강화
 - 군 복무 중 다친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상기준 완화, 상이등급 미달자 지원제도 추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기준 개선
 - 정부·지방정부 청년지원 사업에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의무복무자 우대
 - 성폭력 피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강화
 - 군복무 호봉인정 의무화
- 순직 경찰관, 소방관 등에 대한 지원과 예우 강화
-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 보훈대상자의 진료 접근성 확대
- 골프장 등 국가부지에 병원·요양원·임대주택·체육시설이 어우러진 보훈복지 종합타운 조성 추진 검토

평화 이행시대 남북 농업교류 및 평화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농산물 교류협력, 농업개발협력, 공동식량계획 등 단계별 교류 추진

남북 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및 글로벌 산림 복원을 주도하겠습니다.

- 산불·외래 산림병해충 방제 및 남북·동북아 협력 구축
- 북한·세계 산림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증진
-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역사 왜곡과 전시 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인권과 평화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 국무총리실 산하 '1325위원회' 설치

- 안보리 1325 결의안을 기반으로 한 여성·평화·안보 정책 수립
- 남북여성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한 성평등한 한반도 실현
- 해외 개발협력에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는 여성평화ODA 정책 추진

■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적·종합적 추진체계 마련

- 전시 인권·성착취 문제의 역사적 재조명을 통한 정의로운 해결
-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자료 조사·수집·관리, 연구 집적, 교육, 국제사회 연대 및 홍보

■ 일본군'위안부' 역사 왜곡 및 피해자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 수립

■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19. 실용외교



☑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 역지력과 유연한 외교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겠습니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전환에 대응할 동아시아 신질서 구축을 선도하겠습니다.

☑ G5 국가 비전을 뒷받침할 통상과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 청년의 국제무대 활약을 지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시대를 열겠습니다.

☑ 국격에 맞는 국제개발협력을 전개하겠습니다.

☑ 포용적 재외국민·동포 정책으로 한인공동체를 강화하겠습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 미중경쟁을 국익 증진의 기회로 활용하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외교 전개
- 한미관계를 포괄적 동맹으로 강화
- 한중간 실질협력 증진 및 한반도에서 중국의 긍정적 역할 유도
- 투 트랙 기조의 실용적 한일관계 구축
 -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발전시킨 새로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모델 추진
- 한러간 다양한 협력 잠재력의 발굴과 실현
- 주변 4강을 넘어 다양한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영역을 실질적으로 확대
 - 상호 존중과 호혜적 한·아세안 관계 지향
 - EU·영국과 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 호주, 인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과 실질협력 확대

역지력과 유연한 외교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겠습니다.

- 초당적 대북정책의 틀을 마련해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실질적 성과 도출
 - 단계적 동시 행동을 통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추진
 - 제재와 관여, 이익과 불이익을 유기적으로 배합하여 협상력 강화
 - 비핵화 과정과 평화과정의 시너지 있는 진행, 국제공조와 남북 대화의 상호보완적 운영
-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와 역내 군비경쟁 등 안보 불확실성 관리
 - 동맹기반의 역지력 및 한미일 안보협력 등 안보외교 강화
- 비핵·평화 진전에 따른 북한의 대외관계 및 국제적 경제지원 준비
 - ‘한반도 경제, 사회문화, 생명공동체’ 위한 국제협력 건인
 - 북한의 미·일 등과의 관계 확대지지 및 세계 경제 편입 지원

포스트코로나 시대전환에 대응할 동아시아 신질서 구축을 선도하겠습니다.

- 동북아 역내 포괄적 안보협력을 위한 다자협의체 추진
- 한미일, 한중일, 남북중, 남북러 등 중소규모의 다자협력네트워크 활성화
- 보건협력·문화예술·과학기술, 신안보, 공급망 등 동북아 공동과제 협력
- 동아시아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한반도 평화안보대화’ 추진
- 신형안보 위협으로부터 생명안전 보장 위한 국민안심 외교

G5 국가 비전을 뒷받침할 통상과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 대외경제안보의 핵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전화 추진
 - 글로벌 공급망(GVC)과 물류망의 다변화, 안정화를 추진하고,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한 경제안보정책 통할 기능 확립
 - 글로벌 공급망(GVC)과 물류망의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 구축
 - 소재·부품·장비에 중요한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 정책대화 강화
- 디지털 통상 리더십 강화를 통한 디지털 경제 주도권 확보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추진
- 신시장 FTA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 세계최대 FTA인 RCEP의 적극적 활용, 신남방·신북방·중남미·중동 등 신흥지역과의 양자 및 다자간 FTA 등 지속 확대
 - 기후변화·보건·서비스 등 신이슈들의 통상규범화 논의에 적극 참여
 - 녹색기후기금(GCF)이 명실상부한 국제적 기구로 발전하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 전개
- 해외취업·기업활동 지원 등 우리 국민들과 기업의 경제공간 확대를 위한 재외공관 역할 강화

청년의 국제무대 활약을 지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시대를 열겠습니다.

- 2030 젊은 세대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창의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외교환경 조성
- 청년들의 해외 경험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외교 강화
- 북방지역, 중남미, 중앙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등 K-컬처 취약지역 활성화 지원

국격에 맞는 국제개발협력을 전개하겠습니다.

- 국격에 걸맞는 국제개발협력 실현
 - 공적개발원조(ODA)예산 단계적 증액
 - ODA 전문 인력 양성
 - 국제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제기구 한국 유치 추진
-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선진화
 - ODA 양자 대 다자 실행 비율 조정으로 다자기구와 협력 확대
 - 시민사회단체(CSO)의 ODA 집행 지원 확대로 청년 고용 기회 창출
- 국제개발협력을 공공외교의 자산으로 활용
 - 디지털, 혁신 등 지식공유 지원을 통한 개발협력분야 소프트파워 확산
 - 신남방 지역 등 전략지역에서 해외 ODA기관과 협력 사업 추진
- 전략적 개발협력 추진
 - 개발도상국들이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린·디지털·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협력의 전략적 추진

포용적 재외국민·동포 정책으로
한인공동체를 강화하겠습니다.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
- 여행객·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해외안전대책본부' 확대 운영 및 영사조력 확대
- '세계 한민족 경제네트워크'와 국내간 연계 확대 및 '차세대 네트워크'의 정치력 신장 지원
- 재외국민의 재외선거 투표권 행사 편의 증진

20. 스마트강군



- ☑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강군을 건설하겠습니다.
- ☑ 북핵 및 WMD 대응 억제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 우주시대를 선도하는 국방 우주전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에 환수하겠습니다.
- ☑ 강력한 국방혁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방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강군을 건설하겠습니다.

■ 국방예산 효율화

- 첨단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 R&D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
- 국방·방산비리 원천 차단

■ 무기체계 첨단화 추진

- 유·무인 전투체계 발전과 감시·정찰 및 경계 체계의 지속 보강

■ 군구조 개편

- 지휘구조 단순화, 중복기능 통합 등 군구조의 합리적 개선
- 전투중심 조직으로 정비 및 비전투분야 민간영역 확대 추진
-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및 동원훈련 보상비 대폭 인상

■ 스마트 강군을 위한 대통령직속 민·관·군 국방혁신기구 설치

북핵 및 WMD 대응 억제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핵위기 시 협의절차 구체화 등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 추진

■ 북핵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첨단 억제전력 강화

- 탄도미사일 전력 고도화 및 다양한 정밀타격 능력 향상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조기 확보
- 한반도 전역 24시간 상시적 감시정찰체계 조기 구축
-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우주시대를 선도하는 국방 우주전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대통령직속 국가우주산업전략본부와 연계하여 국방 우주전력 강화 추진
 - 작전영역 확대 및 우주위협 증가에 대응 가능한 우주전력 확충
 - 민군 기술이전으로 우주산업 활성화
- 국가 우주방위를 전담할 우주사령부 창설 추진
 - 육·해·공군의 우주전력 통합 활용과 우주작전 지휘통제체계 확립
 - 군 우주자산의 전문적·효율적 운용을 위한 국방우주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에 환수하겠습니다.

-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 강화 및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완료

강력한 국방혁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방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방개혁 2.0 수정·보완을 통해 더욱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
 - 각군 합동성에 기반한 군구조, 방위사업, 효율적 국방운영 및 책임성 있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추가 개혁과제 발굴 및 실행
- **국방분야 문민화 확대**
 - 국방부장관 문민화
 - 국방부 문민화 확대 및 방사청 문민화 직위 재조정
- **학군장교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2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
- **육·해·공군 현행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독립시킨 준4군체제로 개편 추진**
 - 현행 해·강안 경계 임무 육군 전환, 상륙작전·신속대응부대 임무 수행
 - 해병대사령관 직위 등 지휘관리체계 개선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국민개병제 하에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에서 택일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 징집병이 복무하는 기존 숙련 및 고기술 직위를 부사관과 군무원으로 대체
- **간부중심 병력구조로 변화 및 인적 준비태세의 질적 강화**
 - 징집병 15만 명 감축,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5만 명, 군무원 5만 명 등 전문인력 증원
 - 5만 명 민간위탁 확대로 국방 인력구조 혁신
 - 중간간부인 소령 계급 및 부사관 정년 단계적으로 연장
- **부사관 우수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충원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 임기제 부사관제도와 연계하여 장기복무 비율 확대
 - 안정적이고 전문화된 초급간부 육성을 위해 부사관 전문학과 확대
 - 급여 이외에 퇴직 시 사회정착지원금 지급, 복무 중 야간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사회진출을 위한 경력 인증제도 확대 등
- **5년간 군무원 5만 명 증원**
 - 다양한 민간인력 확보로 국방 행정 분야의 전문성 확보, 현역병이 수행중인 비전투 분야에 동일한 규모의 우수 민간인력 투입으로 국방역량 대폭 강화
 - 군무원 모집 시 지역균형 선발 인원 확대 추진
 - 경력직 군무원 채용 확대
- **징집병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
 - 개인의 병역부담 완화 및 국가 인력 활용 효율화를 위해 의무복무기간은 전문가 등 국민 의견 수렴 후 점진적으로 결정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병사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 이상 지급
- 의무복무자 상해보험 등 의료보장 강화
- 2030세대의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및 공감형 복무여건 현대화 추진
 - 주기적 장병급식 실태조사 제도화, 군 식당 민간인 직고용을 통한 직영 및 민간위탁 확대
 - 생활관을 2-4인 소인실로 전면 개선
 - 수익계약 형태의 피복구매 등 경쟁계약으로 확대 및 품질 개선
 - 모든 병사에게 다양한 자기계발 기회 제공 및 E-BOOK 포인트 등 비용 지급
 - 군복무 중 대학 취득학점 확대 및 학점인정제 참여 대학 확대를 통해 '최소 1학기 군에서 이수'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입대장병 및 가족의 교통 편의를 위해 KTX 훈련소역 설치 추진
- 간부의 신분·생애·복무주기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및 보상 체계 추진
 - 기간부에 대한 민간주택 임차지원 지역 제한 해제 추진
 - 미혼(초급) 간부에 대한 민간주택 임차지원 확대로 안정적 복무여건 마련
 - 독신 간부 숙소 통합 및 고급화로 임무 전념 여건 마련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 전세자금 지원 확대,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
 - 맞춤형 복지, 출산지원금, 격오지 근무수당 등 특성에 따른 수당 및 처우 현실화
- 군무원·군인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강화
 - 격오지 군무원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관사 및 주거지원 확대
 - 육아·자녀교육, 심리상담, 취업 등 군인 가족 복지 확대
- 불공정한 군 진급체계 개선
 - 출신별로 이원화된 진급 체계 일원화
 - 선호보직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인사위원회 등 규정 정비

- 군대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 및 장병 인권 보호
 -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 직속의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설치
 - 군 인권보호관 역할 및 권한에 대한 독립성 보장
 - 군 성범죄 연례보고서 발간 및 공개
 - 2차 가해 처벌 및 2차 피해 대응체계 강화
 - 군대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및 '신고 전 지원제도' 도입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하겠습니다.

- 국방 관련 자료 및 기록 개방 추진
- 일반 국민 및 민간 전문가의 국방정책 참여 확대
 - 국방 주요 의사결정 체계에 민간 전문가 참여 비율 강화
- 전력증강 사업에 대한 국민 검증 확대
- 민·군 교류 확대를 통한 상생 협력체제 강화
 - 군 시설 중 개방이 가능한 복지·체육시설 등 민간과의 공유 확대
 - 국방 R&D 시설 및 장비의 산·학·연 공유체계 구축, 국가 전체의 R&D 역량 강화





1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습니다.

- 가상자산 소득 과세 도입 1년 유예



2 밤낮없는 오토바이 소음, 이제 그만!

-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 배달기사 보호 위해 유상운송보험 확대
- 전기이륜차 조기 확대, 내연기관 이륜차 전환 지원



3 전국민 휴대폰 안심 데이터, 무료 제공!

- 휴대폰 기본 데이터용량 소진 시, 생활 필수서비스 이용 위한 '안심 데이터' 도입



4 면접 준비에 48만원, 실화입니까?

- 청년면접 지원 서비스 도입
- 공공부문 면접 수당 지급 의무화
- 면접 수당 지급 중소기업 인센티브 부여



5 게이머 여러분! 이제 '상무 e스포츠 선수단'에 지원하세요.

-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 e스포츠 선수단 신설
- 대학 e스포츠학과 확대 추진
- e스포츠 지원과 교육, 상담센터 도입 적극 추진



6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 모든 국공립병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지정
- 보훈대상자 의료비 부담 완화



7 천차만별 반려동물 진료비, 화나고 부담되셨죠?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 진료 항목 표준화,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제도, 진료 항목별 비용 공시제도 추진



8 아동학대, 영아살해, 더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 폐지로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 처벌
- 잔혹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배제
- 아동학대범죄 음주·약물 등 심신장애 형량 감면 제외



9 개인과 기관, 외국인 사이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등 자본시장 불공정을 해소하겠습니다.

- 기관 외국인, 개인투자자간 공매도 차별 금지
-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 탈법 방지, 소액주주 권리 강화
- 대주주 탈법 방지 위한 특사경 대폭 확대, 적극적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등 제도 개선



10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 하교 추진 및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과밀학급 복합시설 건립, 교사 등 인력 총원 추진으로 교육환경 개선
- 교육지원청·지방정부 협력 통해 방과 후 오후 7시까지 초등돌봄 제공





11 산부인과는 부인만 치료?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의료접근성 높이겠습니다.



- 산부인과 명칭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 혼인·출산·연령 관계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환경 조성

12 '변형카메라 몰카 범죄' 이제 그만!



- 불법촬영 신고 플랫폼 마련
- 불법촬영 탐지기 개발·고도화
- 고성능 탐지 장비 공급 및 개인휴대용 탐지기 보급 등 불법촬영 탐지 인프라 구축
- 변형카메라 관리체계 구축 및 이력정보시스템 도입

13 1년 기다려도 대답 없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 대폭 확대로 해결하겠습니다.



- 전기차 보조금 대상 대폭 확대로 전기차 생산 증가 유도
-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 대중교통수단 단계적 전환 신속 추진
-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에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 등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14 플랫폼 수수료는 온라인 임대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부과 수수료 투명하게 공개
-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적정성 점검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15 동네슈퍼 사장님들! 대한민국 '배달특급' 서비스로 변창하세요.



-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 전국 확장
- 전국적 온라인 배송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상권별 맞춤형 협력모델 발굴

16 제2의 머지포인트 먹튀,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로 예방하겠습니다.



- 머지포인트와 같은 미등록 업체 형사처벌 강화 및 등록 확대
- 이용자 예탁금 별도 관리로 파산 시 이용자 우선 지급
-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한 범부처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17 아파도 꼭 참고 출근? 상병수당으로 쉴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모든 경제활동인구 대상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

18 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해 한 푼이라도 더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전국 확대로 불법사채업과 기획부동산 단속 확대
-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 활용 및 경찰 전담인력 확대, 해외 수사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협력으로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강화
- 통신사 및 금융회사의 피해예방 의무 및 책임 강화
- 가해자 처벌 수위와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19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장애의 장벽을 없애겠습니다.



- 교통, 건축, 도시, 제품, 환경 등에 종합적·체계적 '유니버설 디자인' 법제화
-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 시행으로 기업참여 유도

20 딥페이크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 악의적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구입·저장 강력 처벌
- 딥페이크 식별 기술 개발과 검찰·경찰·선관위의 역량 강화
- 딥페이크 사기·유포 교육 등 대응 능력 강화
- 악의적 딥페이크 가짜영상 방지위한 민간 자율규제 강화



21 소비자 알 권리·국내 농업 경쟁력 위해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유전자변형 원료 사용포함 GMO완전표시제 도입

22 부모님에게 등 떠민 등하굣길 안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사회적 일자리 활용 등하굣길 교통안전 대폭 강화
- 학교 신설 시 설계 단계부터 안전보장 통학로 설치 의무화

23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및 전담조직 설치
- 불법 개설자 형사처벌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 비급여 진료비용 몰수·추징
- 자진신고·내부고발자 면책 및 신고자 포상 확대

24 '제대로 된 한 끼', 아동급식 사업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확대
- 아동급식카드와 일반체크카드의 디자인 통일
- 아동급식 지원 단가 인상

25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로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겠습니다.



- 확률형 게임 아이템 구성확률 및 기댓값 투명 공개
- 사행성 부추기는 다중 뽑기 원칙적 금지
- 게임사의 확률 조작 및 고의적 오류 확률 제시에 대한 처벌

26 동물보호소 가면을 쓴 신종 핏삽을 근절하겠습니다.



- 동물보호소를 일반 반려동물 판매업과 구분 및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 금지
- 영리 목적 파양 및 입양 중개 금지

27 시세조종, 주가조작 근절!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습니다.



- 처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가조작 불법이익 환수 과징금 제도 도입
- 자본시장 참여제한,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 제재 도입
-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대폭 확대로 악성 주가 조작 범죄 신속 대응

28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구매목표'를 임기 내 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공공조달시장 '혁신제품구매' 임기 내 5%로 확대
- 우수 R&D 제품 공공구매 우선 지원
- 4차산업 혁명 관련 제품 공공구매 우선 지원
- 정부 수의계약으로 실적 보장해 수출 경쟁력 강화
- 중소·벤처기업 신기술 촉진

29 더 늦기 전에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배달·포장용기 다회용기 보급 확대 통한 일회용품 사용 축소
- 공공선별장 확충 및 현대화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 일회용품 및 포장재 재질 단일화로 분리수거 및 재활용 편의 증대
- 착한자판기(PET·캔 무인회수기) 보급 확대로 재활용품 수거율 증대

30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시스템'으로 청년 구직자의 발품을 덜겠습니다.



- 단 한 번 경력등록으로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한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시스템' 구축



31 난임부부의 시술 부담을 낮추고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난임시술별 횟수 제한 없애고, 기준은 <총 지원 회차내>로
- 필수 약제비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 난임 관련 남녀 기초검사를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
- 난임부부 정서·심리적 지원 강화

32 지원대상 확대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겠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로 에너지빈곤 사각지대 해소
- 노후 주택 단열, 냉방기기 지원 등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확대

33 피임과 임신 중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습니다.



- 안전한 피임을 위해 현대적 피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 상의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 적용
- 안전한 성·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 구축

34 학업에 더 전념하도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학부생 및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 확대
- 졸업 성적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 학자금 대출 원리금 탕감
- 연 300만 원 생활비 대출 한도액 500만 원으로 증액

35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으로 산모, 아기 모두 안심하고 돌보겠습니다.



- 정부 지원으로 취약지역부터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
- 시설 기준 및 서비스 표준화로 민간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개선

36 HPV 백신, 남녀 모든 청소년 대상 무료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 만 12세부터 17세 이하 모든 남녀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지원
-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변경해 남녀 청소년 모두의 건강보호
- HPV 백신 접종 홍보 강화

37 우리 아이들 제때 잘 자라도록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전국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무료 선별검사 시행 후 상담·치료 연계 지원
- 발달검진 정밀검사 진료 및 상담 비용 지원 확대
- 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지원 전문상담원 채용과 다양한 발달 프로그램 운영 지원

38 일과 휴식, 지역경제도 살리는 1석3조 '워케이션 센터'를 보급하겠습니다.



- 소멸 위기 지역 중심으로 일과 휴식, 관광 연계형 '워케이션 센터' 설치
- '워케이션 센터' 설치 예산 지원 및 이용자 지역상품권 할인 구입, 기업부담 '근로자 휴가지원비' 지원

39 일하는 어르신에 국민연금! 깎지 않고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 단계적 조정

40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 경기도 '강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전국 확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 연계 강화
-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 임차인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시스템 구축



41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현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 및 강화
- 소규모·영세사업장 배출 저감 지원사업 대폭 확대
- '스마트 클린 도시' 확대 조성
- 한중 대기질 개선 협력체계 점검 및 '아·태 다자간 대기협정' 추진 등 국외 유입 문제 적극 대응

42 과도한 요금 억제, 유사회원모집 금지로 대중골프장 운영을 바로잡겠습니다.



- 대중골프장 회원제식 운영 근절
- 대중골프장 운영심사제 도입 등으로 일방적 요금 인상 억제 및 적정 수준으로 관리

43 생활용품, 고쳐서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주요 생활용품 부품 보유·판매 기간 연장
- 부품 보유와 수리 편의 위한 기업의 제품 규격화 지원
- 수리용 부품 보유 의무 및 보유 기간 확대, 수리 매뉴얼 보급 등 전자제품, 가전제품 소비자 수리권 확대

44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 미성년 상속인 보호 위한 성년 후 한정승인 제도 도입

45 개성있는 타투, 합법화 하겠습니다.



-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 조속 처리
-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 위한 위생관리체계 구축

46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탈모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

47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수산물 안전과 국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조사 강화 및 국제기준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 방사능 검사 장비·인력 등 안전 관리 인프라 대폭 확대하여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등 차단

48 병사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줄이겠습니다.



- 기존 20% 요금할인을 50%까지 확대

49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임플란트 65세부터 2개에서 4개로 건강보험 확대 적용
- 임플란트 60세부터 2개 건강보험 적용
- 치아가 전혀 없는 분들에게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50 스타트업 특허심사 기간을 3개월로 확 줄이겠습니다.



- 스타트업, 혁신기술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
- 심사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일반 심사기간 절반 단축
-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심사 인재 양성

51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 가상자산 투자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 가상자산 손실 5년간 이월공제



52 **군경력 호봉인정 의무화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훈련비 인상!**



- 호봉 및 임금 산정 시 '군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
- 동원예비군 훈련기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 동원예비군 훈련 보상비 일 20만원으로 대폭 인상

53 **KTX-SRT 고속철도를 통합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강남(수서)에서 창원·포항·전주·여수로 환승 없이 한번에
- KTX 요금 10% 인하, SRT와 일반열차(새마을·무궁화호) 환승할인 적용
- 통합 수익으로 적자보전, 시설개선 등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54 **나이 속인 음주청소년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인하!**



-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일명 '이태원 클라쓰법') 마련
-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 면책
-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55 **섬 주민 '천원 여객선(월5회)', 귀향객도 명절 맨 천원**



- 섬주민들의 이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요금 부담 완화
- 명절 귀향객에게도 연 2회 '천원 여객선' 제공

56 **어디서든 터져요 모든 버스, 지하철에 5G 와이파이**



- 버스·지하철 '5G 슈퍼와이파이' 구축으로 끊김 없는 데이터 이용환경 조성

57 **운동한 만큼 쌓은 스포츠 포인트, 지역화폐로 돌려드리겠습니다!**



- 운동 참여시간을 스포츠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로 환산해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
- 개인의 운동 이력을 등록하고 관리하며, 근처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검색이 가능한 건강운동 플랫폼 구축

58 **고속도로 졸음쉼터 태양광 그늘막 설치!**



- 고속도로 그늘막 설치로 편안한 휴식 및 졸음운전 예방
- 태양광 발전패널 그늘막 활용하여 예산 절감 및 전력 활용

59 **충간소음 제로 사회**



- 소음기준·현장진단 강화
- 112신고에 충간소음 추가, 전문가 출동 긴급중재서비스
- 충간소음 차단성능 공개, 소음차단형 주택에 용적률 인센티브

60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 보상 지역화폐 지급**



- 면허반납자의 혜택 선택권 확대 및 편의성 개선
- 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경제에 기여 확대

61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분야 수어통역 시스템 개선**



- 의료·법률 등 전문 분야 수어통역 교육과정 마련
- 수어통역센터 배치 확대
- 의료기관, 관공서에 전문수어통역사 배치



62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 병설유치원·초등저학년도 함께 이용



- 1곳당 1.4대 수준인 국·공립 통학버스 운영을 평균 2대까지 확대
- 초등 병설유치원 통학버스는 초등저학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63 한부모가족증명서 소득 기준 삭제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80% 확대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 소득기준 삭제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64 공정한 자동차세 구현
배기량 → 가격 + CO₂ 배출량으로 개선



- 가격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되 전기 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게 설계
- CO₂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은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

65 공인탐정 자격증 도입



-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인탐정 자격증 제도 도입
- 실종자 수색, 물건의 소재 파악, 개인의 권리보호나 피해 조사 등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

66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근절, 대학 비진학 청년 지원 확대



- 5인 미만 위험·위해 사업장 현장실습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의 위험·위해 사업장 현장 실습 금지
- 대학 비진학 청년 '평생교육바우처' 확대

67 의료취약지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 의사나 한의사처럼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추진
-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질 향상

68 어르신 위한 파크골프장 대폭 확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건립



- 전국 시군구에 파크골프장 1개소 이상 건립
- 유희부지 확보와 건립에 지방정부 지원과 협조

69 학생 건강검진 2년으로 단축 건강보험공단 생애주기별 관리 통합



- 학생건강검진 주기를 2년에 1회로 변경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 편입, 전생애 걸친 체계적 관리

70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



- 아동·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지역보건소·의료기관 연결하는 아토피 프리(free) 네트워크 구성

71 부과 기준 현실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 기준 7,000만 원으로 상향
- 재산공제액 임기내 1억 원까지 확대



국민제안 소확행	
연번	내용
1	졸음쉼터에 차량 그늘막 설치로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	비싼 차는 무겁게, 저렴한 차는 가볍게! 자동차세를 바로잡겠습니다.
3	번거롭던 금융기관 주소 변경, 한 번에 해드리겠습니다.
4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5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시 지역화폐로도 지급하겠습니다.
6	층간소음의 고통, 이제 해결해야 합니다.
7	소상공인·자영업자 무분별하게 괴롭히는 악성리뷰 퇴출하겠습니다.
8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사립 수준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9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으로 더 이상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	금융·경제는 학교에서 정규교과목으로 배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11	국가장학금 투명하게 개선하고, 더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12	대학 비진학 청년의 교육비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13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의 편리한 이용으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명확행	
연번	내용
1	사립학교 공정 채용,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열어주신 길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2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자명한 상식,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3	전 국민이 교통기본권을 보장받는 그 날까지, 저항을 감수하고 대안과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4	먹거리 그냥드림 사업 확대로 어려운 분들께 힘이 되겠습니다.
5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단가를 인상해 모든 아이들의 '제대로 된 한 끼'를 책임지겠습니다.
6	반려동물 가족시대, 국민의 행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7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8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성과를 바탕으로, 땀의 가치를 공정하게 대접하는 노동 존중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9	반칙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가짜 건설사',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10	취업 앞으로 경력 제대로! 고용질벽 해소를 위한 첫걸음, 공공과 민간을 잇는 취업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11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군 복무 상해보험'으로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12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지 않게, 불법 사채 근절 추진했습니다.
13	성남시의료원 흉부외과 박준석 과장님의 응원을 마음에 새기며, 국민을 살리는 정책을 펴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14	'깔창 생리대'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편복지'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5	경기도에서 시행한 '극저신용대출사업'은 절벽 앞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16	위기 아동 발굴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 경기도에서 시행한 '아동의 안부를 묻다' 전국 확대를 검토합니다.
17	'전자정부' 시대에 관공서에 내야 할 서류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18	아파트 노후화 준비해야 합니다. '아파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로 경기도민의 주거의 질을 높였습니다.



SNS 발표		
연번	형태	내용
1	SNS발표	소부장 자립, 차기정부가 이어가야 합니다.
2	SNS발표	비리 낭비 없애자는 말을 국방비 축소 주장으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3	SNS발표	공공기관 이전 취지 훼손하는 특별공급, 폐지해야
4	SNS발표	소상공인 지원은 두텁게,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5	SNS발표	민생 위한 정책, 필요하면 얼마든지 쓰십시오.
6	SNS발표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은 나라
7	SNS발표	백신주권의 길, 선도국가 향한 도전, 힘껏 응원합니다.
8	SNS발표	흔들림 없는 사학개혁 하겠습니다.
9	SNS발표	김두관 후보님의 '5극 2특'체제 공약, 민주당이라는 강물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10	SNS발표	이낙연 후보님의 ESG 4법 공약, 새 시대의 규범이 될 것입니다.
11	SNS발표	정세균 후보님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 이루겠습니다.
12	SNS발표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지원, 사회적 표준을 만들겠습니다.
13	SNS발표	얼마나 더 죽음이 이어져야 할까요? 더 늦기 전에 바뀌어야 합니다.
14	SNS발표	사학법 개정안 통과, 거침없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15	SNS발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조기지급을 긴급 제안합니다.
16	SNS발표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라니요? 너무 위험한 주장입니다.
17	SNS발표	이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18	SNS발표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과점, 공공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19	SNS발표	익숙한 반대, 익숙한 연대, 개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20	SNS발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SNS 발표		
연번	형태	내용
21	SNS발표	강력범죄·성범죄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2	SNS발표	추미애 후보님의 '모든 정부 데이터의 국민공개' 약속,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23	SNS발표	공정하고 평등한 일터를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하겠습니다.
24	SNS발표	인구감소 시군구 66%,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25	SNS발표	이율 20% '셀프특혜대출'하고 그걸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국민연금식 ESG 경영입니까?
26	SNS발표	데이터 주권, '모두의 것을 모두가 누리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갑니다.
27	SNS발표	'공정 채용' 기회가 확대될수록 희망도 커집니다.
28	SNS발표	차기 정부에선 돈과 목숨을 교환하는 '위험의 외주화'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29	SNS발표	세계 7번째 SLBM 성공, 자주국방 실현에 성큼 다가선 쾌거
30	SNS발표	'임금체불 근절', 노동자의 시름을 덜어드리겠습니다.
31	SNS발표	악의적 왜곡으로 선거에 개입한 언론의 중범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32	SNS발표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하겠습니다.
33	SNS발표	대출로만 89억 원 타워팰리스 산 중국인? 경기도에서 시행한 '외국인 토지·주택 거래허가제' 전국 확대해야
34	SNS발표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자주국방
35	SNS발표	현실화되는 에너지 위기, 에너지대전환을 통해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36	SNS발표	재외동포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37	SNS발표	오래된 숙원 '1호선·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일을 되게 만드는 사람에게 맡겨주십시오.
38	SNS발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39	SNS발표	개발이익 국민환원제부터 분양 원가 공개까지, 이번 대선을 토건부패세력과 그들과 한 몸이 되어 특혜를 누려온 세력까지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40	SNS발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SNS 발표		
연번	형태	내용
41	SNS발표	분양원가 공개, 정보공개청구도 필요 없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42	SNS발표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죽음이 되지 않기를
43	SNS발표	부동산 규제는 더 강화하되, 실수요자는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44	SNS발표	76주년 경찰의 날을 축하합니다.
45	SNS발표	아동의 생존이 달린 '양육비' 채무 해결
46	SNS발표	사회적경제의 확산으로 포용적 전환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7	SNS발표	'공정 채용' 확대·강화로 기회와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48	SNS발표	실손의료보험 청구, 불편하셨지요?
49	SNS발표	'누구나집'으로 내 집 마련 꿈을 현실로
50	SNS발표	학생선수들이 학습권과 운동권을 함께 누리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51	SNS발표	카카오페이 먹튀 철저히 조사하고 예방하겠습니다.
52	SNS발표	북한의 조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53	SNS발표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 중단 촉구' 대선후보 공동선언을 제안합니다.
54	SNS발표	부자 감세 반대
55	SNS발표	연기금 주식시장 안정책임, 물적분할후 재상장 금지, 주식공매도 형평성 확보, 주가조작 시장교란 엄벌
56	SNS발표	일본은 전쟁과 강제동원 유물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즉시 철회해야
57	임인년 국민과의 약속 1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58	임인년 국민과의 약속 2	위기극복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59	SNS발표	증오 아닌 통합, 전쟁 아닌 평화, 유능한 경제대통령
60	임인년 국민과의 약속 3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는 개혁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SNS 발표		
연번	형태	내용
61	임인년 국민과의 약속 4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62	SNS발표	임기 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63	유능한 경제 대통령1	정용진 부회장님에게 보내드린 감사 편지 이야기
64	SNS발표	문화를 탐하지 말라. 문화공정 반대
65	유능한 경제 대통령2	힘들었던 'CJ라이브시티 착공'의 기억을 떠올리며, 부산의 미래를 그립니다.
66	유능한 경제 대통령3	120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의 경험을 가지고, 대한민국 곳곳을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67	SNS발표	140만 한국노총지지, 노동존중사회로 보답하겠습니다.
68	SNS발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9	유능한 경제 대통령4	삼성 부장님이 중소기업 작업환경을 스마트공장으로 개선해준다면?
70	SNS발표	균형발전 역행하는 포스코의 서울 본사 설립을 반대합니다.
71	유능한 경제 대통령5	글로벌 기업 HP의 전 대표가 4억 달러 투자하며 감사패까지 준 이유는?